

국립국어원 2007-01-41

- 결과보고서-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년 12월 31일



## ▪ 차례 ▪

### □ 연구 경과

1. 연구 경과-----3

### □ 기초 발표

1.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의 의의와 전망-----17
2. 남북학술교류의 현황과 과제-----24

### □ 연구 발표

1.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및 연구 현황-----41
2. 북한 古書의 연구와 조사방안-----61
3.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 방안-----79
4.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현황과 고문헌자료 협력방안-----107
5. 남북 문화재 교류전의 사례 연구-----137
6. 남북교류사업의 특수성 시론-----147
7.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의 방안-----159

### □ 종합 토론

1. 종합 토론-----189

### □ 부록 - 자료

1. 《조선고전해제》(1) 수록 문헌 목록-----1
2. 《조선고전해제》 수록 문헌 목록(초안)-----7
3. 북한관련 고문서 목록 및 자료-----24

\*) '부록-자료'는 세쪽번호로 시작하였음.



· 연구 경 과 ·



---

연구경과





## 연구경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연구에 착수하였다.

###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이 사업은 대북 학술교류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게 될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이하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 '사업'은 남북학술교류 사업의 하나로써 남북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증진시킴으로써 민족의 동질감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학술적 토대구축의 의미를 갖는다.
- 특히 '사업'은 한국학 연구의 토대사업으로써 남한만의 불완전한 한국학을 넘어 온전한 의미의 한국학을 성립·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은 한국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2) 지난 10월 초 남북한의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하여 역사와 언어 등의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인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신속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다.

3) '사업'은 대북사업이라는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온전한 한국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학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사업'의 범주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 내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이며, '사업'의 진행에 따라 남북한 한글문헌 교류전시회 및 학술행사, 자료집의 간행 등을 통하여 성과를 공개·공유한다.

- 이 '사업'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국립국어원과의 협력체계를 모색한다.
- 남북한 고문헌 자료의 교류와 확산을 위해 남북한 한국학 연구자들의 상호교류와 성과의 공개·공유 방안을 모색한다.

## 2. 사업기간

- 2007년 11월 12일에서 2007년 12월 31일

## 3. 연구진 구성

- 연구책임자 최진욱 등 14인-

### 1) 연구책임자

- 최진욱(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장서각 관장)

### 2) 공동연구원 : 11인

-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최용기(국립국어원 국어진흥부장)
-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강석승(통일부 정책분석팀장)
- 오영찬(국립박물관 학예관)
-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부연구원)
- 허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 이준석(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팀장)
-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3) 연구보조원 : 2인

- 장을연, 곽낙현(이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 4. 사업경과

## 1) 사업개시 및 기초사항 점검

- (1) 회의 일시 : 2007년 11월 15일(목요일)
- (2) 회의 대상 : 최진옥(연구책임자), 전경목·정수환·허원영(공동연구원)  
곽낙현·장을연(연구보조원)
- (3) 회의 내용
  - 집필 통보 :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 공청회 관련한 일정 및 장소 섭외 등 논의

## 2) 제1차 연구자 회의

- (1) 회의 일시 :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 오후5시 ~ 9시
- (2) 회의 장소 : 대우센터빌딩내 지하1층 만복림 (753-5693)
- (3) 참석 인원 : 최진옥,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4) 회의 내용
  - ① 연구책임자 사업계획서 설명 향후 연구 방향설명
    - 자료제공 : 『북한역사학 논저 국내소장처 현황』국사편찬위원회
  - ② 공청회 일정 및 발표주제 논의(전체 연구자)
    - 공청회 일자 : 2007년 12월 18일(화) 10:00 ~17:00
    - 공청회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협조의뢰 - 국립국어원)
    - 공동주최 :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립국어원
    - 건 의 사 항 : 각 기관 홍보 담당 및 개별 신문사 접촉
  - ③ 연구원 제안사항
    - 전경목 : 기초사업 복측 실무 협상 단체 선정  
(김일성 종합대학, 사회과학원내 역사연구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 강석승 : 각 기관 연구자 북한 자료 협조 및 제안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등)
    - 최용기 : 기초연구를 통한 북한연구 활성화 기대  
(겨레말 사전팀 협조 의뢰 및 자료 제공)
    - 오영찬 : 북한내 문화재 전문가 현황 파악 필요  
(리승혁-고구려사 전문가, 북한내 국보·준국보 현황 등)
- (5) 연구주제 선정
  - 기초발표 1 최진옥 :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의 의의와 전망
  - 기초발표 2 이서행 : 남북 학술교류의 현황과 과제
  - 제1발표 전경목 :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및 연구 현황
  - 제2발표 옥영정 : 북한 고서의 연구와 조사방안

- 제3발표 황문환 : 북한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방안
- 제4발표 허원영 :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현황과 고문헌자료 협력방안
- 제5발표 오영찬 : 남북 문화재 교류전의 사례연구
- 제6발표 강석승 : 남북교류사업의 특수성 연구
- 제7발표 정수환 : “남북 고문헌 조사·연구 사업”의 방안

### 3) 공청회 준비 및 실무자 회의

- (1) 일시 : 2007년 12월 5일 수요일
- (2) 참석대상 : 연구책임자(최진옥), 전경목·정수환·허원영(공동연구원),  
곽낙현·장을연(연구보조원)

#### (3) 회의 내용

- ① 자료집 제작 및 행사준비
  - 자료집 약 300부 제작, 제작자 사전섭외
  -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대여확인/ 중식섭외
  - 행사관련한 플렉카드 등 기물 구입
- ② 연구진행 점검
  - 12월 13일 12시까지 원고 제출 요청
  - 사회자 섭외 : 이승재(국립국어원), 안승준, 심재우(이상 한중연)
  - 토론자 섭외 : 권내현(고려대학교), 이근용(국민대학교),  
이문현(국립민속박물관), 이승철(청주고인쇄박물관),  
김문오·정희창(이상 국립국어원)

### 4) 자료집 제작 및 행사 준비

- (1) 일시 : 2007년 12월 14일 금요일
- (2) 참석대상 : 연구책임자(최진옥), 전경목·정수환·허원영(공동연구원),  
곽낙현·장을연(연구보조원)

#### (3) 회의내용

- ① 공청회 행사준비상황 점검
  - 자료집 제작의뢰여부 : 300부 제작 예정
  - 행사장 교통편 및 행사진행용품 구비상황(방명록, 다과, 플렉카드 등)
- ② 연구점검
  - 원고 제출 현황 점검 : 2007년 12월 17일 오전 9시 30분 제본의뢰예정

### 5) 행사 최종점검

- (1) 일시 : 2007년 12월 17일 월요일
- (2) 참석대상 : 연구책임자(최진옥), 전경목·정수환·허원영(공동연구원),  
곽낙현·장을연(연구보조원)
- (3) 회의내용
- ① 자료집 제작의뢰 : 300부
  - ② 각종 준비 상황 최종 점검

## 6) 공청회 행사 진행

- (1) 일시 : 2007년 12월 18일
- (2) 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 (3) 공청회 내용
- 09:30~10:00 등록 및 접수
  - 10:00~10:20 개회
    - 사회 : 이승재(국립국어원)
    - 인사말 : 오만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직무대행)  
이상규 (국립국어원장)
  - 10:20~10:50 기조발표
    - 기조발표 1 :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의 의의와 전망
      - 발표자 : 최진옥(한국학중앙연구원)
    - 기조발표 2 : 남북 학술교류의 현황과 과제
      - 발표자 :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 11:00~12:00 연구발표-1
    - 제1발표 :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및 연구 현황
      -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 제2발표 : 북한 古書의 연구와 조사방안
      -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 제3발표 : 북한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방안
      -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 12:00~13:30 중식 및 휴식
  - 13:30~14:50 연구발표-2
    - 사회 : 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 제4발표 :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현황과 고문헌자료 협력방안
      - 허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 제5발표 : 남북 문화재 교류전의 사례연구
      - 오영찬(국립중앙박물관)
    - 제6발표 : 남북교류사업의 특수성 연구

- 강석승(통일부)
    - 제7발표 : “남북 고문헌 조사·연구 사업”의 방안
    -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 15:00~16:00 종합토론
    - 사회 :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 권내현(고려대학교) 이근용(국민대학교)
    - 이문현(국립민속박물관) 이승철(청주고인쇄박물관)
    - 김문오·정희창(국립국어원)
    - 발표자전원
  - 16:00 폐 회
- (4) 참석자 : 각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 약 100여명 참석/ 발표문 배포
- (5) 발표요지 : 330쪽 분량의 발표문 300부를 제작하여 약 200부 배포함.
- (6) 공청회 요지
- 북한자료에 대한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향후 사업 추진을 제안 하였음.(‘종합토론’ 토론문 참고 요망)
  - 연구책임자는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

## 7) 제2차 연구자회의

- (1) 일시 : 2007년 12월 18일 (19:00-21:00)
- (2) 장소 : 한식당 큰기와집
- (3) 참석대상 : 연구책임자(최진옥)외 공동연구원 전원 및 연구보조원
- (4) 회의 내용
  - ① 사업평가
    - 성공적인 사업완료와 향후 발전적 계승이 필요함
    - 향후 연구자간의 지속적인 의견교환과 협력관계 유지
    - 유관 사업추진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함
  - ② 결과보고
    - 논고에 대한 수정 : 12월 24일까지 완료
    - 사업결과 보고는 2008년 1월 중으로 완료

▪ 기 조 발 표 ▪





---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의  
의의와 전망



# 남북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의 의의와 전망

최진옥(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 목 차 >

- |                         |                        |
|-------------------------|------------------------|
| 1. 남북 고문헌 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 3. 북한 고문헌 조사 연구 사업의 전망 |
| 2. 남북 학술교류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  |                        |

## 1. 남북 고문헌 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수십만 종의 문헌자료를 남겼다. 팔만대장경,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의궤 등은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고, 또 그에 버금가는 문헌들이 상당수 있다. 그간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개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와 수집, 정리, 간행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도 조사, 연구 대상 자료는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이 있다.

고문헌 자료는 역사성을 띠고 있으며 역사 연구에 모체가 되는 자료이다. 분단 후 우리는 북한 지역의 고문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북한 지역 연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제한된 자료와 역사 무대를 제대로 밟아볼 수 없는 여건 하에 우리 민족의 온전한 역사상을 확립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분단체제 하에서도 문헌 자료에 대한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1993년부터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학진흥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학 관련 연구기관들은 고문서를 비롯한 고문헌 자료의 조사, 수집, 목록, 해제, 탈초, 번역, 간행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한국학 연구의 토대가 확보되고 자료 접근이 용이해져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한국학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국내외적으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60년 가까운 분단으로 인해 남한만의 불완전한 성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문화의 온전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고문헌 자료의 조사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학계는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고문헌 자료 조사와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한의 고문헌 자료에 대해 개인적으로 기

울여왔던 관심을 결집시켜 남북학술교류의 장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 연구사업은 남북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 증진시키고 민족의 동질감 회복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온전한 한국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사업이라는 점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고문헌을 다루는 연구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고문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자리는 북한 고문헌에 대해 알고 하고 하는 노력이 표출된 것이며 이제는 알아야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다. 오늘의 공청회는 이러한 인식과 필요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한글자료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국립국어원과 고문서 수집과 정리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협력하여 북한 고문헌을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2. 남북 학술교류의 활성화와 기반 조성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 연구 사업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래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는 1972년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대화의 창이 열리는 듯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고, 1984년 북한 수해물자 지원,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15 공동선언」에 의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5년 12월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북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남북의 교류 협력은 순조롭지 못했다.

2007년 10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과 민족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 문화 교류협력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왔다. 남북 연결도로가 확충됨에 따라 2005년 이래 인적왕래가 크게 늘어났다. 인적 왕래의 증가와 함께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방송·문화, 체육, 종교,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보다 심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사 공동 복원, 민족전통문화 공동연구, 언어동

질성 회복, 국책연구기관 교류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법적인 여건이 조성됨으로 해서 정부를 비롯한 민간단체, 기업인, 학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학 연구와 관련된 교류 사업으로는 고구려문화전 개최, 북한 <조선향토대백과> 편찬·출판, 거래말 큰사전 공동 편찬, <남북학술용어집> 공동연구개발사업, 고구려 유적 남북공동조사 사업, 북한문화재 특별전 등이 성사되었다. 사업을 담당했던 기관으로는 남북역사학자 협의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어원 등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학술교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고문헌에 대한 조사나 연구사업은 없었다. 북한 고문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 고문헌이라고 하면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과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고문헌, 생산지와 관계없이 북한 지역에 관한 고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한에 전해지는 북한지역에 관한 고문헌과 고문서가 있지만 우리가 본 사업을 통해 관심을 가지는 주 대상은 첫째와 두 번째이다.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료를 접해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6.25 때 장서각 소장의 적상산본 조선왕조실록을 가져갔으며, 1980년대에 번역을 완료하여 <리조실록>을 간행한 바 있다. 실록 번역이 한창 진행될 때까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문헌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여기고 일찍이 문헌학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였다. 문헌자료의 수집, 편성, 문헌 자료의 원상 보존과 손상된 문헌 자료의 수복, 문헌 자료의 효과적인 이용과 문헌관 사업을 조선 문헌학의 과업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문헌자료의 범위는 일반 고문헌 뿐 아니라 과학 기술 문헌, 필름·사진·녹음 문헌, 금석류, 목판류, 직물류 등 특수문헌까지 다양하게 범주화하고 있다. 일찍이 문헌 자료의 수집 편성은 중앙 집중화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 (『력사과학』 1965. 6) 북한의 문헌자료들은 국가적으로 수집, 관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는 목적이 사회주의 건설에 이롭게 활용하자는데 있었다고 하나 그 목적을 위해서 고문헌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 보존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에서 <조선 고전 해제> 편찬을 준비하면서 제시한 수록 문헌 목록(초안)을 통해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995종의 전적이 소개되었다.(『력사과학』 1963. 4) 민족고전연구소가 민족고전에 대한 수집과 정리, 번역, 해제, 편찬 등의 학문적인 연구를 담당할 사실도 확인된다.(『력사과학』 1996. 4.)

그러나 그 성과는 남한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문헌의 소장처나 소장 목록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력사과학』 등 북한에서 발표된 각종 자료를 통해 단편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목록이나 해제, 자료집 등을 통한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8만대장경과 목판활자가 보존되어 있다는

묘향산역사박물관, 2백여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등에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의 고문헌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 사업은 외적으로 남북관계의 기상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이지만 주변 정세와 정치적 여건과 별도로 남북 고문헌 자료를 담당하는 당사간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고문헌 자료 조사와 교류 사업을 위한 준비로 내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 고문헌에 대한 사전 조사와 관련 연구자 확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3. 북한 고문헌 조사 연구 사업의 전망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인 차이나 이질화된 사회문화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문화의 공통점과 동질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 해답은 역사,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고문헌 자료가 차지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 최근의 남북관계의 개선과 활발해진 교류 협력의 물결은 남북간의 이질적 요소를 해소하고 동질성 회복에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여년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고문서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약 60만점의 고서 및 고문서 자료에 대한 마이크로필름을 소장하게 되었으며, 87권의 고문서집성을 간행하였다. 여기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 인력은 향후 북한의 고문헌 조사 연구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문화를 담고 있는 고문헌 자료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따라 그 특징점을 달리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고문서 자료에 경험이 풍부하며, 국립국어원은 한글 자료,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고서에 주력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들의 북한의 고문헌 자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향후 남북한 고문헌 자료의 교류와 확산을 위해 남북한의 연구자들의 상호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문헌 자료 조사와 연구 사업은 고문헌 자료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각 기관의 특징점을 살려 공조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은 조사 사업을 위해서는 대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남북 교류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정치적 기상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아 당국자 간에 공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마련하고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남북 관계는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외적인 여건 못지않게 내적인 여건도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고문헌 자료에 대한 학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고문헌 조사 사업이 상호 신뢰 하에 진전되면 남북한 고문헌의 교류 전시회 및 학술행사, 자료집의 간행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 고문헌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교류사업에 관여했던 기관과 연구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경청하며 향후 협력방안에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

## 남북학술교류의 현황과 과제





## 남북 학술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정리화 된 남북 학술대회 경험적 사례 및 기타현황 |
| 2. 광복 60여년 한반도의 환경변화와 통일시대 모색 | 5.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 3. 남북학술교류의 정리화 추진경위와 그 의의     |                                |

### 1. 서 론

분단이후 남북대화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1년 일천만 이산가족생사확인을 위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열렸고 그 다음해에 있었던 「7·4 공동성명」에 따른 당국간 대화가 정리화 되었으며 남북적십자 본회담도 서울과 평양을 교차방문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때 남북조절위원회와 적십자회담을 위해 연인원 수백명이 상호 오가는 가운데 분단사회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나 1974년에는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인 대화중단조치로 다시 남북의 문이 굳게 닫혀졌다.<sup>1)</sup>

그러다가 10년 후인 1984년에 각종회담제의를 있었으며 실제로 남북대화 및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sup>2)</sup> 획기적인 교류는 북한적십자회가 한국의 수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제공을 제의해왔고 우리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의 수해물자를 인도. 인수(9월29일

1) 대화중단의 이유로는 당시 빈번한 교류왕래로 북한사회의 노출위기 의식과 북한의 후계자승계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남한의 유신헌법으로 인한 강경한 승공정책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화해협력의 원칙에는 합의되나 구체적인 실천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의 저변에 쌍방이 힘의 대결속에서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뿌리깊게 깔려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 1984년 1월에 우리정부의,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의 당면 해결과제 제시와 2월에 국토통일원장관의 '남북한 당국 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 개최 제의, 3-4월에 북한 김유순 올림픽 위원장의 '남북체육대표단회담' 제의와 정주영 대한체육회장, '남북체육회담' 제의, 8월 남한의, '남북한 교역·경제협력 실시' 제의, 9월에 제8차 본회담을 위한 남북적십자 예비접촉 등이 있었다. 10월신병현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개최 제의 및 북한 김환 부총리, 남북경제회담 수락, 11월에 제1차 남북경제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다.

-10월4일)하였으며 그후 사회문화교류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1985년 9월에 성사되었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 방문”은 남북간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첫 번째 사회문화 예술교류로써, 이를 시발점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교류’라는 이름으로 남북 직접 또는 제3국에서 교섭의 맥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다.

그후 교류의 주체가 정부중심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로 다양화 되어 왔으며 그 추진방식도 당국간 대화와 적십자사 중심에서 경제, 문화예술, 군사, 관광, 교육과 학술, 체육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게 진전되어 간다고 해도 정치환경 변화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러는 가운데 당국간의 대화는 진전되어 1989년 6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였고, 1990년 8월에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적극적인 사회문화교류의 문을 열게 된 것은 1991년 12월 민족 구성원의 자유 왕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추진 등을 위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부터다. 그러는 중에 북한의 고질적인 계획경제구조 악화로 인해 199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지가 노출되면서 한반도내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까지 했지만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 사이에 유류와 곡물지원 약속으로 핵문제가 타결되자 핵카드의지를 일단 접게 되었다. 그후 남북 관계는 급진전되어 김영삼 정부는 1994년 11월 기업인들의 방북 및 경제 협력 등을 허용하는 대북 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8일에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한때 교류가 끊어지긴 했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과거 정부들과는 크게 다른 ‘햇볕정책’이라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각종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정부 수립 50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 대결주의를 넘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sup>3)</sup> 이에 따라 남북 사이에 주민 접촉 및 왕래가 잦아지고, 교역 및 협력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1998년 10월 현대 그룹이 북한 당국과 금강산 관광 및 개발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실제로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관광 뱃길이 열려 분단역사 이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sup>4)</sup>

이러한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6월 15일 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 역사적인 만남은 당시 온 지구촌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으며, 이후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실제로 정상회담 이

3)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1998.8.14),p.18.

4) 분단 된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1천만 이산가족들이 서로간에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령 이산 가족에 대해서는 방북 절차를 크게 줄이고 영세 이산 가족에게는 교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제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5월에는 22개 이산가족 관련 민간단체들이 참여한 「남북 이산 가족 교류 협의회」가 발족되어 민간 부문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998. 8),pp. 23-24.

후 남북의 교류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회전반적인 접촉<sup>5)</sup>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국민들도 멀지 않은 시기에 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곧 실현될 것 같은 부푼 기대에 들떠 있었지만, 점차 증가되어가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북이산가족들의 상호 교환방문마저 크게 진전되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현안문제<sup>6)</sup>로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 화해협력의 무드를 지속하기 위한 사회교류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사회의 구성분야 중 그 성격상 가장 접촉이 쉽고 비교적 중립적인 영역인 것이 문화예술의 교류이며, 남북의 심각한 사회 문화적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가진다.

분단이후 남북한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는 그들 사회성원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삶의 가치, 일상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질성을 확산시켰으며, 이와 같은 이질적인 사회특성은 통일과정에 크나 큰 장애요인으로 가로 놓이게 되므로, 비정치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관광·종교분야 등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분야의 교류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의 이질화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함으로써 통일이후 사회전반의 통합을 준비하는 기초 작업으로도 필요할 것이다.<sup>7)</sup> 특히 사회문화·예술분야는 남북교류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많은 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써, 무엇보다 남한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회와 문화예술의 개념<sup>8)</sup>과 북한의 그것들 사이에 너무나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차원을 떠나 장차 통합을 위해 심층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 2. 광복 60여년 한반도의 환경변화와 통일시대 모색

### 1)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와 남북통합가능성

- 5) 과거에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사의 접촉이 주류였으나 정상회담이후에는 혁신적인 변화접촉이 금강산관광개방과 개성공단특구조성에서 이루어지고 그 외에도, 비무장지대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연결작업착수, 아시안게임을 위시한 국제경기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평양 정주영체육관 개막식에 1천여명이 넘는 남한관계자초청, 장관급회담과 장성급회담의 정례화, 남북학술대회의 정례화, 용천폭발사고로 인한 우리측의 각계각층의 지원과 접촉 등을 들 수 있다.
- 6) 김일성 10주기 조문단 방북불허, 동남아로부터 집단적인 탈북자 공개적 영입문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미국의 대선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냉한 상태다.
- 7)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제도는 물론 내적·심리적 통합을 포함한다고 볼 때,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는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제도적 차이와 이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민족공존의식을 확대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 8) 여기서 사회·문화·예술분야의 범위로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당국간의 정치군사 교류와 경험차원을 제외한 민간차원 즉 NGO단체의 경제지원을 포함한 학술, 언론, 출판,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시민사회단체 등의 통일운동교류를 포함한다.

1989년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선언을 계기로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동서간 이념 대립의 경쟁구도가 종식된 사실도 한반도의 통일환경 변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사회주의 포기과 탈이념 노선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결과로서 미·소간 혹은 동서간의 대립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세력의 후원 아래 남한사회를 대상으로 계급의 구분과 국제적 계급혁명을 추진해 온 북한으로서는 남북간 갈등을 지속시키는 한 국제적 고립의 심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행사해 오던 소련공산체제의 붕괴(한소수교 1990년)와 중국과 한국수교(1992년)에 따른 국제적 환경 변화는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간의 문제로 축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분단구조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1993년 갑작스런 북한의 핵카드 선언이후 핵문제가 불거져 한반도 문제는 다시 국제적문제로 등장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1993.3.12)으로써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반도 주변과 분단배경의 유관국과의 협조하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94.10)에 따른 경수로 제공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립('94.8)하고, 북한의 수재를 계기로 쌀 15만톤을 최초로 무상 지원('95)하므로 남북관계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1998년 이후 정부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 등 3원칙하에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한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로운 질적변화의 단계로 도약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구성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 이산가족 교류의 활성화, 3대 경제협력사업(1998년 금강산·개성공단·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본격 추진<sup>9)</sup>, 군사적 긴장완화 도모 등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부터 북한 핵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북핵 3원칙(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해결, 주도적 역할)하에 주변 유관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5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및 2007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 합의) 라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대내적으로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 등 13개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04.9)를 받아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9) 2007년 5월 17일 분단의 역사상 처음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시범운영이 있었고, 12월 11일 개성 봉동역까지 정기운행선 개통, 12일에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개성공단 공휴일 이외의 인력 상시출입보장과 유무선 통신이용, 관리구역출입사전통보로 시간단축 등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했다.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05.12)함으로써 대북정책을 중장기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남북관계발전은 2007년 10월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10·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실제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sup>10)</sup>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통일은 이념과 군사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과 대결의 결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남북한 상호간 체제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통일개념의 등장도 위에서도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 2) 북한의 상황변화와 개방의 가능성

우선 언급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 위원장 후계체제로 가고 있지만 김일성의 사망(1994년)으로 정치권력 구조의 장기적인 불안정 혹은 큰 체제의 변화 및 권력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1945년 이래 지배권력을 공고히 유지해 온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북한내의 권력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향후 북한의 정권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커다란 관심사항이 된다.

한국과의 대결 국면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운영을 벗어나 당장 큰 폭의 체제개혁을 모색하기는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체제변화만으로 김일성의 '카리스마'가 없는 정치권력을 주민들 사이에서 정당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긴 시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권력정당화 과정에서 불안정 국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권력 정당화 과정이 여의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체제개혁은 불가피할 것이며, 개혁의 범위가 커질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결국 김일성의 사망은 장기간 변화를 거부해 온 북한의 독재체제를 상당기간 김정일 위원장 후계체제로 불안정 상태이지만 장기간 이끌거나, 대폭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북한의 큰 변화는 대내적이지 않고 대외적으로 핵 보유의지를 밝혀 한반도를 다시 긴장시키면서 체제안정의 시간을 벌고 있다.

남북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91.12)하고,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3월부터 1993년 1월까지 22차례의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1992년 1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

10) 2007년 14일부터 16일까지 「10.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의지로 서울에서 총리회담이 16년만에 열렸고, 11월 27-29일까지 평양에서 국방장관회담이 있었고, 11월 29일 북한의 대나통 일인자인 김양건 통전부장이 「10.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실천의지 확인차 방한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장성급 회담으로 개성에서 3통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에 서명하였으나, 과거 핵활동 규명문제를 놓고 IAEA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93.3)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간 협상이 진행되어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우리나라 및 미국 등 관련국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곡물을 지원하였다.

2002년 10월 갑작스럽게 북한이 핵개발을 위해 우라늄을 농축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 등 북핵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05.9)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위폐 문제 등을 둘러싼 북·미간 대립으로,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개최가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06.7)와 핵실험 강행('06.10)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국제연합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06.10)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었다. 특히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둘러싼 금융제재문제로 제5차 1단계 회담 이후 6자회담이 13개월간 공전하는 등 위기와 긴장 국면이 이어졌으나 제5차 3단계 6자회담('07.2)에서 「2.13 합의」<sup>11)</sup>가 마련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나아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여 일단 북한의 상황변화는 남북관계 발전방향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셋째로 들 수 있는 북한내부의 변화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서 대외개방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증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지난 60여년 동안 생산증대를 위한 동기유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소련이나 동구의 국가들이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더욱이 대남적화 통일의 주요한 수단인 하나로 군사력 사용을 설정하고 있는 북한은 대남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왜곡된 투자구조 심화에 따른 경공업의 폐쇄현상을 나타내게 되어 불균형적 생산구조와 극빈의 주민생활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수년간 경험하고 있는 경제면의 어려움은 저조한 경제성장 수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1985년 이래 1990년까지 연 평균 1.6%를 기록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

11)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신고·불능화(disablement) 조치 이행 및 IAEA 사찰관 수용시 참가국은 단계적으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IAEA 사찰관을 초청하고 핵시설 폐쇄·봉인을 완료('07.8)하였으며, 우리측도 중유 5만톤 제공을 완료하였다. 「2.13 합의」 및 「10.3 합의」에 따라 2007년말까지 신고·불능화 완료 및 여타국의 정치·경제적 상응조치의 이행을 추진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핵폐기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하게 된다.

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무역은 경화결제를 요구하는 양국의 태도변화로 말미암아 더이상 북한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형편이며, 1993년의 냉해에 따른 농업 흉작이 북한의 경제를 한층 어둡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95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의 길을 걷게 되었고 실제 200만톤의 식량부족으로 200만명이 아사상태에 빠졌다. 금년에도 큰물난리로 식량부족을 가져와 제 2고난의 행군이 야기가 나올 정도다.

결국 곤경에 처한 경제로 말미암아 북한으로서는 서방진영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과거 동서대립 시기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때 상당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다.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새터민의 수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9,100명에 이르고 있다. 동독도 붕괴되기 직전 400만명이 주변국으로 탈출하고 서독으로 탈출한 숫자는 250만에 이르러 우리로서는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한편 북한의 신세대 청소년층이 중심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체제비판의식과 서구 풍조 선호현상은 북한사회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부정과 부조리는 주민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과 군인에 이르기까지 관련되어 정치체제 위기 요소가 되고 있다.

### 3) 새로운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환경변화

2000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가져온 남북정상회담이후 한반도 내의 환경의 변화가 한반도 분단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내에서는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 사회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내부의 경제적 곤경과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에 대해 효과적인 극복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면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언급할 수 있는 점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 분단의 성격이 점차 국제문제로부터 한민족 내부문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남북한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라는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셋째로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한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와 대립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협력질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토대 가능성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국제환경의 변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서방국가들의 북한개방유도 노력은 향후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북미와 북일의 관계개선 등이다.

다섯째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남북한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토대 구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우리의 지원으로 경



의선과 동해선 복원은 물론 개성과 평양간의 고속도로 보수작업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착수단계에 있거나 마친 부분도 있다. 더군다나 내년 봄부터 백두산까지 직항로가 열리면 분단을 뛰어넘는 하늘길, 바다길, 땅의 길이 열리게 되어 명실상부한 모든 생명력이 넘치는 한반도 한민족의 통일시대를 맞게 된다.

### 3. 남북학술교류의 정례화 추진경위와 그 의의

우리 민족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세계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한민족으로서 공동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 식민지, 분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의 왜곡과 굴절은 이러한 공동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자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막아왔다. 하지만 교류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 동안 각 지역에서 발전시켜온 각 역사인식과 문화의 특징을 융해시켜서 융합을 통한 질적 비약을 모색하고, 또 이를 토대로 세계화시대에 한민족사의 세계사적 성격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난 7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중국 연변대학을 매개로하여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남북학술교류 정례화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금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학술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였다. 정례화 된 남북학술대회의 결과로 타 기관으로 확대된 남북공동학술대회만도 ①한국아동학회, ②한국교육개발원, ③서원대학, ④연세대학, ⑤한국정치학회, ⑥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⑦세계평화통일학회, ⑧국책기관 통일문제연구협의회, ⑨통일연구원, ⑩한국직업개발연구원, ⑪6.15실천을 위한 남측 학술본부 등과 총 18회 이상의 남북공동학술대회를 갖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분단 이후 북한학자가 한국에 와서 학술대회만을 위해 양정부의 허락 하에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학술대회의 교차적 개최 이행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일곱 차례의 학술대회는 몇 가지 점에서 남북 학술교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일곱 차례의 학술회의 모두 남과 북, 중국에서 40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관심있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임으로써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학술적으로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의 교류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이 대회는 학술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3국 대표 간 협의서 작성과 서명으로 연결됨으로써 앞으로 이 학술대회가 연속성을 가지고 정례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셋째,** 일곱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쌓은 학자들 간의 상호 이해 기반과 연대감, 주최기관들 사이의 경험의 축적은 앞으로 남북 학술교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이 같이 정례화 된 남북학술교류의 통로를 통하여 실제로 2002년에 선문대학, 2003년 한국아동학회,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 2005년도에는 한양대학의 예술대학, 서울대 체육연구소 등과 중국에서 남북학술대회를 가졌다. 특히 본인의 북한초빙 특강 구두약속 이행으로 방북시 서원대와 연세대 국악연구원 팀과는 같이 평양에 들어가서, 2003년에 이미 성사되었던 백두산과 평양계획 그대로의 일정으로 7박8일의 남북학술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같이 2001년에 협의한 정신에 입각하여, 지난 7년간에 정례화한 신뢰를 바탕으로 3국간 학술대회의 순환적 개최정신을 살려 다시 금년에는 독립기념관, 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과 같이 백두산과 평양에서 7박 8일간의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가졌다.

#### 4. 정례화 된 남북 학술대회 경험적 사례 및 기타현황

##### 1)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례화 된 남북학술대회 추진현황

- 2001.9.21-22까지 <21세기 민족문화의 공동발전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연변 청년호텔에서 중국, 한국, 북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남북 첫번째 학술대회를 계기로 장차 정례화 할 필요성을 공감하여 한국·중국·북한측 단장간에 협의서를 체결하여 연차적으로 서울, 평양, 중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함.

- 2002.10.17-19까지 <한민족 전통문화의 현대적 조명>이라는 주제로 심양 요녕호텔에서 제 2차 중국, 한국, 북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남북 학술대회의 정례화 협의에 따라 2003년 평양에서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함.

- 분단이후 처음으로 백두산에서 2003.9.20-28까지 <일제의 아시아침략과 조선민족의 반일투쟁사 연구>를 주제로 평양과 백두산에서 제 3차 중국, 한국, 북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

- 2004.6.2-5: 2001년에 남북학술대회를 정례화 한다는 협의서 체결정신을 살려 3차 남북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다시 남북 단장회의를 거쳐 제 4차 회의는 한국에서 갖기로 합의하여 2004년에 북한학자가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음. 즉 2004년에 학술진흥재단의 지원하에 2003년도 평양과 백두산학술대회의 답방형식으로 <근현대사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일본의 우경화>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에 분단이후 공식적으로 북한학자가 한국에 와서 양 정부의 허락 하에 학술대회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학술대회의 교차적 개최 이행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05년 학술대회를 위해 예비회담을 심양에서 가졌으며, 본인이 7월20일부터 2주간 김일성대학과 사회과학원에서 초청특강을 하게 되어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평양과 백두산을 방문하여 예비회담 결과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제5차 정례화 된 학술대회를 「1930-1940년대 동북지구 항일투쟁과 역사경험」 주제로 장춘에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 제6차남북학술대회(2006.11.2-5) : 「동북아지역 역사문화교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변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한중연에서 개최했지만 한국에서 제일 큰 규모인 정치학회가 북한학술단체와 별도로 학술대회를 성사하도록 주선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갖게 되었다.

- 제7차 남북학술대회( 2007.6. 30-7. 8) : 「조선민족 항일투쟁과 민족주의문제」로 백두산과 평양에서 7박 8일간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남한의 국책기관과 같이 공동개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술대회의 모델을 형성한데서 또 다른 의의를 갖게 되었다.

## 2) 기타 남북학술대회 추진현황

- 2002년에는 연변에서 「21세기를 열어 갈 아동교육 학술회의」 주제로 한국아동학회가 개최되었다.(5.30-6.1).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아태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TSR의 역할회의(2002. 7.24-25)에 후원으로 참가.

- 남북언어정보표준위원회는 남북언어정보 표준화 회의(북경, 2002. 8.4-6)를 개최.

- 선문대학교의 21C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조건과 구상 학술회의(선양, 2002. 10.16-18)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에서 남·북·중 여성학 학술회의(엔지, 2002. 12.23-24)를 개최.

- 한양대학교도 북한 김책공대와 2001년 5월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백남공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특히 2002년도의 교육학술분야의 성과 중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대북 IT교육 실시이다. 한양대는 8주간(7.1~8.23) 김책공대·김일성대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IT교육을 성공리에 실시하고 한양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 이 외에도 단군학회가 학진의 지원으로 남북학술대회를 가진 바 있고 그후 학진이 직접 남북교류의 협의서를 채택하여 남북학술자료 및 공동의 연구의 길이 열리고 있다. 또한 강만길 교수가 주도한 수차례의 남북 역사학자들간의 만남과 백영철 교수가 독일의 송두울 교수와 함께 추진한 수차례의 통일포럼의 학술대회가 평양 및 해외에서 있었다.

- 한중연의 7년차 정례된 남북학술대회의 경험을 살려 본인이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측학술본부 상임위원장으로, 북측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학술본부와 2007년 12월7-9일까지 금강산에서 7년만에 처음으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학자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리고 개성, 금강산, 백두산, 평양, 제주 한라산, 서울 등지에서 학술대회를 정례화 한다는 협의서를 채택 서명하므로 해외를 가지 않고 육로로 오가는 학술대회의 길을 열게 된 것이다.

## 5.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본 학술대회의 기대효과 및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화해협력을 위해 민간차원에서 남북 학술교류의 문을 열고 활성화하는 큰 효과를 들 수 있다. 사실상 2001년 처음 남북학술대회를 시작할 때는 오늘날의 큰 성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의 통상적인 세미나 비용만으로 남북학술대회를 통해 북한학자들을 서울에 오게 하고 우리 또한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과 백두산밀영까지 구석 구석 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 본인의 객원교수 형식의 초청으로 인문사회 분야로서는 처음으로 김일성대와 사회과학원으로부터 특강을 했다는 것은 북으로 하여금 학문의 영역에서 조금씩 문을 여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학술기관간의 교류협정이 머지않았고 학생들의 교류도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실제로 평양회의에서 2006년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생들의 북한 답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아 냈으며, 이를 8·15 민족대축전 개최 기간 중 북한당국대표인 김기남 비서와도 만찬 도중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한중연의 단독 학술대회경비가 마련되지 않아 공동경비 때문에 학생참여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게 되었다.

**둘째,** 무엇보다 이러한 학술교류의 기회를 통해 남북간의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한 교류를 모색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단군릉을 대대적으로 축조하면서 민족주의 이념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우리 역사에 나타난 민족공동체 의식의 변천과 발전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의식적 기반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 내 역사 유물, 유적을 보수 유지하는 것을 경제적

으로 지원하거나 유적지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경제적 학술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다. 북한의 역사적 유물 유적, 고문헌 등 현재 남아있는 북한 내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현황 파악은 향후 학술문화교류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데 본 학술대회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역사 자료 보존 실태, 문화유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 및 그 보존상황에 대한 이해는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과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정책수립이 용이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인 활용방안으로써 남북 학술단체 간 교류 창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통일 시대의 학술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경제적·물질적 지원이라는 부수적 효과에 대해 기대가 크므로 경제적 지원이 병행된 대북한 학술문화 교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민족적이며 동시에 문화통합 차원의 접근방법으로서 문화적 인도주의와 민족적 화합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북한 학계가 정보화는 물론 종이와 자료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연구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한 학계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면 이는 북한 학계의 시야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한 내의 학술단체 간의 대응과 대북한 학술문화교류의 방향을 통합적으로 수립 조율할 수 있는 범문화적 합의기구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합의기구 마련과 아울러 학술문화통일기금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기구와 통일기금 마련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본 학술교류는 학술, 문화 이념적·민족적·인도주의·지역연구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술진흥재단, 문광부, 통일부 등이 지원하는 남북학술교류를 통하여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교류정책 패러다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비록 분단현실이지만 중국경제가 세계 3위 규모로 고도성장하고 이러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틈타 일본의 우경화가 노골화되고 있음에 대하여, 남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 안보에 대비함은 물론 우리시대에 통일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은 민족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1.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1998.8.14)
2.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998. 8)



▪ 연구 발표 ▪





---

##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및 연구 현황



#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및 연구현황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 < 목 차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론</li> <li>2.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북한 소재 고문서</li> <li>2) 남한 소재 북한 고문서</li> </ol> </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연구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홍기문의 『리두연구』</li> <li>2) 허종호의 『조선봉건말기의<br/>소작제연구』</li> </ol> </li> <li>4. 결론</li> </ol> |
|--|--|

## 1. 서론

역사와 문화는 반드시 사료에 근거하여 전개되는 학문이다. 따라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료의 발굴과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문헌의 국가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많은 문헌을 남겼다. 전통시대에도 집집마다 사서삼경과 같은 책들이 서너권씩은 있을 정도로 문명화되고 개화된 사회였다. 조상들이 남겨준 고문서와 고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찌우게 하는 귀중한 자산이요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료에 대한 발굴과 조사 및 보존에 대해서 그다지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다는 구실로 전국의 고문서와 고서를 발굴한 것이 사료에 대한 최초의 조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마저 중단된 이후에는 사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서와 고문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이유로 조그마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문서와 고서는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너무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시시각각 훼손되어 가는 고문서와 고서에 대한 소재 파악과 조사가 급선무이며 또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보존 대책 수립도 시급한 형편이다. 사료의 발굴조사와 연구 및 보존을 위해 남북한 공동의 고문헌 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해방 이후 북한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고문헌에 대한 연구는 가히 선구적이라 할 만하다. 홍기문과 허종호에 이루어진 독보적인 업적은 이후 남북한의 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북한 학자들의 연구 활동은 눈

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 이렇다 할만한 업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반하여 남한의 학자들은 이 무렵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이어 후속 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교류를 통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고문서 조사를 실시하고 또 공동으로 연구를 하여 남북 상호간의 이해를 심화·증진시키고 민족의 동질감 회복시키며 나아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한만의 불완전한 한국학을 넘어 온전한 의미의 한국학을 성립·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한 연구로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현황과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북한 관련 고문서 자료 현황

현재 북한 관련 고문서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시각각 인멸해가는 고문서의 발굴과 조사 및 정리 연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북한 소재 북한 고문서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고문헌 조사가 언제 실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해방 이전에 일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사료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朝鮮史 編修會에서는 전국적으로 사료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朝鮮史料集眞』으로 펴낸 바 있다.<sup>1)</sup> 이때 귀중한 고문서와 고서 등이 상당히 발굴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조선사료집진』에는 소장처가 밝혀져 있는데 현재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는 모두 9종이다.(뒤의 <표 1> 『조선사료집진』에 수록된 북한 소재 고문서 목록 참조)

이 중 눈에 띄는 고문서는 咸南 端川에 살았던 심지백의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이다. 沈之伯의 開國願從功臣錄券을 비롯하여 沈洋과 沈守平의 戶口單子 및 沈彦冲의 朝謝帖이 그것이다. 이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던 심지백의 후손은 沈元錫이었는데 그는 이 이외에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하나는 함남 안변군에 있던 釋王寺 소장 고문헌들이다. 여기에는 奴婢推刷都案을 비롯하여 奴婢田結田畚鹽盆賜給記 및 僧自超贈號教書 등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는 사찰의 운영과 조직 및 僧號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찰과 불교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1) 『朝鮮史料集眞』(조선총독부, 1935년)

희귀한 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 지역의 고문서는 민간에 소장되어 있기 보다는 주로 중앙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중앙도서관 및 사회과학원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민가에 소장되어 오던 것을 이들 기관에서 수집 보존 관리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 고문서에 대한 정리와 분류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자료집으로 정리되어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sup>3)</sup>

## 2) 남한 소재 북한 고문서

북한과 관련된 고문서는 반드시 북한에게 소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도 제법 되는데 그 이유는 조선시대에 남한 지역 출신들이 북한 지역의 관리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수령 등을 역임했던 관료들의 가문 소장 고문서를 조사해 볼 경우 북한 관련 고문서들이 적지 않게 발굴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하고 있는 『고문서집성』에서 북한 관련 고문서를 찾아보면 대략 12가문에서 한 두 점 이상의 고문서가 발견되고 있다.(아래의 <표 2> 『고문서집성』에 수록된 북한 관련 고문서 목록 참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안산의 진주유씨 가문 소장 고문서이다. 이 가문에 북한 관련 고문서가 많은 이유는 이 가문 출신인 柳遠聲이 고종 연간에 价川郡守를 역임하면서 작성한 각종 공문서들을 퇴임할 때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표 2>를 보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가문에는 教旨와 勅命을 비롯하여 訴狀, 請願書, 訓令, 照會, 照覆, 牒報, 報告書, 告目, 望記, 公函, 命令書, 簡札과 기타 등 15종이 넘는 고문서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개천군수로 재임할 때 작성하거나 받은 것들로 대한제국시기 북한 지역의 지방행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외에도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연세대와 고려대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북한 관련 고문서가 소량으로나마 조금씩 소장되어 있으나 시간과 인력 부족 및 관계 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여기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 관련 고문서를 모두 다 조사하지 못하여 아쉽다.

## 3. 연구 현황

### 1) 홍기문의 『리두연구』

북한의 고문서 연구 효시는 홍기문의 『리두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1957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출판사에서 출간되었는데<sup>4)</sup> 모두 이두에 대한 4편의

2) 허중호,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한마당재출간, 1989), 8쪽.

3) 위와 같음.

4) 필자는 1995년에 한국문화사에서 영인한 것을 이용하였다.

독립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명과 책에 수록된 논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비록 이두에 대한 연구서이지만, 우리나라 고문서 연구사에 큰 획을 그은 연구 성과이다. 우선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홍기문은 이책의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저서의 네 편이 일정한 령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각각 독립한 내용으로 저술되어 있다. 즉 제 1편에서는 리두 전체에 대한 역사적 발달 행정을 해명하고, 제 2편에서는 리찰에 대한 문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제 3편에서는 리찰의 중요한 문헌을 역해하고, 제 4편에서는 리찰 관계의 귀중한 자료인 <리문>을 간단히 주석해 놓을 것이다.<sup>5)</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이두가 사용된 배경과 역사, 이두의 형태와 문법, 고문서 등 고전 역해 및 고전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두에 관한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연구가 매우 제한된 연구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가 연구하면서 살펴본 고문서들은 전부 원본이 아니라 다른 책에 전재된 것이나 복사본이었다. 그는 역시 이 책의 「범례」 ‘인용문헌의 정확성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저서에는 물론 고대의 금석문자, 고문서 및 기타의 고전 문헌 등이 많이 인용되어 있는 중 그 대부분이 이런 서적, 저런 서적으로부터의 두 별 인용인 것이다. 만일 그 원본이나 진적과 대조하여 본다면 다소간의 그릇됨이 없지 않을 것이로되, 원본 및 진적을 얻어 볼 수 없는 지금의 형편 아래 실로 부득이한 바다. 심지어 전률통보(典律通補), 고금석림(古今釋林), 어록변증(語錄辨證), 유서필지(儒胥必知) 등을 그 어느 한 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책을 저작하는 도중 유서필지의 사본(寫本)을 한 권 얻었다...)<sup>6)</sup>

그가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고문서를 매우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해 내고 있어서 놀라울 뿐이다. 그의 책 제 3편 「리찰 문헌 역해」에 인용된 리찰 중 고문서는 모두 22점이다.(아래 <표 3> 『리두연구』에 인용된 고문서 목록 참조) 우선 인용된 고문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貼, 關, 成文(分財記), 遺書, 立議, 狀啓, 牒呈, 甘結, 招辭, 明文 등 10여 종에 달한다. 또 시기로 살펴보면 고려 공민왕 6년(1357)부터 조선 고종 27년(1890)에 작성된 고문서들을 이용하였다.

인용된 고문서의 내용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말 공민왕과 우왕대에 작성된 전라도 장성의 백암사 관련 고문서는 2건의 貼과 1건의 關인데 僧錄司

5) 홍기문, 『리두연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출판사, 1957), 1쪽.(맞춤법이 오늘날 남한에서 통용되는 것과 달라 어색한 면은 있지만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다.)

6) 위 책, 1쪽.

에서 覺眞國師의 제자들을 勿侵하고 사찰을 보호하라는 국왕의 지시[宣旨]를 全羅道 按廉使에게 전달하는 내용과 감무관이 장성군사로 하여금 토지대장에 법손 상속하도록 기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 이 고문서들은 모두 『리두집성』에 전재되어 있는 것들이다.<sup>7)</sup>

‘淑愼翁主 家屋文書’와 ‘魯山君夫人 宋氏 傳係文書’ 및 ‘貞海君 遺書’도 모두 15세기 이후의 문헌으로 분재와 관련된 것들이다. ‘숙신옹주 가옥문서’는 조선 태조인 이성계가 자신의 서녀인 赫致에게 가옥을 물려주기 위해 이를 지은 후 작성한 상속문서이다. 이 며치가 후에 숙신옹주로 봉해졌는데 태조 직접 친필로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서 『열성어제』에도 실려 있다. ‘로산군 부인 송씨 전계문서’는 로산군부인인 宋氏가 재산을 鄭眉壽 妻 李氏에게 주면서 작성한 일종의 분재기이다. ‘정해군 유서’는 왕실의 친족 중의 한 명인 정해군이 그의 嫡子 世雄에게 남긴 유서로 자신의 사후에 세옹이 서자인 世任과 世均 등과 재산 다툼을 벌일 것을 걱정해서 남긴 글이다. 이 모두 『리두집성』에 전재된 것을 가지고 연구하였으나 다만 숙신옹주 가옥문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일찍이 원문을 교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정본에 의하였다고 한다.<sup>8)</sup>

‘소수서원 립의’는 소수서원 儒生의 居棲 등과 관련하여 관에서 내린 공문을 등사해 놓은 것이다. 이 立議가 수록되어 있는 책의 정확한 명칭은 ‘紹修書院謄錄’이다. 따라서 이 책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립의는 모두 원본이 아니며 훗날 참고하기 위해 베껴놓은 사본인데 이러한 사실은 인용된 립의가 ‘合行云云’으로 끝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 문서가 1937년에 조선사편수회에서 영인 간행한 『소수서원등록』을 참조하여 연구한 듯하다.

狀啓, 牒呈, 關, 甘結 등도 각기 1점씩 소개되어 있다. 장계는 함경도 관리가 왜적을 방어하던 鄭文孚의 戰績을 국왕에게 알린 보고서인데 그 관리는 아마 관찰사나 兵使일 것으로 추정된다. 첩정은 砥平縣監이 경기관찰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尹鉞의 일기 압수와 관련하여 그간 조사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關은 세금을 납부치 않는 백성을 잡아다 엄히 다스릴 것을 알린 지시서로 비변사에게 경상도 관찰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감결은 內需司에서 江原道 營吏廳에 보낸 지시서로 간성 건봉사는 국왕의 생신을 축복하는 사찰이니 일체의 잡역을 부과치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문서의 출처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招辭 4편이 인용되고 있는데 供招 대상자의 이름을 따서 ‘黃愼의 초사’, ‘救天의 초사’, ‘萬鐵의 초사’, ‘柁(염)의 초사’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황신의 초사’는 1612년에 광해군이 그의 繼母와 갈등으로 인해서 계모의 아버지인 金悌男을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는데 황신이 김제남과 절친하다는 제보가 있자 황신을 잡아다가 국문할 때 작성한 것이다. ‘구천의 초사’는 1675년에 구천이 모진 매를 맞고 무고한 모경운 등을 끌어들이다가 뒤늦게 자신을 교사한 사람은 최태급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철의 초사’는 庚申逆

7) 위 책, 346쪽.

8) 위 책, 385-386쪽.

獄과 관련된 것으로 1680년에 許積의 庶子 許堅이 반역죄로 몰려 처단되었는데 이 때 역모를 밀고한 姜萬鐵이 국문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또 '염의 초사' 역시 경신역옥과 관련된 것인데 리엽이 허견을 국왕으로 추대하려 하였다는 공술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 초사의 출처가 각기 달랐다는 점이다. 즉 황신의 초사는 『대동야승』 중의 「광해일기」에, 구천의 초사는 『의금부등록』에, 만철과 리엽의 초사는 『경신역옥추안』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끝으로 토지매매문서 4건과 노비매매문서 1건이 소개되어 있다. 토지매매문서 주에 제일 먼저 소개한 문기는 1579년에 당시 유명한 학자인 李珥가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그의 從弟인 權處均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 토지매매문서는 이이가 직접 쓴 것이기 때문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소개된 것은 1710년에 金自弘이 尹兵使宅 奴 命立에게 받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세 번째 소개된 토지매매문기는 1799년에 朴天壽라는 사람이 받을 尹寶城宅의 奴 三取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네 번째 소개된 문기는 신상운이라는 사람이 위화도에 있는 받을 모인에게 방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기로 정문부와 관련된 장계와 함께 홍기문이 인용한 고문서 중 북한 관련 고문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끝으로 1712년에 작성된 노비매매문서는 계집종 사녀와 그의 소생 사내종 영금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일괄 문서라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문서의 출처도 역시 밝혀져 있지 않다.

이제까지 우리는 홍기문의 『리두연구』에 인용된 고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글자나 용어의 해석에서는 현재 남한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員'이나 '作' 및 '班奴婢' 등이 그것이다. 남한에서는 '員'을 '대개 坪과 같이 들(坪野)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sup>9)</sup> 홍기문은 '우리말의 둘레에 해당한다'고 풀이하고 있다.<sup>10)</sup> 또 '作'을 남한에서는 경작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나<sup>11)</sup> 홍기문은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sup>12)</sup> 또 '班奴婢'를 소유권이 앞과 동일한 노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나<sup>13)</sup> 홍기문은 '량반의 노비'로 풀이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점의 차이를 빼어놓고는 홍기문의 『리두연구』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문서 연구사에서 한 획을 그을만한 대단한 연구 성과임은 부정할 수 없다. 더군다나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점 즉 원본을 접하지 못하고 복사본이나 다른 책에 인용된 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별 인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연구 환경을 감안한다면 그의 연구 성과는 매우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성과가 기반이 되어 고문서를 본격적으로 활용한 허종호의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9) 최승희,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347쪽.

10) 홍기문, 『리두연구』, 405쪽.

11) 박노옥, 「조선시대 고문서상의 용어 검토」, 『동방학지』 68, 92쪽.

12) 홍기문, 앞 책, 405쪽.

13) 와그너, 「북부호적」

14) 홍기문, 앞 책, 413쪽.



## 2) 허종호의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

허종호의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는 홍기문의 『리두연구』가 나온 지 8년 후인 1965년에 역시 같은 사회과학원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연구 여건이 많이 호전되어 허종호는 역사연구소 중세사 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자료집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허종호는 자신의 책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 인용된 고문서 자료들은 역사연구소 중세사 연구실 소장 자료집에서 전제한 것인바 그 고문서들은 주로 중앙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중앙도서관 및 사회과학원 도서관 소장의 것들이다. 그 외에 「조선후기의 전답 문기에 관한 연구」, 「조선의 소작관행」 등에 게재된 고문서들도 인용하였다.… 인용된 고문서는 주로 19세기 중엽 이후의 것이며 20세기 초의 것도 몇 개 있다.<sup>15)</sup>

위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사실이다. 첫째, 역사연구소 중세사 연구실에서 정리한 자료집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간행 여부는 이 글을 통해서만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자료집'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고문서가 정리 분류되고 또 탈초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북한의 주요기관은 중앙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중앙도서관 및 사회과학원 도서관 등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기관에 정확히 어느 정도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 기관에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셋째,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의 문서를 주로 인용한 점으로 미루어 이들 기관에 소장된 고문서는 대부분 조선후기에 생산된 고문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가 인용하고 있는 고문서 중에는 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서 출토된 것들도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중에는 북한 지역 출토한 것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출토된 것까지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여러 기관에 상당히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허종호는 홍기문에 비해서 연구 환경이 크게 나아진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책에 인용되고 있는 고문서를 살펴보면 모두 15종 76점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인용된 고문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明文과 手標를 비롯하여, 所志, 배자[牌字], 判決書, 契約書, 差帖 등으로 명문은 31점, 수표는 21점이며 배자가 4점, 소지와 판결서 계약서와 차첩이 각기 3점이었다.(이에 대해서는 <표 4>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에 인용된 고문서 목록 참조)

허종호는 이와 같이 다양하고 많은 고문서를 직접 사료로 채택하여 과감하게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우선 높게 평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홍기문의

15) 허종호,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 (한마당, 1989) 8쪽.

연구가 있긴 하였지만, 1965년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고문서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소작제를 연구하기 위해 과감하게 토지매매문기 등을 활용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선구적인 일이었다. 둘째 고문서 이외에도 각종 문헌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과 같은 관변 기록 뿐만 아니라 『목민심서』와 『반계수록』과 같은 사찬 기록 및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및 각종 법전 등을 활용하여 고문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의 취약점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자신의 논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허종호가 사회경제에 대한 깊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그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허종호는 고문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도지의 다양한 유형 즉 원도지, 굴도지, 중도지, 퇴도지 등을 규명하였으며 병작 착취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밝혀내었다. 또 상평통보와 같은 화폐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면서부터 토지매매가 활발해져서 18세기 이후에는 토지매매가 전례없이 성행하였다고 분석하였다. 또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면서 토지 집중 과정도 급속히 진척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세아적 침체성 이론을 반박하고 지주적 토지 경영 방식 내에서 자본주의적 경영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허종호가 인용하고 있는 고문서들은 살펴보면,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사료학적인 측면에서 허종호의 책에 인용된 고문서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고문서는 1899년에 작성된 고문서로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북한 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光武元年 己亥 七月 二十五日 處明文

右明文事段 買得金淸蕃役田 在於古邑面 古獐州城內員 四作田又於東門外員役田一作…合役田七作是遣 價折錢文參拾兩 準計捧上是遣 右人處賭地放賣爲去乎 日後彼此雜言隔是去等 捧此文記告官卞正事

自筆役田賭地放賣主 金尙弘<sup>16)</sup>

현재 이 고문서의 원본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글자는 오자로 추정된다. 먼저 첫 줄의 ‘光武元年 己亥’의 경우 광무원년의 간지는 ‘정유’이다. ‘기해’년은 광무삼년이다. 조선시대인들은 연호를 틀리기는 쉬워도 간지를 틀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광무 원년이 아니라 광무 삼년일 확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元’은 ‘參’의 오자로 추정된다. 또 네 번째 줄에 ‘捧此文記’는 관례적으로 ‘持此文記’라고 쓰기 때문에 ‘捧’은 ‘持’의 오자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자료 정리의 초기 단계에서 빚어진 잘못이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오류일 수도 있으며 현재 발간되는 남한측의 자료집에서도 이러한 오류는 아직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시정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16) 위 책, 148-149쪽.

위 문서에서는 오자 말고도 주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 번째 줄에 나오는 ‘準計捧上’이다. 대부분의 토지매매문서에서는 ‘依數捧上’이 쓰였는데 북한지역의 토지매매 명문 혹은 조선말기의 토지매매명문에서는 ‘依數捧上’ 대신 ‘準計捧上’이 종종 쓰이고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토지매매문서를 더 살펴보자. 신유년에 작성한 문서인데 허종호는 무슨 근거에서 그랬는지 알 수 없으나 1861년으로 추정했다.<sup>17)</sup>

辛酉 十一月 晦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移買次 京居洪生員 賭地番拾參斗落… 價折錢文 肆拾五兩 論定捧上是遣 本文記二丈並 右人前永遠放賣爲去乎 日後…憑告事  
放賣番主 洪致景 印<sup>18)</sup>

위 토지매매문서도 원본을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할 수는 없어도 몇 가지 점에서 정확하게 移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첫 줄에 ‘前明文’과 ‘右明文事段’ 사이에 행이 바뀌어야 하는데 옳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둘째 줄 마지막의 ‘憑告’는 ‘憑考’의 誤字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憑告’의 앞에 있는 ‘永遠放賣’이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토지매매에서는 관용적으로 ‘永永放賣’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永遠放賣’라 기재되어 있다. ‘영원방매’라는 표현이 이 책에 인용하는 고문서 속에서는 종종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인이 훨씬 빨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조사해 보지 않아서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북한지역에서 작성한 고문서에서는 매우 일찍이 私印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문서는 1846년에 작성된 것이다.

道光二十六年 丙子 十二月 二十日 前明文  
右明文事段 京人番 玄書房 賭地番 拾參斗落只庫 四標段 … 標內庫 價折錢文 參拾參兩 論定捧上…  
放賣番主 洪治京 印<sup>19)</sup>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문서를 작성할 때 양반남자들은 대부분 수결을 하였고 도장을 찍는 일은 개화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풍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치경은 일찍이 수결을 하지 않고 대신 사인을 찍고 있음을 위 토지매매문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는 과연 어느 시기부터 남자들이 공식문서에 수결 대신 날인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1840년대부터 남자들이 공식문서에서 날인하는 것은 다른 지역 특히 남한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17) 이 문서의 작성자는 ‘洪致景’인데 허종호는 그를 다음에 인용하는 ‘洪治京’과 동일인으로 파악하여 이 신유를 1861년으로 하지 않았나 추정한다.

18) 위 책, 154쪽.

19) 위 책, 154쪽.

추정된다.

물론 허중호의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는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물이며 고문서를 전제한 자료집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 인용되는 고문서가 거의 전문이 수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집 구실을 하는 측면도 있다. 더군다나 전제된 고문서마다 오자나 탈자 또는 잘못된 부분이 하나씩이라도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책에 수록된 고문서가 자료로서 갖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그것은 바로 남북한 공동으로 고문서를 조사, 정리 나아가서는 연구를 할 때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초서를 잘못 읽은 것들이다. 명문은 초서로 작성되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간혹 초서로 쓴 경우가 있다. 아래의 경우는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道光二年壬午五月十三日 魚在潭前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傳來畚與(?)** 斗落伏在中東西下芝里員仁字結卜十五負二束庫乙 價折錢文一百三十兩 依數捧上是遣 爲先還退之意 權賣爲去乎 日後以此憑考事  
 畚主 宋福憲 花押(이하 생략)<sup>20)</sup>

대부분 ‘傳來畚○斗落’이라고 하면 ‘○’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는 그 글자를 ‘與’로 해독하고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글자 곁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따라서 ‘○’에는 글자보다는 숫자가 들어가야 합리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移記할 때 제출자의 본문과 피제출자의 처분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처리한 점이다. 아래의 고목은 石串坊 座執 池處龍이 중영에 제출한 일종의 보고서이다.

石串坊五里班 座執等告目  
 右告目爲臥乎事 矣里賊漢林炳益逃走後 家舍自里內戶排除 己爲放賣救弊矣… 所餘在者 轉賭地畚三斗落也 定價75兩 放賣捧上緣由 告目爲臥乎事  
**依數捧上事**  
 三十日 中營印  
 兼中營處分  
 己丑 十二月 二十七日  
 座執 池處龍 告目<sup>21)</sup>

굵은 글씨로 된 ‘依數捧上事 三十日’은 이 고목을 받은 兼中營에서 내린 처분이다. 그러나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제출자의 청원과 피제출자의 처분을 구별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게 된다. 따라서 고문서를 移記할 경우, 그 처분은 문서의 맨 끝 상단에 ‘題音’ 또는 ‘題辭’라는 글씨를 쓴 후 그 아래에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sup>22)</sup>

20) 위 책, 98쪽.

21) 위 책, 165쪽.

22) ‘定價75兩’의 ‘75’도 잘못 이기한 것이다. 다른 숫자는 모두 한자로 쓰여 있는데 이 숫자만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 있는 점에서 그렇다.

셋째, 전제된 고문서에 매우 오자가 많았다. 물론 남한에서 재출간된 책을 가지고는 이것이 원래의 오자인지 아니면 재출판 과정에서 생긴 오류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책은 원래 북한사회과학원출판사에서 1965년에 출간되었다가 1989년에 남한의 한마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간행한 것이다. 재출판될 때 맞춤법 변경없이 원본을 그대로 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북한의 띄어쓰기 중에 지나친 것만은 고쳤다고 한다.<sup>23)</sup>

넷째, 오자 중에는 원본의 오류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이 토지매매문기는 1787년에 濟取라는 사람(성은 미상)이 그의 사촌에게 받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乾隆五十二年 丁未年 四寸兄主前明文 右明文事 有要用處 梧山下(忠州-필자)一日耕溫字田 六卜六束庫叱果 馬墳上清字田半日耕 四卜六束庫叱果 又一日耕 清字田 四日耕庫叱果 清字一日耕 十三負一束 價折錢文百九十兩以還退次此爲放賣 而年限 自今秋明春 至十年 準價還退事  
四寸兄 濟取(手決)<sup>24)</sup>

하나, 행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원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乾隆’부터 시작해서 ‘四寸兄主前明文’까지가 첫 행이며 ‘右明文事’부터는 행을 바꾸어 둘째 행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前明文’과 ‘右明文’ 사이에서 행을 바꾸어야 한다.

둘, 토지를 팔고 사는 사람이 모두 ‘四寸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四寸弟’가 되어야 한다. 추측컨대 첫줄에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四寸兄主’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파는 財主는 당연히 ‘四寸弟’가 되어야 한다.

셋, 이 문서의 첫 줄에 문서를 작성한 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의문이 생긴다. 물론 원문에 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넷, 띄어쓰기의 문제이다. 세 번째 줄의 끝부분 즉 ‘價折錢文百九十兩以還退次此爲放賣’는 ‘價折錢文百九十兩以’, ‘還退次’, ‘此爲放賣’로 띄어쓰기를 해야 한다.

## 4. 결론

서론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균형있는 학문적 발전을 위해 남북한 공동으로 고문헌조사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고문헌은 날로 훼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서둘러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문헌에 대해 지식을 차세대에 전수해주어야 하고 또 이를 이어갈 후속세대 육성을 위해서 고문헌의 공동조사와 연구는 우리 민족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3) 위 책, 「일러두기」 참조.

24) 위 책, 99쪽.

다.

<표 1> 『조선사료집진』에 수록된 북한 소재 고문서 목록

번호	문서종류	작성년월	발급자	수취자	관련 지역	내용	비고
1	錄券	1397년 10월	國王	沈之伯	咸南 端川郡	국왕이 沈之伯에게 수여한 공신녹권	상, 2
2	朝謝帖	1409년 3월	兵曹	沈彦冲	咸南 端川郡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沈彦冲에게 발급한 조사첩	상, 3
3	戶口單子	1490년 7월	沈洋	端川郡	咸南 端川郡	沈洋이 1490년에 작성하여 端川郡에 제출한 호구단자	상, 19
4	戶口單子	1523년 4월	沈守平	端川郡	咸南 端川郡	沈守平이 1523년에 작성하여 端川郡에 제출한 호구단자	상, 24
5	有旨	1627년 4월	國王	鄭鳳壽	平北 鐵山郡	국왕이 승정원을 통하여 정봉수에게 내린 유지	상, 65
6	奴婢推刷都案	1739년 9월	安邊郡	釋王寺	咸南 安邊郡	1739년에 노비추쇄한 결과를 작성한 명부	속, 115
7	賜給記	1791년 5월	國王	釋王寺	咸南 安邊郡	1791년 5월에 국왕이 釋王寺에게 노비, 토지, 鹽盆 등을 지급하면서 작성해 준 문기	속, 116
8	敎書	1792년	國王	僧 自超	咸南 安邊郡	1792년에 국왕이 僧 自超에게 贈號하면서 내린 교서	속, 122
9	檄文	임오년 정월	白慶翰	미상	平北 定州郡	白慶翰이 임오년 정월에 倡義를 주창하며 보낸 격문	속, 140

<표 2> 『고문서집성』에 수록된 북한 관련 고문서 목록

번호	가문 및 기관	문서종류	특징	집성번호
1	扶安 扶安金氏	所志	平山府使 사임 청원서	2
2	義城金氏 川上各派	敎旨, 敎牒	殷山縣監, 咸鏡道都事 등 임명장	5
3	瑞山 慶州金氏	敎旨, 有旨, 諭書	安邊府使, 平安道 觀察使, 開城府留守 등 임명장	8
4	藏書閣	請願書, 報告書	대한제국기에 작성된 平壤과 楚山 관련 청원서	10
5	居昌 草溪鄭氏	敎旨	平壤府儒學教授 임명장	23
6	靈光 寧越辛氏	敎旨	黃海道 都事, 高山道 察訪 등 임명장	27
7	龍仁 海州吳氏	敎旨	咸鏡北道 兵馬評事 임명장	36
8	求禮 文化柳氏	敎旨	咸鏡南道 兵馬虞候, 龍川府使, 豐川府使 등 임명장	37
9	扶餘恩山 咸陽朴氏	敎書, 敎旨	黃海道觀察使, 咸川府使 등 임명장	45
10	安山 晋州柳氏	敎旨, 勅命, 訴狀, 請願書, 訓令, 照會, 照覆, 牒報, 報告書, 告目, 望記, 公函, 命令書, 簡札, 기타	柳遠聲이 价川郡守로 재임하면서 작성한 각종 공문서	58
11	大田 安東權氏	有旨, 敎旨	平安道 兵馬節度使, 咸鏡道 觀察使 임명장	85
12	瑞山大橋 慶州金氏	敎旨	黃海道兼兵馬水軍節度使	86

&lt;표 3&gt; 『리두연구』에 인용된 고문서 목록

번호	문서종류	작성년월	발급자	수취자	관련 지역	내용	비고
1	貼	1357년 7월	僧錄司	全羅道 按廉使	全羅道 長城	僧錄司에서 覺眞國師의 제자들을 勿侵하고 사찰을 보호하라는 국왕의 지시[宣旨]를 全羅道 按廉使에게 전달하는 내용	333-337
2	貼	1378년 3월	監務官	長城郡司	全羅道 長城	監務官이 長城郡司에게 토지대장에 法孫 相續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왕의 지시를 전하는 내용	337-343
3	關	1407년 11월	監務官	白巖寺 三綱	全羅道 長城	監務官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白巖寺 三綱에게 慈恩宗 中德 戒天을 資福寺로 옮겨 가도록 지시하는 공문	343-346
4	(成文)	1401년 9월	太上王	赫致	한성	李成桂가 姪女 赫致를 위해 가옥을 지어 살도록 하면서 작성해 준 일종의 분제기. 며치는 후에 淑愼翁主로 봉해졌다.	357-360
5	(成文)	1518년 9월	魯山君夫人 宋氏	鄭眉壽妻 李氏	(한성)	魯山君夫人 宋氏가 재산을 鄭眉壽妻 李氏에게 주면서 작성한 일종의 분제기	360-363
6	遺書	1543년 2월	貞海君	世雄	미상	정해군이 적자 세웅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제기	363-366
7	立議	1546년 11월	慶尙觀察使	紹修書院	풍기	경상도관찰사가 院生 居接 등과 관련하여 소수서원에 내린 지시	366-368
8	立議	1547년 2월	安玉孫	紹修書院	풍기	紹修書院直인 安玉孫이 자신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소수서원에 제출한 자술서와 영천군수의 지시문	369-372
9	立議	1547년 8월	慶尙觀察使	紹修書院	풍기	경상도관찰사가 원생 거접과 관련하여 소수서원에 내린 지시	372-373
10	狀啓	1593년 정월	미상	국왕	함경도	함경도 관찰사가 왜적을 방어하던 鄭文學의 戰績을 국왕에게 알린 보고서	373-377
11	牒呈	미상	砥平縣監	(京畿觀察使)	砥平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보고서	377-378
12	關	병오년 11월	備邊司	慶尙觀察使	미상	세금을 납부치 않는 백성을 잡아다 엄히 다스릴 것을 알린 지시서	379-381
13	甘結	미상	(內需司)	營吏廳	미상	內需司에서 江原道 營吏廳에 보낸 지시서	381-384
14	招辭	1612년	黃愼	(鞠廳)	(한성)	黃愼이 金梯男 사건과 연루되어 국청에서 국문을 당할 때 제출한 진술서	384-390
15	招辭	1675년	救天	(鞠廳)	(한성)	救天이 국청에서 국문을 당하면서 제출한 진술서	390-392
16	招辭	1680년	姜萬鐵	(鞠廳)	(한성)	許積의 아들 許堅의 모반 사실을 밀고한 강만철이 국청에서 제출한 진술서	392-395
17	招辭	1680년	李栢	(鞠廳)	(한성)	이엽이 국청에서 허견의 모반과 관련하여 진술한 공초	395-401
18	明文	1579년 12월	李珥	權處均	(강릉)	李珥가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權處均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401-403
19	明文	1710년 5월	金自弘	奴 命立	미상	金自弘이 尹兵使宅 奴 命立에게 받을 팔면서 작성한 방매문기	403-404
20	明文	1799년 2월	朴天壽	奴 三取	미상	朴天壽가 尹寶城宅 奴 三取에게 받을 팔면서 작성한 방매문기	404-405
21	明文	1890년 11월	申雲祥	미상	威化面	申雲祥이 자신이 매들었던 위화도의 받을 모인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405-407
22	明文	1712년 3월	奴 永萬	奴 尙云	堤川	李生員宅 奴 永萬이 상진의 지시를 받고 노비를 尹生員宅 奴 尙云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문기(일괄문서)	407-416

<표 4>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 연구』에 인용된 고문서 목록

번호	문서종류	작성년월	발급자	수취자	관련 지역	내 용	비 고
1	명문	1848년 12월	丁有教	미상	미상	驛位田과 民田을 환퇴하기로 약정하고서 방대한 문기	40
2	소지	1734년 4월	金尙澤	碧沙道主	미상	京主人 金尙澤이 碧沙道 察訪에게 자신이 진 빚을 馬戶位畝과 바꾸기 위해 完文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문기	42
3	절목	일제시기	門長	諸族人	미상	位土畝과 時祭와 관련하여 문중에서 작성한 절목	52
4	서약문	일제시기	小作人	門中	미상	위토 소작인이 소작과 관련하여 서약을 하며 제출한 문기	52-3
5	標	1854년 11월	張鳳翼	地主	황해도 신천	소작인이 지주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賭地標	77
6	명문	1822년 5월	宋福憲	魚在潭	미상	논을 還退를 전제로 權賣하면서 작성한 문기	98
7	명문	1868년 9월	河相舜	楊基淳	미상	논을 환퇴하기로 약정하고서 권매한 문기	98
8	명문	1855년 4월	朴用大	鄭在德	미상	朴用大가 밭을 鄭在德에게 임시로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田姑賣主- 姑賣文記	98
9	명문	1798년 3월	金應河	李道白	미상	金應河가 李道白에게 밭을 환퇴하기로 약정하고서 방대한 문기. 還退明文, 還退放賣主 - 還退文記	98-9
10	명문	1787년	濟取	四寸兄	(충주)	濟取가 四寸兄에게 환퇴하기로 하고서 밭을 방대한 문기	99
11	배자	1851년 12월	上典	奴 龍金	楊根	上典 李某가 奴 龍金에게 밭 방매문기를 작성해주도록 지시한 문기. 배자임에도 증인과 필집이 있다.	99
12	판결문	1905년 5월	裁判長	蛤島居民	평안도 蛤島	蛤島居民의 收稅와 관련하여 재판장이 내린 판결문 일부	140
13	명문	1907년 4월	金學鳳	金世龍	압록강변	金學鳳이 金世龍으로부터 개간비를 받고 대신 도지권을 주면서 작성한 문서.	141
14	명문	1909년 12월	金斗南	미상	강남군	金斗南이 某人에게 賭地權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142
15	명문	1900년 12월	金基彦	미상	미상	金基彦이 壽進宮畝 賭地權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支定: 5석 15두 2수, 賭支: 1석.	146
16	표	1908년 정월	鄭昌植	미상	미상	鄭昌植이 明禮宮畝 賭地權을 전당잡히고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문기.	147
17	명문	1897년 7월	金尙弘	미상	義州府	金尙弘이 賭地權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문기	149
18	명문	1854년 11월	張鳳翼	미상	미상	移買次 郡繕田을 방매(도지권 방매로 추정)	151
19	標	1854년 11월	張鳳翼	미상	미상	賭地로 正租 11斗를 豊凶에 관계없이 備納하겠다고 약속	151
20	표	계묘년 정월	安學漸	미상	미상	賭地로 正租 10石 10斗를 豊凶에 관계없이 備納하고 田結 2복 8속을 담당하겠다고 약속	152



21	명문	1873년 11월	胡聖燁	미상	미상	中賭地權을 47냥에 방매. 중도지는 2석 13두	152
22	명문	1861년 11월	洪致景	미상	미상	京居洪生員의 13두 도지권을 移買次 45냥에 방매. 私印	154
23	명문	1846년 12월	洪治京	미상	미상	京人의 13두 도지권을 33냥에 방매. 私印	154
24	명문	1907년 4월	具然鎭	林祐敦	황해도 鳳山	봉산 영천방에 있는 논을 6,760냥에 방매	155
25	명문	1889년 11월	李永華	미상	威化面	위화도에 있던 밭의 도지권을 移買次 40냥에 방매	156
26	명문	1880년 정월	裴時正	미상	威化面	위화도에 있던 밭의 도지권을 30냥에 방매. 私印	161
27	手標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도지 문기를 전당하고서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문기.	162
28	標	1847년 12월	金氏	劉亨元	대동군	元賭地를 75냥으로 정한 후 흑시 말쟁일면 반환 약속	163-4
29	표	1840년 정월	朴斗成	미상	중화	원도지를 90냥으로 정하고서 작성한 표	164
30	告目	기축년 12월	池處龍	兼中營	평양시 돌곶방	座執 池處龍이 굴도지와 관련하여 中營에 제출한 고목. 굴도지[轉賭地]	165
31	판결서	1897년 4월	沈鐘舜	盧萬鎭等	평양 南祭山坊	並賭地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노만진의 승소를 확인한 판결서	167
32	명문	1858년 12월	李俊甫	미상	大耳島	7두락지 도지를 2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167
33	명문	1905년 12월	盧秉柱	미상	미상	蘆田의 도지를 4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167
34	표	1898년 10월	金基東	미상	馬井三里	김기동이 논 2石 3斗 5升落只의 도지를 乾租 15兩으로 바치기로 약속하면서 제출한 문서. 전도지의 지대를 支定	168
35	(명문)	1888년 12월	尹任朝	미상	馬井二里	關帝廟의 도지를 180냥에 전당하면서 작성한 문서. 支定 3兩	169
36	명문	1908년 12월	崔承鉉	미상	미상	중도지를 216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	171-2
37	표	1908년 8월	金成一	미상	미상	壽進宮堰內畝 20斗落의 도조를 正租 5石으로 정하고서 작성한 명문. 私種	172
38	명문	1903년 12월	朴鼎烈	미상	미상	논 5두락지의 도지를 73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명문	173
39	배자	1903년 7월	崔滿從	監官 등	(신천, 안악)	도지를 정조 70석으로 지정하면서 발급한 배자. 永稅	174
40	판결서	1909년 10월	金禹熙	미상	信川郡	도지를 永稅의 예에 의해 시행토록 판결한 판결서.	175
41	명문	1882년 2월	奴人介	미상	(晉州, 固城郡)	지주택 사내종이 병경권 즉 소작권을 350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親耕畝主. 實種	
42	명문	1864년 12월	奴水分	미상	미상	並耕畝 도지권을 23냥에 방매하면서 작성한 문기. 並耕畝主-作人	176
43	(표)	정미년 12월	崔元七	미상	미상	도지권을 典執하면서 작성한 문기. 並耕畝主, 典執-전당	176-7
44	수기	1877년 3월	奴元得	미상	(固城郡)	도지권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수기. 水賭地(물도지)	177

45	계약서	(1931년)	金庭赫等	미상	(진주군)	지주와 병작인의 병작계약서. 병작가 대지가(15/20)	177
46	진정서	1931년 4월	인민대표	미상	고성군	지주와 병작인 사이에 갈등으로 관에 진정한 문서	177-8
47	명문	1904년 9월	黃土文	미상	(전주)	황토문이 禾利畝 등을 방해하면서 작성한 문기	179
48	명문	1825년 2월	金百大 奴 永金	廣州		김백대가 本主에게 토지를 환퇴하면서 작성한 문기	181
49	명문	1888년 5월	奴 案得	奴 光用	미상	노 안득이 논을 노 광용에게 환퇴하면서 작성한 문기	182
50	명문	1903년 12월	奴 德成	奴 興福	(양주) 永平	노 덕성이 환퇴할 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서 노 흥복에게 밭을 방해하면서 작성한 문기	185
51	淤貫記	미상	미상	미상	양근군	제방 관개 비용을 받아내는 문기	186
52	명문	1900년 4월	朴尙道	미상	(강남군)	박상도가 토지를 모인에게 방매하며 작성한 문기	192
53	계약서	1920년 이후	이완용	소작인	미상	이완용이 소작인들과 맺은 농장 (소작인) 계약서	199-200
54	계약서	미상	張吉相	소작인	경상북도	장길상이 소작인들과 맺은 농장 소작인 계약서	200
55	수표	19세기 말	미상	奴 甲斐	(강원도)	모인이 도조를 50전씩 바치기로 약속하면서 작성한 문서	228
56	명문	1907년 12월	미상	崔昌浩	(평북)	모인이 매년 15냥을 지대를 바치기로 하고서 작성한 문서. 貸付 -소작	228
57	소지	1803년	미상	수령	함남 리원군	潛賣者 처벌을 요구하는 소장	233
58	병작표	1852년 2월	地主	미상	전남	地主가 某人에게 병작을 허락하면서 발급한 문기	242
59	성문	1855년 7월	成某	미상	평남	병작인이 지주에게 제출한 명문. 移作 -소작	242-3
60	명문	1906년 2월	지주 이택 소작 김일용	지주 이택 소작 김일용	경주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작성한 명문	243
61	수표	1866년 7월	金某	奴 八金	미상	金某가 3년 후 正租 30斗씩을 도조로 바치기로 하고서 陳田을 개간하면서 작성한 문기	244
62	수표	1868년 8월	李某	奴 슴?	미상	李某가 正租 58斗를 바치겠다고 다짐하면서 제출한 문기	245
63	표	미상	李致永	미상	미상	이치영이 도조로 매년 3석을 납부하겠다고면서 작성해 준 문기	245
64	표	1866년 정월	金碩士	미상	미상	金碩士가 某人에게 작성해 준 문기	245
65	표	1902년 12월	尹某	미상	미상	道士 尹某가 結稅와 賭支를 납부하기로 결정하고서 작성한 문기	245
66	證文	1878년 정월	奴 丹梅 奴 點順	奴 丹梅 奴 點順	미상	지주와 소작인이 경작을 위해 작성한 계약서	246-247
67	수표	1893년 2월	金某	朴得權	미상	지주와 소작인이 맺은 계약서. 소작기한 7년	247

68	認許證	1906년	財政署 長	소작인	미상	1906년에 작성된 역둔토 소작 인허증 양식	248
69	배자	1870년 2월	李青松 宅	奴 生星	(전북)	奴 生星에게 토지를 경작토록 허락하는 문기	249
70	배자	1865년 2월	渭文	奴 國之	晋州郡	奴 國之에게 토지를 경작토록 허락하는 문기	249
71	표	1870년 12월	徐丙玉	金鍾岳	(경기)	마름 서병옥이 김종악에게 移作토록 허락하는 문기	249
72	표	1864년 12월	方某	崔鍾泰	楊口郡	방모가 최종태에게 소작을 허락하면서 작성한 문기	249
73	차첩	미상	林畚主 宅	金天福	高陽郡	담동에 사는 담주 朴某가 李釗童이 경작하던 논을 金天福에게 移作토록 지시한 문기	249
74	차첩	1882년 2월	竹洞宮	盧大泳	文化郡	竹洞宮에서 盧大泳영을 文化結監 兼分水監官으로 임명한 문기	249
75	차첩	1901년 2월	英親王 宮	金濟浩	載寧, 馬山	英親王宮에서 金濟浩를 載寧, 馬山 屯監官으로 임명하는 문기.	250
76	발괄	1887년 10월	奴 水得	使道主	미상	秋收租를 盜賣한 盧奉伊를 처벌해주도록 요청한 문기	251



---

## 북한 古書의 연구와 조사방안



# 북한 古書의 연구와 조사방안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북한 소장고서의 조사를 위한<br>서지기술방식 |
| 2. 북한의 고서 및 연구현황 | 5. 결 언                       |

## 1. 서 언

선조들의 정신적 산물을 冊이라는 물리적 형태에 담은 古書는 발굴과 연구를 통하여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으며, 한국학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분야의 새로운 업적 창출이나 외세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의 복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고구려의 수도 평양, 고려의 수도 개성이 있는 곳으로 한반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민족으로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지역은 이러한 고서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항상 제외된 지역이었다. 이는 지난 수 십년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군사적 대립, 학문의 단절, 역사와 문화의 이질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북한의 고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

다행히도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고,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2000년과 2007년의 정상회담, 개성공단조성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등 다양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져서 그동안 이질화되었던 문화와 학문적 교류의 흐름이 이어지고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실제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시각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과 교류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북한 관련서적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내 북한관련 서적과 일본과 미국을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비치한 북한관련 자료실을 개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문분야에서의 교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북한 고서에 대한 조사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의의를 지니는 북한의 고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 검토의 일부이다. 북한의 고서에 대한 연구와 현존 유무와도 관련이 있는 조선시대 북한 지역에서 간행된 고서를 알아보고, 북한 고서의 소장기관, 이를 조사에 필요한 서지기술요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북한의 고서자료 및 연구현황

### 1) 북한의 도서관과 고서 소장기관

북한의 고서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대체로 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기관이나 각급 도서관에 소장된 고서의 현황은 현재로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평양에서 출간된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도서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비·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읽기 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sup>25)</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도서관은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현지 지도하고 이른바 ‘교시’와 ‘말씀’을 남길 만큼 북한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고서에 대하여서는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문헌유산들을 단순히 옛날에 만들어진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족의 투쟁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귀중한 재보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민족고전”이라는 개념으로 정식화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도서관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梁一雲<sup>26)</sup>, 송승섭<sup>27)</sup>에 의해서 개괄적인 현황이 소개되고 한상완<sup>28)</sup>, 정분희<sup>29)</sup>에 의해서 도서관 정책과 제도, 정보자료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국외의 대표적 연구로는 高哲義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圖書館事情”<sup>30)</sup>과 일본판 및 불어판으로 共譯된 「人民大學習堂」등이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북한의 도서관은 국가지도체계상 행정기관에 속하는 정무원 교육위원회 산하 도서관지도국이 담당하며, 도서관지도국은 산하에 도서관운영관리방법연구소와 과학도서관망, 군중도서관망을 두고 사서의 검정시험을 관리한다. 주요 임무는 김정일 위원장

25)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760.

26) 梁一雲, “北韓의 圖書館”, 北韓, 제126호(1982), pp.108-119.

27) 송승섭, “북한의 도서관”,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논집, 제4집(1994), pp.155-185.

28) 한상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1996), pp.88-123.

29) 정분희, “남북한 도서관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30) 高哲義,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의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제81권 제8호(1996), p.455-456.



의 도서관에 관한 지시, 당과 국가와 연관된 방침정책을 집행하며, 도서관에 관한 설치, 포국, 규정, 규범 등의 법규성 문건을 제정하고, 아울러 감사집행의 상황을 감독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고교부와 보통교육부에서는 도서관업무를 관리하는 전문인원을 갖추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과학원, 공장기업, 합작농촌, 과학기구의 상급주관부문에 도서관위원회가 있어 그 계통의 도서관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도행정 경제위원회에서 교육부를 설립하였고 시, 군, 구에서 설립한 교육과에서는 본지역의 도서관업무를 관리하며, 도서관지도국에는 도서공급소가 각 도, 시, 군에는 도서공급과가 설치되어 있어 각 도서관에 교육부문의 출판물을 공급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도서관협회는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IFLA에도 가입되었고, 협회 사무국은 평양의 국립중앙도서관내에 있다

북한의 도서관은 문화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대표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인민대학습당이 평양에 있고 지방에는 각 도립, 직할시립, 시·구역 군립도서관과 아동도서관이 있는데, 이러한 도서관류를 이른바 '군중도서관'이라 통칭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자료실 또는 도서실, 독서실과 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시키고 있다. 군 단위 이상에 1개씩의 도서관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 이외에도 사회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도서관은 대상으로 하는 독자계층,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내용, 가지고 있는 출판물의 특성에 따라 군중도서관, 과학도서관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군중도서관은 다시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나뉘어지며, 과학도서관은 종합적인 과학도서관과 전문적인 과학도서관으로 나뉘어진다.

이 중에 고서를 소장하고 이를 관리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근래까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다만 최근에 상호협력 교류를 통하여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조선사회과학원에 집중적으로 고서가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민대학습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남한측 인사들이 방문한 북한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수도 평양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1982년 4월 4일에 개관되었는데 건축면적 23,000㎡, 연건축면적 100,000㎡, 높이 63m, 너비 150m, 길이 190m로 건립당시 북한에서 가장 큰 10층 조선식 건물로 방 수는 60여칸이다. 3,000만책의 소장능력을 가진 서고, 6,000여개의 좌석을 가진 열람실, 강의실, 통보실, 문답실, 음악감상실, 컴퓨터교육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강의실과 통보실에는 현대적인 교육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정무원이 직접 지도하는데 총장 1명, 부총장 4명을 두고 교육, 번역, 과학 및 도서관리업무를 나누어 관리한다. 기구설치는 교육국, 번역국, 출판국, 목록통보처, 과학연구처, 녹음처, 도서목록취재처, 도서관리처, 도서대출처, 국제교환처, 대외업무처 그리고 후방근무 관리부 등이다. 직원은 모두 1,000여명으로 교원, 과학연구원이 250명인데 그 중의 40%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 과학이론강연, 과학기술강습, 집중강의, 외국어강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열람뿐만 아니라 대출, 통신대출, 이동문고, 현장강의 등의 서비스

도 지원한다.

한편 대표적인 대학도서관으로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은 1946년 대학창립과 같이 개관하였으며 1,000석의 열람석과 200만책의 소장능력을 가진 4층 건물이다. 북한의 과학문헌기지의 성격을 갖는 대학도서관으로 장서는 과학분야의 서적을 중심으로 약 200만권이 구비되어 있고, 시설규모는 일시에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口'자형으로 건축되었고 관내에서의 도서열람외에 대출, 독자모임, 참고문헌 발행 등의 사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서관의 조직구성은 수집편서부, 분류통보부, 열람부, 장서부, 김일성주석 노작자료부, 복사부, 사진부, 제본부, 재정부가 있고 100명의 사서와 40명의 일반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장서는 1986년 현재 3,400여종의 잡지를 포함하여 200만책이다. 장서의 정리는 동관 제정의 십진식 분류표를 사용하여 언어별로 장서의 분류목록, 서명목록, 저자명목록을 갖추고 있다. 1984년에는 정무원의 결정으로 교육 및 과학연구활동 조건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해 각 기관이 입수한 출판물 중 전문과학잡지와 도서를 과학도서관에도 인민대학습당과 같이 배당하여 도서자료의 수집활동을 충족시킨다고 한다.

최근에는 남한의 한양대학교 도서관과 협력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는데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이에 추진된 주요 문화협력사업으로 남측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북측에서 구축한 서지정보와 원문정보를 남측이 학술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서와 관련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은 여러 나라의 외서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고전들을 번역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서목록으로 발간한 1종이<sup>31)</sup> 국내에 알려져 있는데 1958년에 출판된 자료로 간략하게 작성되었지만 그 당시까지 소장한 고서를 수록하고 있고 목록작성의 범례를 수록하고 있어서 서지기술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사회과학원은 1964년 2월 17일 내각결정 제11호에 의해 '사회과학 부문 연구기관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정책을 합리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을 만들어내며,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것이 주요임무로 되어 있다. 국가통제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산하에 고고학연구소·경제연구소·역사연구소·언어학연구소·법학연구소·철학연구소·주체사상연구소·문학연구소·민족고전연구소·통일문제연구소를 두고 있다.<sup>32)</sup> 최근에 그동안 '북핵'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를 보였던 '남북직지찾기공동사업'에 조선사회과학원 산하 민족고전연구소에서 남북직지찾기공동사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민족문화유산인 직지를 공동으로 찾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기도 하였다.

## 2) 북한 고서의 연구

31)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편,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도서목록-한서분류목록-, 평양: 동관, 1958.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20책, "조선사회과학원",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북한에서 고서연구의 대상은 주로 역사서, 지리서, 과학서 등이며 소위 민족고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주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근래에 들어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 옛날책의 개념으로 고서 고적의 개념을 민족고전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사회과학원내에 민족고전연구소를 설립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문헌유산들을 단순히 옛날에 만들어진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족의 투쟁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귀중한 재보로 보아야 한다”는 데로 부터 그것을 민족고전이란 개념으로 정식화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북한지역에서 발간한 자료로서 고서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지만 현재 남한에 알려진 「조선서지학개관」과 「조선출판문화사」, 「조선고전해제」<sup>33)</sup>등이 그나마 북한의 서지학이나 고서연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중에 「조선고전해제」에 대상이 된 고서는 약 800여종으로 없어진 책도 수록하고 있어서 실존여부가 불분명하며, 고서의 기준으로 1910년 이전에 저작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의 연구논문에 실린 문헌의 기준에는 민족고전의 개념을 서지문헌과 금석문헌으로 구분하고 서지문헌을 다시 도서와 문서로 구분하였고, 도서는 과학도서와 문예도서로, 과학도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으로, 문예도서는 문학도서와 예술도서로 구분한 바 있다.<sup>34)</sup>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의 제약으로 망라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해본 결과 북한에서 고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하는 역사서, 지지와 지리서, 농업·의학과 관련된 과학서, 한글문헌을 포함하는 문학서, 문화재로 남아있는 자료 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남한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지방 간행 서적 및 판본에 관한 연구로 전국적인 지방간행 서적에 관한 연구 및 특정 지방에서 간행된 서적에 관한 연구에서 극히 일부분 언급한 것이 있다. 이 중에서 북한 지역 간행의 고서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평양<sup>35)</sup>과 함경도<sup>36)</sup>을 다룬 2편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고서와 고지도로 보는 북한”이라는 제하에 전시회를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북한의 「리조실록」 번역과 관련한 남한의 평가나, 북한 저작물의 국내 영인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활동도 나타난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국내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 소장 고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최근에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청주고인쇄박물관, 북측의 민화협 및 주요 전적자료 소장기관 등이 협력하여 북한 소장 고서·고문서 등 전적

33)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문헌연구실 편, 「조선고전해제」,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34)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력사과학」 160호(1996년 4호) p.39.

35)尹炳泰. 平壤의 木板印刷 出版文化, 「出版學研究」, (1992.12) p.187-212.

36) 장유승, 17-18세기 함경도 지역의 문집편찬과 서적간행, 「書誌學報」 27 (2003.12) p.45-78.

자료에 대한 해제 및 목록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요소장기관은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사회과학원 등인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고서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것, 북한소장자료만이 아닌 남한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것 등 남한자료와 북한자료가 상호보완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북한지역 간행고서

북한 지역 간행 고서는 북한의 소장 고서를 조사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전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소장 고서중에 현전하는지의 여부를 비록확인할 수 없지만 남한에 현전하는 실물자료가 일부 있고 이는 차후에 북한자료로 보충할 수 있거나 북한에 남아 있는 자료는 남한 자료로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과 일치하는 고서가 조사대상에 포함되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다.

각종 실록이나 기록문헌에 남아있는 북한의 간행서적을 조선전기의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북한 지역에서 간행한 사실과 서울이나 타지역에서 책을 인쇄하고 이를 북한지역에 인송하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예를들면 조선초기만 해도 북한 지역에서 간행한 사실로 1403년 평양부에서 「朱文公家禮」 150부를 인쇄하였고(태종3년 8월 29일), 1437년에는 「漏籌通義」를 함길도와 평안도의 各官에게 내려주기도 하였다.(세종19년6월18일)

1440년에는 開城府의 刊板으로 「東國文鑑」, 「銀臺集」, 「儀禮」, 「御製大平集」 등 各一二件을 印進케 하였고,(세종22년4월25일) 책을 하사하는 기록은 그 외에도 국경지대에 부임하는 관료나 그 지역 유생에게 「武經七書」 등의 병서나 經書를 내린 것이 많다.<sup>37)</sup> 하사받은 서책을 저본으로 다시 간행하기도 하였는데 1483년에 鄭文炯이 永安道(咸鏡道)에서 돌아와 書籍이 적음을 啓하고 詩, 書, 庸, 學의 善本을 보내 諸邑에서 간행할 것을 청하고 이에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성종14년10월24일)

그리고 현전하는 간본으로 15세기만 해도 1415년 평양부에서 발행한 「新刊音點性理羣書句解」와 1456년에 같은 장소에서 간행한 「獨谷先生集」, 1484년 평양부에서 간행한 「救急易方」 등은 국내외에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불경자료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1420년 黃海道 殷栗郡 九月山長佛寺에서 간행한 「妙法蓮華經」, 平壤府 訥山 天明寺 「預修十王生七經」 1468년 개성부의 간경도감에서 중수한 「圓宗文類集解」, 1489년 황해도 瑞興의 慈悲嶺寺에서 찍은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이듬해(1490) 같은 장소에서 찍은 「蒙山和尚六道普說」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사촬요」 등 각종 책판목록에 전해지는 자료도 남아있는데 각 도읍마다 감영에서도 상당수의 책판 판각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서책의 간행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북한지역간본이 수록되어 있는 책판목록을 대략 살펴보면 표-1 과 같다. 주요간행지역은 평양, 영변, 함흥, 해주 등의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

37) 「成宗實錄」 卷11, 成宗二年七月丁酉, 永安道(咸鏡道)에 四書, 五經, 通鑑, 小學, 楚辭, 柳文, 古文眞寶 等の 冊을 賜함.

「成宗實錄」 卷62 成宗六年十二月癸卯, 平安道 儒生에게 四書五經을 印送하여 줌.

소장하였던 책판은 다음과 같다.

#### 平壤

家禮補注 / 高廉草書 / 古文精粹 / 古文眞寶 / 救急方 / 九成宮 / 九成宮醴泉銘 / 勸文論 / 歸去來辭 / 龜文圖 / 龜文旨 / 箕子志 / 南溪禮說 / 老乞大 / 農書 / 大略韻 / 大明律 / 大雨賦 / 大學中庸 / 大學千字 / 大學 / 獨谷集 / 東國通鑑 / 東萊博議 / 童蒙先習 / 童蒙須知 / 銅人經 / 孟子 / 朴通事 / 百聯抄解 / 範學全編 / 兵衛森 / 補註古文眞寶 / 鳳麓集 / 三十二體篆隸書 / 三韻通考 / 書傳口訣 / 鮮于樞赤壁賦 / 雪菴集 / 雪菴千字 / 性理群書 / 聖學十圖 / 小學 / 宋元節要 / 詩大文 / 詩傳 / 新釋朴通事諺解 / 新釋清語老乞大 / 心經 / 十九史略 / 蓮亭集 / 浣花流水 / 蠶書 / 張汝弼書法 / 張汝弼書帖 / 赤壁詩 / 政經 / 種德新編 / 周易 / 中庸 / 證道歌 / 楚辭 / 春種 / 春秋 / 翠虛集 / 治庖易驗 / 韓文 / 韓文正宗 / 黃疽瘡方 / 孝經

#### 平安監營

擊蒙要訣 / 箕子外紀 / 紀效新書 / 論語講經 / 大明律 / 大典通編 / 大學講經 / 讀書錄要語 / 東溟集 / 童蒙須知 / 東州前集 / 孟子講經 / 孟子大全 / 勉齋集 / 明義錄 / 閔文忠公奏議 / 兵將圖說 / 史記英選 / 司馬法 / 倭川詩鈔 / 沙村集 / 三綱行實圖 / 三經四書講經 / 三略 / 三禮儀 / 喪禮備要 / 書傳講經 / 小學諺解 / 續兵將圖說 / 續三綱行實 / 續平壤誌 / 孫武子 / 松江歌辭 / 詩傳講經 / 新註無冤錄 / 吳子 / 尉繚子 / 六韜 / 二倫行實圖 / 李衛公問對 / 將鑑博議 / 朱書百選 / 周易講經 / 周易本義口訣附說 / 中庸講經 / 芝村集 / 闡義昭鑑 / 通鑑節要 / 平壤志 / 荷棲集 / 鄉禮合篇 / 華東正音通釋韻考 / 訓義小學大全 / 欽恤典則

#### 寧邊

景德傳燈錄 / 古經一篇 / 古鏡重磨方 / 高峰禪要 / 高王經 / 觀心經 / 龜鑑 / 金剛經 / 金剛般若波羅密經 / 起信論 / 論語具解 / 論語大全 / 論語諺解 / 楞嚴經 / 大彌陀經 / 大學具解 / 大學大全 / 大學諺解 / 大慧普覺禪師書 / 萬行首楞嚴經 / 孟子具解 / 孟子大全 / 孟子諺解 / 鳴臯集 / 妙法蓮華經 / 梵網經 / 法華經 / 史略 / 三略 / 喪禮備要 / 書狀 / 書傳具解 / 書傳大全 / 書傳諺解 / 禪門拈頌說話 / 禪要 / 禪源諸詮集都序 / 說話 / 小彌陀經 / 小學 / 小學大全 / 孫武子 / 詩傳具解 / 詩傳大全 / 詩傳諺解 / 心經 / 心經附註 / 十九史略通攷 / 十王經 / 延命經 / 蓮宗寶鑑 / 玉樞經 / 圓覺經 / 圓覺了義經 / 恩重經 / 傳燈錄 / 節要 / 諸般冊 / 造像經 / 周易具解 / 周易大全 / 周易諺解 / 中庸具解 / 中庸大全 / 中庸諺解 / 地藏經 / 初心 / 緇門 / 八陽經 / 華嚴經

#### 咸興

古文眞寶 / 百行源 / 四體千字 / 三灘集 / 西征錄 / 十九史略 / 略韻 / 莊子 / 周易參同契 / 和隱集

#### 咸鏡監營

家禮 / 擊蒙要訣 / 警民編 / 啓蒙傳疑 / 廣濟秘笈 / 句解南華眞經 / 龜鑑集 / 近思錄 / 倚岩集 / 論語 / 論語大全 / 論語諺解 / 楞禮文 / 楞嚴經 / 大學 / 大學大全 / 大學諺解 / 讀史隨筆 / 讀書錄要語 / 讀書要語 / 東溪集 / 東溟集 / 童蒙須知 / 東州前集 / 孟子 / 孟子大全 / 孟子諺解 / 孟諺 / 武經要節 / 般若集 / 法華經 / 兵衛森 / 兵將圖說 / 北關陵殿誌 / 三綱行實圖 / 三略 / 三韻通考 / 喪禮備要 / 書諺 / 書傳 / 書傳大全 / 書傳諺解 / 雪菴東銘 / 雪巖集 / 性理字義 / 性理學義 / 世尊行跡 / 小學 / 小學諺解 / 詩傳 / 詩傳大全 / 詩傳諺解 / 新傳煮硝方 / 心經 / 心經附註 / 十九史略通攷 / 漁山集 / 御筆千字 / 歷代史論 / 易諺 / 易學 / 易學啓蒙 / 易學啓蒙補解 / 易學集 / 五禮儀鈔 /

浣花流水 / 恩重經 / 倚巖集 / 二倫行實圖 / 篆海心鏡 / 靜觀齋集 / 種德新編 / 周易 / 周易大全 / 周易診解 / 周易參同契 / 竹牕集 / 中庸 / 中庸大全 / 增補三韻通考 / 清虛集 / 楚辭 / 初學字訓增輯 / 春種 / 春種集 / 忠武公家乘 / 澤堂年譜 / 通鑑節要 / 鞭羊集 / 韓濩千字 / 咸興本宮儀式 / 行軍須知 / 湖洲集 / 華嚴經 / 火炮式診解 / 孝經大義 / 訓義小學大全

#### 海州

家禮 / 簡易方 / 擊蒙要訣 / 警民編 / 公子廟碑 / 救荒輯要 / 近思錄 / 近思錄釋疑 / 近思釋疑 / 蘭亭 / 蘭亭春種 / 南窓集 / 魯齋集 / 論語大文 / 大唐中興頌 / 大字歸去辭 / 大學 / 陶山記 / 杜詩 / 梅花詩 / 孟子大文 / 兵學指南 / 史記 / 史記列傳 / 三綱行實 / 三韻通考 / 上樑文 / 桑榆集 / 書大文 / 書釋 / 成謹甫集 / 聖學十圖 / 聖學輯要 / 小學 / 小學大全 / 續三綱行實 / 宋史 / 守夢集 / 詩大文 / 詩釋 / 新增類合 / 必法 / 安平勸農教 / 安平書法 / 安平書帖 / 歷代將鑑博議 / 易釋 / 詠史詩 / 唐大文 / 唐學大文 / 柳記 / 柳記必法 / 幽懷不可瀉 / 栗谷續集 / 栗谷集 / 二倫行實 / 將鑑博議 / 篆千字 / 鄭蕪杜詩 / 中庸 / 中庸大文 / 陳書 / 聽訟筆法 / 春種 / 濯纓集 / 退溪大字細字 / 筆陣圖 / 學大文 / 韓碑 / 漢書列傳 / 或問大學 / 或問中庸 / 和劑方 / 回文詩 / 晦庵詩文集 / 晦庵詩文抄

#### 黃海監營

救荒撮要 / 軍布蕩滅綸音 / 禁鬻事目 / 大典通編 / 明義錄 / 白沙集 / 兵將圖說 / 兵學指南 / 三綱行實 / 三綱行實圖 / 疎菴集 / 小學診解 / 守夢集 / 崇儒重道綸音 / 御製雲漢篇 / 雲漢篇 / 尹公白沙集 / 二倫行實 / 二倫行實圖 / 字恤典則 / 再思堂集 / 闡義昭鑑 / 火炮式診解 / 訓義小學 / 訓義小學大全 / 欽恤典則

### 3. 북한 소장고서의 조사를 위한 서지기술방식

고서조사사업에서 주요 소장처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소장기관의 분류규칙이<sup>38)</sup> 정해지면 목록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록의 작성은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사업(해제, 탈초, 원문DB, 번역 등)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고서 조사사업에 있어서 목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고서에 관련된 정보의 획득과 연구는 서지목록을 찾는 데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조사를 위한 서지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전제적 요소와 실제 서지기술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1) 서지기술을 위한 전제적 요소

38) 고서의 분류법은 劉歆의 七略에서 비롯하여 四部分類法, 四部改修法 등 여러 분류법으로 변천하여 왔고 현대에 와서는 십진분류법 및 독자적인 展開式 分類法 등도 고서에 적용되어 채택되고 있다. 김일성대학도서관에서는 1958년도의 목록에 사부분류법에 叢書를 추가한 5부 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소장기관의 특색에 따라 도서관의 방침, 즉 보존중심인가, 이용중심인가, 또 소장고서의 주제들이 특정주제 중심인가, 전반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소장고서는 소장처에서 적용한 분류법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고, 없을 경우 그 소장처의 성격에 맞게 정해주면 될 것이다.

북한의 고서목록이 기존에 카드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면 고서목록작업은 도서관자동화의 추세에 따라 전산화된 목록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카드형 고서목록의 단점을 충분히 개선시키고 이미 전산화되어 이용자의 검색과 데이터의 처리가 용이하게 된 일반도서관의 목록형식에 맞추어 목록작업을 행하므로써 통일성을 유지하게 되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책자형태의 고서목록 발간과 연결지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력형식의 일관성 유지와 비교적 상세한 記述方式의 채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표준안이 마련된 KORMARC 형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추세이며, 이는 도서관간 데이터 공유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혹 북한에서 고서용으로 쓰이고 있는 자동화목록시스템이나 규칙이 있다면 상호 협의를 통하여 통일성 있는 규칙을 정하여야 하며 호환성이나 온라인서비스 등 목록작성 후 이루어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자료로 고서목록규칙이나 목록기재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앞서 언급한 「조선고전해제」의 일러두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표제, 책명, 저자명, 장정형태, 판본형태, 책수, 권수 등의 항목설정과 책명의 통칭, 약칭, 별칭등에 대한 예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1965년에 어느 정도 정리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1958년 김일성대학교도서관 소장 한적목록의 목록기재 방식은 보다 간단하게 작성하고 있는데 서명 분류기로 편저자 편저자의 호 생몰년, 판본, 크기, 발행년, 발행소, 발행지 등을 적고 있다. 특별히 저자의 號를 적었고, 출판사항의 기재순서가 반대이다. 판본의 구분은 鑄字, 木刻, 木活字, 陶活字, 鉛活字, 筆寫, 影印, 石版, 謄寫, 稿本 등이다. 목록의 작성 형태나 배열 순서, 기재 항목 등을 살펴보았을 때, 대체로 남한의 고서목록규칙을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서지사항을 기술하기 전에 고서의 성격을 파악하는 주요 요소로 편간의 주체, 주제, 형태(판본 및 기타), 편간시기, 지역, 소장처 등을 들 수 있다.

편간의 주체는 왕실, 중앙 및 지방기관, 사찰, 서원, 향교, 개인, 문중, 상업출판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왕실은 전적편찬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주체로서 조선시대 출판문화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왕실의 편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은 규장각과 장서각이며 자료 중에 최근에는 왕실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왕실서책의 간행이나 보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장서각의 소장서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서의 주제는 經, 史, 子, 集의 전통적 사부분류법으로 구분하였을 때 그 하위 개념인 각 類門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각 類門은 다시 세분할 수 있으며 특정 주제의 고전적은 현대의 학문분야와 연계하여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학문분야의 역사를 다루고자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문분야의 고전적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해당 주제분야의 관련 연구자들의 1차적인 연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제적 접근이다.

고서의 형태는 판본, 표지, 장정, 종이, 먹색, 크기, 판심, 반곽 등 형태적인 특징에 따라 간행시기의 추정이나 간행주체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요소이다. 그 중에

판본은 금속활자본, 필사본, 목판본, 목활자본, 연활자본, 석인본, 신식인쇄본, 탁본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간행이 이루어진 자료와 필사본으로만 남은 자료, 간본과 필사본이 동시에 나타나는 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대마다 판본별 특징이 있어서 경제적 측면과 함께 그 전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다른 형태적 특징 중에서 최근에는 표지의 문양, 종이의 지질, 판심 등이 시대판정의 중요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고서의 편간시기는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각 시기별로 다시 왕조나 세기별로 세분하거나 특정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때에 시기 추정의 방법, 서지기술의 요소에 따른 시대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 등이 주요 관건이다.

고서 편간의 지역은 자료의 형태나 언어의 사용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고전적은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평안, 황해, 함경 등 각 지역별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정사건이나 시기에 따라 지역의 간행자료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서의 소장처는 “그 시대 지식의 양”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고전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장서는 奉謨堂에 보존되어 있던 역대 임금의 모후서외에도 설립 초기에 적상산사고로부터 移奉된 도서와 서울 각처 군영으로부터 이관되어 온 군영 관계 서적, 그 밖에 황실에서 새로 구입한 도서, 창덕궁 안 선원전에 수장하고 있던 謨訓書, 6·25 이후 樂善齋에서 이관된 한글소설류, 七宮의 수장본, 1970년 宗廟 및 여러 陵齋室 등에서 典禮관계 도서가 이관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장서처로서 왕실내에는 많은 전각과 기관이 있었으며 이는 각 서책에 날인된 장서인이나 장서기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소장처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라진 기관이나 기구, 개인의 장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구왕실 및 각급 기관, 개인의 자료를 복원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입법, 사법, 교육, 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2) 고서의 서지기술 요소

서지기술의 요소는 위와 같은 전제적 주요 요소를 표준화된 체제의 틀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크게 구분하여 볼 때 서명 저자사항, 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 고전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이러한 서지기술요소의 올바른 기입이 매우 중요하며 각 기술요소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간행시기를 추정하게된다. 즉 간기, 서문, 발문, 권책수, 서체, 피휘 등을 분석하여 시기를 추정하고, 저자, 필사자, 각수 및 판의 모양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식별하며, 종이, 떡, 나무 등은 과학적 분석방법으로도 식별할 수 있다.

주요 서지기술 사항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조사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서지기술이 적용되는 고서조사표는 표-2와 같다.



① 著者事項 : 저자의 기술방법이 다양하며, 고전적의 편찬 주체를 파악하는 것에 해당한다. 저작의 종류가 著, 撰, 造, 編(또는 纂, 修), 輯(또는 集), 補(또는 增補), 校(校訂), 注(註 또는 疏), 批(또는 評), 譯, 節錄, 記, 懸吐(標點 또는 訓點), 書, 畫 등으로 다양하므로 이것의 기술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혹은 책에 그 종류의 표시가 없더라도 저작자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補記하여야 한다.

② 書名 : 서명기술사항의 출처로서 신간서는 흔히 표제지를 근거로 삼고 있으나, 고전적은 표제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대신하는 것이 권수제이다. 권수제 이외에도 권미제, 서·발제, 목차 앞 서명, 제첨, 판심제 등이 있으나 권수제를 으뜸정보원으로 삼는다. 권수제마저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때는 으뜸정보원과 부차적인 정보원에서 조사하여 기술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정보가 모두 부적합하다면 참고자료 또는 다른 문헌에서 조사하여 보충하되 각괄호[ ]로 묶어야 한다. 고전적에서는 불완전한 서명이 많아 다른 문헌을 참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③ 版事項 : 고전적의 판사항은 판차와 판의 명칭 표시이며 이는 동 저작의 간행의 순서와 異版을 식별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판차는 첫판 이후 연속적으로 간행된 여러 판에 대한 선후 순서로서 근간된 고전적의 경우에는 초판, 재판, 증보판을 의미하고, 그 이전의 고전적에는 原刻(刊) 또는 初刊(初刻), 重刻(重刊) 또는 後刻(後刊), 增補, 飜刻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판의 명칭은 목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필사본, 영인 또는 복제본으로 나누고 각 명칭을 구체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刊記事項 : 한국 고전적의 대부분은 간행사항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근간된 고전적은 표제지와 판권지, 그 이전에 간행된 고전적은 木記, 刊記, 印記, 寫記, 序文, 跋文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다. 간행연도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新書는 서력기년을 중심으로 표시하지만, 고전적은 연호에 의한 기년, 즉위기년, 간지기년, 간지의 고갑자에 의한 기년, 간지의 특수기년, 갑자기년 둘이상의 간행년, 서, 발년, 추정연도, 후쇄문제, 필사연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재해야 한다.

⑤ 形態事項 : 고전적의 형태사항은 장정, 권책수, 삽도류 및 판식, 책의 크기 등이 그 대상이다. 이의 기술은 KORMARC 고서용 포맷을 참조할 수 있다.

#### 形態事項 表示

ㄱ. 卷冊數 : 2권1책 이상은 권책수를 표시하고 本集과 구분되는 續集, 別集, 附錄, 目錄 등이 卷次, 冊數를 달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권책수를 전체 권책수 다음에 원괄호로 묶고 표기한다.

ㄴ. 插圖 : 插畫, 地圖, 寫眞 등이 책에 삽입되어 있는 것은 이를 卷冊數 다음에 기재하고 일반주기에 插圖의 內容을 기록한다.

ㄷ. 匡廓 : 匡廓은 四周雙邊, 四周單邊, 上下單邊 左右雙邊 등으로 표시하고, 半葉 匡廓의 크기를 '半廓 세로×가로cm'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匡廓, 界線, 行字數, 版心の 표시는 그 版本이 筆寫本, 石印本, 新式活字本, 新式印刷本, 影印本인 경우 생략한다. 단 筆寫本이라도 匡廓, 界線, 版心 등이 木板本또는 活字本일 경우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ㄹ. 界線 : 界線이 있는 것은 匡廓의 크기 다음에 '有界'로 기재하고, 없는 것은 '無界'로 표기한다.

ㄱ. 行字數 : 本文이 있는 한 장 半葉의 行數와 每行의 字數를 界線 표시 다음에 기재한다. 半葉의 行數나 一行의 字數가 일정치 않은 경우 '行字數不正', '字數不正' 등을, 二行 이상의 註가 있는 경우는 '註雙行'을 行字數 표시 다음에 각각 기재한다

ㄴ. 版心 : 版心은 黑口가 있는 경우에 '上下大黑口', '上下細黑口' 등으로 표시하고 魚尾 표시는 흑구 또는 行字數(黑口表示가 없는 경우)의 표시 다음에 한다. 그 기재에 있어서는 '上下(內,下)向 四(二, 五, 六, 八)瓣 黑(白)魚尾', '上下(內)向有紋黑(白)魚尾'등과 같이 표시하고, 같은 책에 다른 종류의 版心이 나타날 경우 원괄호로 묶고 '一部分...'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ㄷ. 책크기 : 表紙의 '세로×가로cm'의 형식으로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⑥ 註記事項 : 주기사항은 서명과 저자사항, 판사항, 간기사항, 형태사항, 총서명 등에서 기록하지 못한 부분의 부가적인 기입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 고전적은 자세한 서지적 정보 내용을 追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지시어를 내세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명, 저자, 간사사항, 형태사항, 서지내력, 소장본 목차, 합철 등에 관한 상세한 주기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간행년대의 파악을 위한 주요항목으로는 刊記, 序文, 跋文, 판식, 장서인과 內賜記, 종이, 책지의 지질과 종류 등을 들 수 있다. 전적의 판식은 시대에 따라 유행양식이 있었으며 장서인과 內賜記, 종이, 책지의 지질과 종류는 시대성과 지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식별은 해당 전적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만들어 졌는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특히 중간본이나 번각본과 같이 그 책의 내용과 형태의 분석만으로는 간행년대의 추정이 어려운 경우 책지의 식별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고전적의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항목으로 刻手, 표지문양, 배접지, 장서기, 口訣 등이 있다.

&lt;표-1&gt; 조선시대 북한지역 간본이 수록되어 있는 책판목록

지역 <sup>39)</sup>		攷事撮要 (1576- 1583)	古書冊板有 處攷 (1700)	冊板 置簿冊 (1740)	完營冊 板目錄 (1759)	古書冊板有 處攷 (1776)	各道冊 板目錄 (1778)	各道冊 板目錄 (1840)
강원도	杆城	0	0	2	0	4	0	0
	伊川	0	0	0	0	0	0	0
	鐵原	0	0	0	0	1	1	5
	淮陽	0	0	0	0	0	0	0
	소계	0	0	2	0	5	1	5
경기도	開城	0	1	0	0	0	4	3
	朔寧	0	0	14	0	0	18	0
	소계	0	1	14	0	0	22	3
평안도	平安監營	0	0	0	0	0	53	0
	關西節度營	0	0	0	0	0	1	0
	江西	0	0	0	0	0	3	3
	詳原	1	0	0	0	0	0	0
	成川	0	0	0	0	0	1	11
	寧邊	0	0	0	0	0	19	42
	龍岡	0	0	0	0	0	3	0
	慈山	0	0	0	0	0	1	0
	中和	9	0	0	0	0	0	0
	平壤	55	0	0	0	0	5	4
	咸從	2	0	0	0	0	0	0
	소계	67	0	0	0	0	86	60
함경도	咸鏡監營	0	0	33	42	0	0	0
	鏡城	0	0	0	0	0	2	0
	吉州	0	0	1	0	5	2	0
	端川	0	0	0	0	4	0	0
	文川	0	0	1	0	0	0	0
	北靑	0	0	0	0	1	1	0
	安邊	4	0	2	0	2	0	0
	定平	0	0	1	0	0	0	0
	鍾城	0	0	0	0	11	0	0
	咸興	8	0	0	0	0	27	0
	洪原	1	0	0	0	0	0	0
	會寧	6	0	0	0	0	0	0
소계	19	0	38	42	23	32	0	
황해도	黃海監營	0	0	0	0	0	11	0
	黃海兵營	0	0	0	0	0	1	1
	谷山	6	0	0	0	0	0	0
	鳳山	3	0	0	0	0	0	0
	瑞興	3(歸眞寺)	0	0	0	0	0	0
	遂安	4	0	0	0	0	0	0
	延安	10	0	0	0	0	0	0
	載寧	0	0	0	0	0	0	0
	平山	0	0	0	0	0	0	0
	海州	50	0	0	0	5	1	5
	黃州	1	0	0	0	0	0	0
	소계	73	0	0	0	5	13	6
총계		140	1	54	42	33	154	74

39) 지역의 도읍별 구분은 책판목록의 표시대로 수록하였다.

<표-2> 고서조사표의 예시

番 號		古 書 調 查 表			
(1)書名					
(2)著者	著	譯			① 題簽 : ② 表題 : ③ 卷首題 : ④ 卷末題 :
	編	( )			
	撰	( )			
(3)刊·寫記					
(4)추정시기	c				底本刊記 :
(5)版本	中國	① 木板本 ② 木活字本( )			(6)數量
	日本	③ 金屬活字本( )			
	한글	④ 石印本 ⑤ 新式活字			零本 帖 函·封
	기타	⑥ 筆寫本 ⑦ 기타( )			卷 冊 張 折
(7)所藏	所藏本中				以外缺( 全 卷 冊中)
(8)그림	① 彩色 ② 圖 ③ 地圖	(9)크기	襟接本	原本	(10)裝訂
			x	cm	
					① 線裝 ② 帖裝 ③ 洋裝 ④ 假綴 ⑤ 날장 ⑥ 蝴蝶裝 ⑦ 包背裝 ⑧
(11)紙質	① 楮紙 ② 壯紙 ③ 洋紙 ④ 和紙 ⑤ 蕙精紙 ⑥ 北黃紙 ⑦ 粉唐紙(金, 銀) ⑧ 竹紙 ⑨ 麻紙 ⑩ 桑紙 ⑪ 橡紙 ⑫ 紺紙 ⑬ 畫宣紙 ⑭ 皮紙 ⑮ 絹				
(12)版式	(13)邊欄	① 四周單邊 ② 四周雙邊 ③ 上下單邊 ④ 上下雙邊 ⑤ 左右單邊 ⑥ 左右雙邊			(14)匡廓
					半匡 : cm (기준면: 제( )장, 제( )절)
(15)界線	① 有界 ② 無界	(16)行字數	半葉 : 中字 ( )行 ( )字, 大字 ( )行 ( )字 小字雙行 ( ), ( )行字數不定		
(17)註	① 雙行 ② 單行 ③ 頭註 ④ 耳註 ⑤ 脚註			(18)上版口	① 大黑口 ② 細黑口 ③ 花口 ④ 白口
(19)魚尾	① 上下內向 ② 上下下向 ③ 上下向 ④ 下下向 ⑤ 下上向 ⑥		① 黑魚尾 ④ ( )瓣花紋黑魚尾 ② 白魚尾 ⑤ ( )瓣花紋白魚尾 ③ 魚尾不定		單線 三線 單絲 單弧 雙線 雙絲 雙弧
(20)版心題			(21)下版口	① 白口 ② 黑口 ③ 刻手名 ④ 刊行記錄	
(22)標題面			(23)內容		
(24)序文					
(25)跋文					
(26)識記					
(27)目次	(뒷면)	(28)合綴			
(29)附錄			(30)被傳者	( )	
(31)印記	未詳				
(32)註記	內賜記 : 表紙, 襟接紙, 古文書 : 國漢文混用·用紙面 : 色 絹布 表紙				
(33)所藏處					
調査年月日	200 年 月 日		調査者		

## 4. 결 언

이상으로 북한의 고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기초적 검토로서 북한의 고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조선시대 북한 지역에서 간행된 고서를 알아보고, 북한 고서의 소장기관, 조사에 필요한 서지기술요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서의 조사에는 서지 기술요소의 올바른 기입이 매우 중요하며 각 기술요소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간행시기를 추정하게 된다. 서지기술의 원칙을 파악하고 형태적 특징과 함께 고서의 이해를 위한 전제적 요소를 찾아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한다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의 해제를 작성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되는 많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고서의 연구와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제한된 정보와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현재 북한고서소장 현황과 모습을 제대로 그려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앞으로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학술교류가 확대 지속된다면 북한의 소장고서에 대한 정보도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서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고서목록작성의 작성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준화된 입력방식의 적용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동종 이본에 대한 감정은 필수적이어야 하며 귀중본의 선정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선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순회전시회 등의 사업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보의 유통과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책자형 목록의 발간 및 온라인 검색시스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

넷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에 소장된 자료의 수량은 아직 파악할 수 없지만 전문가그룹에 의한 교육시스템을 구성하여 오랜시간 소요될 수도 있는 사업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섯째 주관부서의 통일과 단일화된 창구에 의한 업무추진이다.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중심이 잡힌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

古書는 정치와 이념을 떠나 한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기에 반드시 조사되고 알려져서 연구되어야 한다. 학문적 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소장 고서의 조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高哲義,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제81권 제8호(1996)
2.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편,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도서목록-한서분류목록-, 평양: 동관, 1958.
3.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문헌연구실 편, 「조선고전해제」,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4. 송승섭, “북한의 도서관”, 명지대학교문헌정보학논집, 제4집(1994)
5. 梁一雲, “北韓의 圖書館”, 北韓, 제126호(1982)
6.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력사과학」 160호(1996년 4호)
7. 尹炳泰. 平壤의 木板印刷 出版文化, 「出版學研究」, (1992.12)
8. 장유승, 17-18세기 함경도 지역의 문집편찬과 서적간행, 「書誌學報」 27 (2003.12)
9. 정분희, “남북한 도서관 정보자료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3.
10.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760.
11. 한상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관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1호(1996),

---

##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 방안





#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 방안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국어사)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북한 지역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의<br>추진 방안 |
| 2.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 현황   |                                |
| 3. 남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 | 5. 맺는말                         |

## 1. 머리말

남한 지역에서 수행된 고문헌 조사사업 가운데 ‘한글 고문헌’<sup>1)</sup>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사업은 매우 드문 편이다. 특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은 소장 기관과 정부 차원의 사업을 통틀어 90년대 이후에 들어서야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후술). 아직 간본 자료에 치중하고 필사본이나 한글 고문서류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정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그 조사 결과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한 결과 ‘한글 고문헌’에 대한 자료 접근과 활용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남한의 사정에 비해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글 고문헌’의 소장처나 소장 목록조차도 확인된 것이 별반 없어 소장 문헌의 실태 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오히려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조사사업’을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이 발표에서는 남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에 대한 조사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일단 ‘조사사업’의 윤곽이라도 그려봄으로써 향후 수정, 보완할 기초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이 발표의 취지라 하겠다.

## 2.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 현황

1) 한글을 사용하여 만든 문헌 자료를 총칭한다. “그 자료가 원래부터 한글로써만 만들어진 자료든, 한문을 원문으로 하여 한글로만 번역한 자료든,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쓴 자료든 간에 한글이 들어 있는 자료”(이현희 1996: 211) 모두를 이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장 기관의 소장 목록조차도 1958년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서 나온 『圖書目錄 (1)~(3) - 漢書分類目錄 -』 정도를 겨우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서지학을 다룬 『조선 서지학 개관』(국립출판사, 1955)이나 『조선출판문화사』(리철화, 사회과학출판사, 1995)에서도 (북한 지역의 간행 사항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아)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으로 특별히 언급할 문헌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김일성대학의 『圖書目錄』(1958)은 “1957년 10월 31일 현재 수장한 한문 서적 문건과 조선 고어로 된 서적의 분류 목록”이다. 목록의 기재 사항을 ‘범례’에서 밝힌 대로 소개하면 ‘부록 1’과 같은데 4항에서 보듯이 형태 서지는 권·책수, 판종, 책크기 정도만 밝히고 행격과 판심 사항 등은 일체 생략하였다.(따라서 목록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남한 지역의 서지 목록과 대비하여 이본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수록 문헌 속에 영인본의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보아 (북한 지역에만 소장되어) 가치 있는 ‘한글 고문헌’은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 3. 남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

90년대 이후 남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으로는 서울대 규장각의 조사사업(1997~1999)과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조사사업(2003~2004)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소장 기관 차원의 조사사업, 후자는 정부 기관 차원의 조사사업에 해당하는데, 각 사업에 대하여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결과 등을 먼저 소개한 뒤 사업 특징을 간략히 검토하기로 한다.

#### 1) ‘奎章閣 所藏 語文學 資料의 文獻學的 整理 事業’ (서울대 규장각, 1997~1999)<sup>2)</sup>

##### (1) 사업 목적

규장각에 소장된 어문학 자료들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연구함으로써 국어국문학 연구의 실증적 기반을 다져 연구의 ‘정밀성’을 제고하고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함.

##### (2) 사업 기간 및 내용

1997년부터 3년간 규장각에 소장된 어문학 자료를 문헌학적으로 조사·정리하여

2) 이하에 소개하는 내용은 『奎章閣 所藏 語文學 資料』(2001)의 간행사 및 범례에 따른 것이다.

‘目錄·書誌’ 및 ‘解說’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1차년도 상반기에는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하여 규장각 소장 어문학 자료에 대한 假目錄集을 작성하고, 목록·서지 및 해설 작성의 원칙을 마련함(부록 2, 부록 3 참조). 목록·서지는 해당 자료가 어문학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면서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설은 異本을 한 항목으로 묶어서 해설하되 체재·내용의 소개를 넘어서서 해당 자료의 어문학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 1차년도 하반기부터 목록·서지 및 해설 원고를 작성하고, 작성된 원고에 대한 교열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목록·서지 2,889 항목, 해설 1,854 항목을 완성함.

### (3) 사업 결과

2001년에 총 5책으로 간행: 『語學篇 目錄·書誌』, 『文學篇 目錄·書誌』, 『語學篇 解說』, 『文學篇 解說』(2책)

### (4) 사업 특징

규장각 소장 ‘한글 고문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만 사업 과정에서 마련된 ‘목록·서지’ 및 ‘해설’ 작성의 원칙(부록 2, 부록 3 참조)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 성격을 갖춘 것이라<sup>3)</sup> 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목적이 ‘국문국문학 연구의 실증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자료 가치를 지나치게 ‘어문학적인 의미와 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 2) ‘100대 한글문화유산 정비사업’의 문헌실태 기초조사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2003~2004)<sup>4)</sup>

김석득 외(2000)의 ‘한글 옛 문헌 정보구축을 위한 종합조사 연구’에 이어 조사 내용과 방식을 보다 체계화한 정부 기관 차원의 조사사업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 100대 한글 문화유산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 조사는 역주·해설을 포함한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10년)의 일환으로 사업 초기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 (1) 사업 목적: 100대 한글 문화유산의 종합적 정비

3) 실제로 2000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장서각한글자료해제』는 이들 작성 원칙을 장서각 소장 문헌에 준용하되 ‘목록·서지’와 ‘해제’를 종합한 결과물이다.

4) 이하에 소개하는 내용은 한국어세계화재단(2004)의 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 문화 유산의 표준 자료화
  - 기초 자료 조사
    - 문헌 자료의 해제(소장 상황, 이본, 선본 현황 등) 작성
    - 기존 성과물(영인본, 역주본, 연구 성과) 조사
  - 문헌 자료의 표준화
    - 도서관 장서 분류(표목)와 연계
    - 문헌에 대한 역주 사업의 통일된 기준 마련

- 민족 문화의 문화 콘텐츠화
  - 한글 문화유산의 원형 발굴
  - 한글 문화유산의 문화 콘텐츠로 개발

## (2) 사업 방향

- 대중화
  -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도서로 발간
  -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하여 한글 문화 콘텐츠의 서비스
  - 디지털 한글 박물관([www.hangeulmuseum.org](http://www.hangeulmuseum.org))과의 연계를 통한 100대 한글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 전문화
  - 한글 문화유산에 대한 기존 연구의 종합적인 정리 및 체계화
  - 한글 문화유산의 지속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지속적인 보충
- 해외 소장 자료의 수집 및 한글 문화유산 보급
  -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글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 수립
  - 디지털 한글 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한 한글 문화유산의 주요 언어로 서비스
  - 100대 한글 문화유산 중 일정 부분을 선정하여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 및 문고판 보급(영문판, 중문판, 일문판 등)

## (3) 사업 기간

- 총 사업 기간: 2003년~2012년(10년)
- 연차별 추진 계획
  - 2003~2004 : 100대 한글 문화유산 문헌실태 기초조사
  - 2005~2012 : 문헌 역주 및 역주·해설본의 출판·보급, 디지털 한글 박물관과의 연계 및 서비스, 한글 문화 유산의 문화 콘텐츠 개발

#### (4) 사업 결과

● 문헌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 2004년 결과 보고서(부록 4, 부록 5 참조)

- 문헌명 및 선정 번호
- 간략 해제: 문헌(자료) 설명, 편저자 및 간행 연대, 편찬 목적 및 경위, 체재 및 내용, 기타 특징
- 현전 이본과 소장처
- 형태 서지: 권·책수, 판종, 체크기(선본 1종), 행격(변란, 반곽 크기, 계선 유무, 행자수 등), 판심사항, 기타 주기사항
- 기존 연구 성과: 영인본 목록, 역주 및 연구 목록

● 역주·해설서: 2006년부터 『훈민정음』, 『홍무정운역훈』,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연해』, 『초발심자경문언해』, 『연행가』, 『국문연구의정안』 등을 신구문화사에서 간행.

#### (5) 사업 특징

사업 초기에 수행된 문헌실태 기초조사는 100대 한글 문화유산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단순한 문헌학적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역주·해설 등 ‘한글 고문헌’의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때문에 이본(소장처, 형태 서지)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면서도 선본을 골라 역주·해설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영인본 목록, 역주 및 연구 목록 등 기존의 성과물을 총 망라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기초조사의 틀(부록 4의 <일러두기> 참조)은 정비사업을 전제로 한 ‘한글 고문헌’의 실태 조사 시 좋은 조사 및 정리 지침이 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한글 박물관과 연계하여 대상 문헌(선본 혹은 원본)의 이미지를 온라인상에 구축하여 서비스한 점은 ‘한글 고문헌’의 디지털화를 선도한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한글 문화유산의 선정 절차상) 사업 대상 문헌이 간본에 치중되고 필사본이나 한글 문서류가 소홀히 취급된 점, 디지털화 등 보급의 문제에 비해 보존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점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할 수 있다.

## 4. 북한 지역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의 추진 방안

남한 지역에서 추진된 근래의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을 참조할 때 북한 지역에서

는 아래와 같은 단계적 추진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 1) 소장 현황 파악을 위한 소장 목록 수집

현재는 한글 고문헌의 소장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학 도서관과 같이) 한글 고문헌을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소장 목록을 입수하여 검토하는<sup>5)</sup>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가 된다. 대상 기관이나 단체가 ‘한글 고문헌’만을 따로 목록화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고문헌을 정리, 수록한 목록이라면 일단 가리지 않고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목록 수집은 특정 분야와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다만 소장 목록을 입수하여 검토할 때에는 목록의 서지 사항에 사용 문자(한글, 구결 등)와 관련한 附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2) 소장 문헌의 실태 조사

소장 목록을 통해 ‘한글 고문헌’의 범주에 들 문헌이 파악되면, 소장 문헌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소장 기관이나 단체별로 ‘표준적인’ 실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표준적인’ 실태 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른 중복 조사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검색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것이다. ‘표준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특히 아래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표준적인 조사 방식과 내용의 도입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奎章閣 所藏 語文學 資料의 文獻學的 整理’(서울대 규장각, 1997~1999)를 참조할 수 있다. (假目錄集 작성 후) ‘목록’ 작성과 ‘해설’ 작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작성 원칙과 체제는 ‘목록집 범례’(부록 2)와 ‘해설집 범례’(부록 3)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준용하면 될 것이다.(특히 목록 작성에서는 조사의 일관성을 위하여 표준적인 목록 작성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설’ 작성의 경우, ‘한글 고문헌’의 가치가 “국어국문학 자료로서의 특징”에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분야에서 갖는 자료적 가치가 종합적으로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단순한 조사사업을 넘어 향후 정비사업까지 염두에 두는 실태 조사라면,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 성과물 조사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5) 이때 (『故事撮要』, 『鏤板考』와 같이 간행처나 책판의 소장처가 기록된 문헌을 통하여) 북한 지역에서 간행된 ‘한글 고문헌’ 서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여러 모로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평안감영, 함경감영, 황해감영 등 지방 감영은 오랜 동안 지방의 출판 문화를 이끌어온 중심지였으므로 이들 감영에서 간행된 서목이나 책판 목록을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사 내용과 방식이 추가될 수도 있다.

## (2) 표준적인 조사를 위한 조사 요원의 연수

표준적인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방식과 내용 못지않게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 요원의 능력이 요구된다. ‘한글 고문헌’은 일반적으로 고어로 이루어진데다가 필사본의 경우에는 글씨체까지 흘림체로 되어 자료의 판독 자체부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글 고문헌’의 성격과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요원이 일반적인 문헌학적 능력 외에 한글 고어 및 글씨체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사 요원은 국어사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되, 일정 기간의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 문헌학적 지식과 표준적인 조사에 필요한 제반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연수 과정’에 북한 지역의 국어사 전공자를 참여시킨다면 북한 지역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북한 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차세대 학자를 양성하는 데도 적잖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sup>6)</sup>

## 3) 한글 문화유산의 선정과 정비사업 추진

북한 지역의 소장 문헌에 대한 실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한민족 한글 문화유산의 차원에서 특별한 가치가 인정되는 ‘한글 고문헌’을 선정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단순히 조사 사업에 그치지 않고 보존과 보급, 디지털화의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문헌을 한글 문화유산의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는 것이다. 이때 현재 남한 지역에서 수행중인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문화관광부, 2005~2012)이나 유네스코(UNESCO)에서 수행되는 ‘세계기록유산’ 지정사업이<sup>7)</sup>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 (1) 시범(예비) 사업의 실시

6) 대규모 조사사업에 앞서 조사 요원을 선발하고 일정 기간 ‘연수 과정’을 거친 뒤 실제 조사에 투입한 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전국방언조사사업’(1978~1987)에서 잘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李秉根(1995) 참조.

7) 이 사업에서는 ‘보존(Preservation), 접근(Access), 기록유산 부산물들의 보급(Distribution of derived products), 인식 제고(Awareness)’ 등을 운영 지침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규모 정비사업을 전제할 경우 (한민족) 한글 문화유산으로 어떤 기준 아래 어떤 문헌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남북간에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 이때에는 남북이 자료적 가치를 공통적으로 쉽게 인정하는 문헌(예: 『훈민정음』)부터 시범(예비) 사업을 실시해 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시범(예비) 사업을 통하여 사업 전반의 예상 성과를 추측해 보고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및 사업 과정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점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남북 협력 위원회의 구성

현실적인 여건상 시범(예비) 사업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한글 문화유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단 내부 혹은 외부에) 남북 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남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이 직접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 전 단계로서 ‘한글 고문헌’과 관련한 인적, 물적 교류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말

이상에서 남한 지역의 조사사업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의 윤곽을 그려 보았다. 해외에 소장된 문헌도 정밀한 실태 조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 지역의 ‘한글 고문헌’만큼은 오히려 공백 상태에 가깝게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아무쪼록 남북한의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발표에서 윤곽을 그려 본 조사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됨으로써 ‘한글 고문헌’ 조사사업의 공백이 하루빨리 메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 &lt;&lt;참고 문헌&gt;&gt;

1. 국립출판사(1955), 조선 서지학 개관.
2. 국사편찬위원회(2002), 북한 역사학 논저 국내 소장처 현황, 남북역사학논총 3.
3. 김석득·최기호·김정수·권재일·성낙수·조오현(2000), 한글 옛 문헌 정보구축을 위한 종합조사 연구, 문화관광부.
4. 金日成綜合大學圖書館(1958), 圖書目錄: 漢書分類目錄 (1)~(3), 평양.
5. 리철화(1995), 조선출판문화사(고대~중세), 사회과학출판사. [영인: 한국문화사, 1996]
6. 서울대학교奎章閣(2001),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7. 沈慶昊(1994), “韓國典籍綜合目錄作成 및 韓國學 典籍資料 集成의 必要性”, 한국학의 문헌학적 연구 그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제6회 학술토론회 발표 자료집.
8. 安秉禧(1979),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奎章閣 3. [재수록: 安秉禧(1992), “중세 국어의 한글 자료”,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知性社.]
9. 이현희(1996), “중세 국어 자료(한글 문헌)”,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중세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0. 한국국학진흥원(2002), 국내외 한국학 자료의 보존 실태와 전망,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11. 韓國書誌學會(1994), 海外典籍文化財調查目錄 -美國COLUMBIA大學 東亞 圖書館所藏韓國本目錄.
12. 한국어세계화재단(2004), 100대 한글 문화유산 정비 사업 -2004년 결과 보고서-.
13. 李秉根(1995), “《全國方言調查研究》의 經緯”, 韓國方言資料集,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0), 장서각한글자료해제.
15. 洪允杓(1993),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 (近代篇 I), 太學社.
16. 홍윤표(1997), “근대 국어 자료”,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부록 1] 『圖書目錄 (1)~(3) - 漢書分類目錄 -』의 범례



[부록 2]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목록집 끝







[부록 3]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해설집 범례





[부록 4] '100대 한글문화유산 정비사업'의 문헌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일러두기>



[부록 5] '100대 한글문화유산 정비사업'의 문헌실태 기초조사 사례 :  
『훈민정음(訓民正音)』















---

#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현황과 고문헌자료 협력방안

-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와 민족고전학-



#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현황과 고문헌자료 협력방안

-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와 민족고전학 -

허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북한 민족고전학의 전개와 성과      |
| 2. 북한 ‘력사과학’의 전개와 조선시대사 연구동향 | 4. 몇 가지 제언<br>- 결론을 대신하여 |

## 1. 서론

이 글은 ‘남북 고문헌 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로써, 북한에서의 조선시대사와 민족고전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다. 북한은 고문헌의 조사·수집·정리·소개 등과 관련한 일련의 학술활동을 “민족고전학”이라는 독립된 학문분야로 정립하고 있다. 민족고전학은 고고학, 민속학과 함께 역사학의 보조과학부문으로 위치한다. 이점에서 북한의 고문헌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족고전학과 함께 역사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의 민족고전학에서 지칭하는 ‘민족고전’ 역시 조선시대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 ‘민족고전’들은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사 연구의 기본 자료로 기능한다. 북한에서 조선시대 연구와 민족고전학은 철저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사료의 수집과 정리, 평가 및 소개의 역할은 철저히 민족고전학에서 담당하고, 조선시대 연구에서는 그 결과물을 사료로 활용하면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간다.

이와 같은 학문적 분업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연구는 그 자체로 민족고전학의 성과를 반영한다. 북한 내 고문헌의 현황을 비롯한 민족고전학의 구체적인 성과들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의 우리사회에서,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에 대한 이해는 민족고전학의 이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에 더하여, 사업의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내 고문헌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서도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에 대한 검토는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북한 전체 역사학의 한 부분으로서 조선시대사 연구의 전개과정을 검토하려한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사 연구의 주제별 동향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대표적 역사학술지인 『력사과학』에 실린 글들을 계량화하여 부분별, 주제별, 그리고 시대별로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계량적 방법을 통한 시대별 분석이 북한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데에 있어 이 글이 지니는 특성이다.

다음으로 민족고전학의 개요와 전개과정을 정리함으로써 북한 역사학에서 민족고전학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족고전학의 성과를 검토하고, 나아가 북한의 고문헌 자료현황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볼 것이다. 끝으

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간단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2. 북한 ‘역사과학’의 전개와 조선시대사 연구동향

북한의 역사학은 ‘역사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북한의 사회과학은 ‘혁명과 건설에의 복무’를 임무로 하며, 대중을 교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북한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작용한다.<sup>1)</sup>

이 장에서는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가 시기별, 주제별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55년부터 현재까지 간행된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역사학술지인 『역사과학』에 수록된 글들이다.

### 1) 분석의 토대

논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역사학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역사과학』 2006년 제4호에는 『역사과학』 누계200호의 발간을 기념하는 리영환의 「주체역사과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과학리론잡지-《역사과학》」이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여기에서 리영환은 ‘역사과학’의 각 부문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 정리와 『역사과학』에 수록된 논문들을 함께 고려하면 현재 북한 ‘역사과학’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2)</sup>

<표-1>북한 ‘역사과학’의 구성체계와 내용

분류	내용	확장
“수령사”	“백두산3대장군의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에 대한 연구 조선노동당에 대한 연구 김형직, 김형권, 김철주, 강반석 등에 대한 연구
“인민사”	조선역사(원시~현대)	조선역사
		세계역사 역사철학, 역사이론 등
보조과학	고고학	“역사유적·유물의 발굴과 년대 고증”
	민속학	“조상전례로 형성발전하여 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
	민족고전학	민족고전들의 수집, 정리 민족고전의 번역 민족고전의 평가와 해제 한자와 한문의 교수 역사와 민족고전 연구에 필요한 참고서 편찬

- 1) 박태균,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역사인식」, 『한국사』 23, 한길사, 1994, 290-1쪽.
- 2) 이와 같은 북한 ‘역사과학’의 구성체계는 이미 이영화의 「북한 역사학의 학문체계와 연구동향」(『한국사학사학보』 15, 한국사학사학회, 2007, 189쪽 <표 7>)에서 제시된 것과 일치한다. 다만 이영화에게서 “혁명역사”와 “일반역사”로 분류된 것이 리영환에게서는 “수령사”와 “인민사”라는 용어로 사용된 정도만 다를 뿐이다.

여기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5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간행된 『력사과학』 가운데 확인 가능한 206권이다.<sup>3)</sup> 각 년도별로 분석대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력사과학』 분석대상 현황

시기	호수(매년)	비 고	분석권수
1955년	제1~12호		12권
1956년	제1~5호		5권
1957~1967년	제1~6호		66권
1977~2007년	제1~4호	1993년 제3·4호 합본, 500년 부록1호 추가, 2007년 제4호 미간행	123권
총 계			206권

이들 『력사과학』은 ‘상식’이나 ‘용어’설명과 같은 단편적인 글들까지 포함하여 총 2,392편의 글들을 수록하였다. 이 가운데 상식(31), 용어(11), 각종 목록류(8), 학계소식(81), 권두언·제언류(42), 역사학계 회고류(8), 새책소개 및 서평(44), 김일성 교시 발취 등(3)의 225편을 일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일차 분석 대상이 되는 글들은 총 2,164편이다.<sup>4)</sup>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2,164편의 글들은 논문이 주류이나, 그 외에도 “강좌”로 분류되는 논문에 준하는 글들과 외국 논문의 번역도 포함하였다. 또한 학술토론의 의미를 갖는 3편의 서평과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2편의 권두언도 포함시켰다. 유적·유물 및 문헌 등의 자료에 대한 소개와 해제를 다룬 상당량의 글들도 분석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들은 “자료”, “소개”, “해제” 등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일반논문과 함께 수록되었으며, 글의 내용도 논문에 준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으로 “자료”로 분류된 글 가운데서도 주제와 내용에 있어 오히려 일반논문에 가까운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글들이 ‘민족고전학’ 또는 ‘고고학’ 부문의 글들로서도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기구분은 북한의 역사학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1955~1962년 : 『력사과학』 창간, 1955~1956년 ‘반종파투쟁’, 1957~1962년 시기구분·사회성격 논쟁.
- 1963~1967년 : 시기구분·사회성격 논쟁 마무리, 1967년 전사회의 주체사상화, 1968년 『력사과학』 정간.
- 1977~1985년 : 『력사과학』 복간, ‘주체의 력사학’ 전면화 시기.

3) 가장 최근에 간행된 『력사과학』 2007년 제3호의 경우 “루계203호”로 확인되고 있지만, 필자가 확인한 수만 206호이며, 여기서 누계에서 제외된 2005년도 부록1호를 빼다 해도 205호이다. 이와 같은 누계 상의 오차는 간행 중간에 누계 호수가 혼란을 빚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4) 여기에서는 『력사과학』에 수록된 글들은 이러한 일차적인 분류부터 시작하여 분야, 시대, 주제별로 분류, 분석을 수행하였다. 많은 글들은 분류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1986~1994년 :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 제창, 1994년 김일성 사망.

1995~2000년 : 1995~1997년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1997년 주체연호 사용.

2001~2007년 : 2000년 ‘김일성 민족론’ 제창, ‘새 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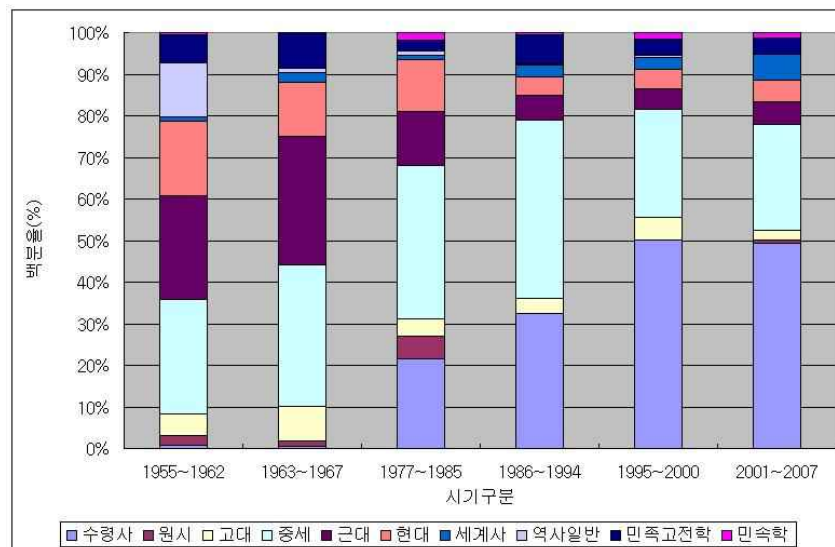
## 2) ‘역사과학’ 각 부문연구의 시기별 추이

분석대상인 2,164편의 글을 북한 역사학의 부문별에 따라 분류하여 시기별 변동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어지는 <그림 1>은 <표 3>의 수치를 알기 쉽도록 백분비 누적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3> 『역사과학』 게재, ‘역사과학’ 연구의 부문별 시대별 분포

분류	1955 ~1962	1963 ~1967	1977 ~1985	1986 ~1994	1995 ~2000	2001 ~2007	합계		
수령사	2(0.8)	1(0.6)	63(21.5)	132 (32.4)	199 (50.1)	313 (49.4)	710 (32.8)		
인 민 사	조선 역사	원시	2(1.1)	16(5.5)	(0)	(0)	5(0.8)	29(1.3)	
		고대	13(5.1)	15(8.5)	12(4.1)	15(3.7)	22(5.5)	91(4.2)	
		중세	71(27.6)	60(33.9)	108 (36.9)	174 (42.8)	103 (25.9)	678 (31.3)	
		근대	64(24.9)	55(31.1)	38(13)	24(5.9)	19(4.8)	34(5.4)	234 (10.8)
		현대	46(17.9)	23(13)	37(12.6)	18(4.4)	19(4.8)	33(5.2)	176(8.1)
	조선역사 합	200 (77.8)	155(87.6)	211(72.1)	231(56.8)	163(41)	248(39.2)	1,208 (55.7)	
	세계사	3(1.2)	4(2.3)	3(1)	12(2.9)	11(2.8)	39(6.2)	72(3.3)	
	역사일반	33(12.8)	2(1.1)	3(1)	1(0.2)	2(0.5)	(0)	41(1.9)	
	인민사 합	236 (91.8)	161 (91)	217 (74.1)	244 (59.9)	176 (44.3)	287 (45.4)	1321 (60.9)	
민족고전학	18(7)	15(8.5)	8(2.7)	29(7.1)	16(4)	24(3.8)	110(5.1)		
민속학	1(0.4)	(0)	5(1.7)	2(0.5)	6(1.5)	9(1.4)	23(1.1)		
합계	257 (100)	177 (100)	293 (100)	407 (100)	397 (100)	633 (100)	2,164 (100)		
연평균 논문편수	32.1	35.4	32.6	45.2	66.2	90.4	49.2		

<그림-1> 『역사과학』 게재, ‘역사과학’ 연구의 부문별 시대별 백분비 누적그래프





부문별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급할 것이 있다. 그것은 『력사과학』을 통해 소개되는 글들의 수가 1980년대 후반기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은 <표 3>의 ‘연평균 논문편수’의 추이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 비중을 가지고 증감을 논한다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논문편수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력사과학’의 각 부문별 전개는 1977년 이후 ‘수령사’의 급증과 다른 부문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수령사’는 1977~1985년 시기에 전체의 21.5%의 비중으로 증하여 1995년 이후 50%선까지 급증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전사회의 주체사상화작업이 수행되고 그 일환으로 ‘수령사’가 성립, 강조되어간 정황으로 볼 수 있다.

1986년 김정일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주창하면서 북한의 민족주의화가 진행되었고, 그 속에서 고고학을 배경으로 하는 원시시대와 고대사 및 민속의 부분이 점차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이들의 비중이 미미한 것은 『조선고고연구』(1986년 창간)와 『민족문화유산』(2001년 창간)이라는 별도의 지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1977년 이후 근대사와 현대사의 급감은 ‘수령사’라는 시기적으로 겹치는 별도의 부문이 보다 강조되면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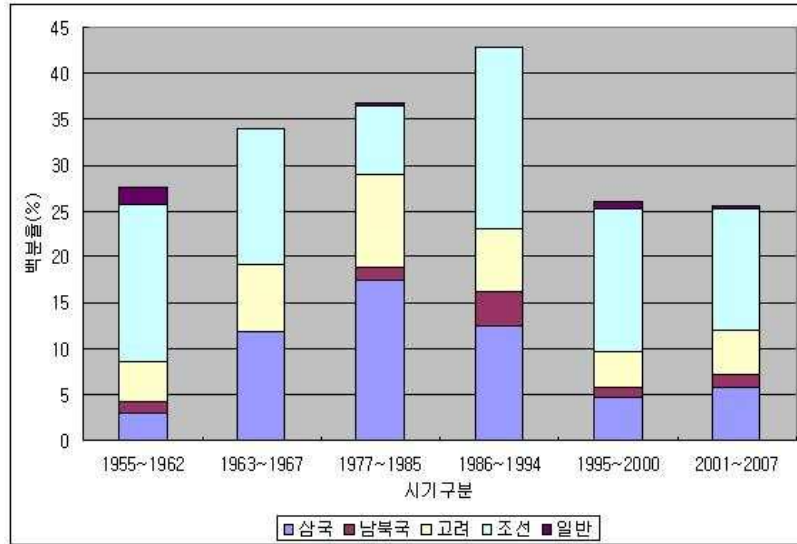
역사철학과 역사이론 등을 포함하는 ‘역사일반’의 글들은 1955~1962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다가 이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이 시기가 사회성격과 시대구분을 둘러싼 북한학계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시기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조선시대를 포함하는 중세사는 시기별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의 <표 4>와 <그림 2>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조선역사 중세시대의 각 시대별로 시기구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표-4> 『력사과학』 게재, ‘조선역사-중세시기’ 연구의 부문별 시대별 분포  
논문편수(%)

분류1	분류2	1955 ~1962	1963 ~1967	1977 ~1985	1986 ~1994	1995 ~2000	2001 ~2007	합
조선역사 중세	삼국	8(3.1)	21(11.9)	51(17.4)	51(12.5)	19(4.8)	37(5.8)	187(8.6)
	남북국	3(1.2)		4(1.4)	15(3.7)	4(1)	9(1.4)	35(1.6)
	고려	11(4.3)	13(7.3)	30(10.2)	28(6.9)	16(4)	31(4.9)	129(6)
	조선	44(17.1)	26(14.7)	22(7.5)	80(19.7)	61(15.4)	83(13.1)	316(14.6)
	일반	5(1.9)		1(0.3)		3(0.8)	2(0.3)	11(0.5)
	합	71(27.6)	60(33.9)	108(36.9)	174(42.8)	103(25.9)	162(25.6)	678(31.3)
전체합		257(100)	177(100)	293(100)	407(100)	397(100)	633(100)	2,164(100)

<그림-2>『력사과학』 게재, ‘조선역사-중세시기’ 연구의 부문별 시대별 백분비 누적그래프



<표 4>와 <그림 2>를 통해 볼 때, 중세 전체는 1986~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1995년 이후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1963~1967년의 증가는 이전시기 ‘역사 일반’의 해소분을 흡수한 결과이고, 1977~1994년의 증가는 ‘수령사’의 등장·급증 속에서 근현대사의 감소분을 일정하게 흡수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령사’가 50%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1955년 이후에는 중세사부문 역시 급감하게 된 것이다.

삼국과 고려는 1977~1985년에 절정에 도달했다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이 이 시대의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1986년 이후 이 시대를 다룬 글들의 상당수가 『조선고고연구』에 게재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1977~1985년의 급감과 1986~1994년 시기의 급증, 이후의 감소로 나타난다. 여기서 1977~1994년 시기의 급감과 급증은 『조선고고연구』와 같은 별도의 역사학술지의 존재유무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시기의 완만한 감소는 역시 ‘수령사’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조선시대사 연구의 뚜렷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수령사’의 강조, 다른 한편으로는 고고학과 고대사 및 민속학의 강조 속에서 그 입지가 위축되어 간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연구』나 『민족문화연구』와 같은 별도의 역사학술지로 인하여 『력사과학』을 통한 분석에서는 그 정도가 완화되어 나타날 뿐이다.

### 3) 조선시대 연구의 전개와 현황

여기에서는 『력사과학』의 지면에 소개된 글들을 통하여 북한의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5>는 『력사과학』에 게재된 조선시대 관련 글들 및 민족고전학 분야에서 게재된 조선시대 관련 자료 관련 글들의 현황을 주제와 시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5)

<표-5> 『력사과학』 게재, 조선시대 및 민족고전학 분야 논문의 주제별 시대별 분포  
논문편수(연평균논문편수)

분야	주제	1955 ~1962	1963 ~1967	1977 ~1985	1986 ~1994	1995 ~2000	2001 ~2007	합계
정치	법제, 행정	1(0.13)			2(0.22)	2(0.33)	5(0.71)	10(0.23)
	정치, 관제, 행정	1(0.13)			10(1.11)	8(1.33)	17(2.43)	38(0.86)
	지방행정	2(0.25)	1(0.2)	1(0.11)	10(1.11)	4(0.67)	8(1.14)	24(0.55)
	소계	4(0.5)	1(0.2)	1(0.11)	22(2.44)	14(2.33)	30(4.29)	72(1.64)
군사, 대외관계	군사			1(0.11)	7(0.78)	18(3)	8(1.14)	34(0.77)
	대외관계	2(0.25)	2(0.4)	2(0.22)		2(0.33)	7(1)	15(0.34)
	임진왜란	4(0.5)		1(0.11)	4(0.44)	4(0.67)		13(0.3)
	기타			1(0.11)			2(0.29)	3(0.07)
	소계	6(0.75)	2(0.4)	5(0.56)	11(1.22)	24(4)	17(2.43)	65(1.48)
(자본주의요소 관련한 글들 제외)	경제 (자본주의요소 관련한 글들 제외)	3(0.38)	1(0.2)	2(0.22)	3(0.33)	1(0.17)	8(1.14)	18(0.41)
	토지	7(0.88)	1(0.2)	1(0.11)	2(0.22)	4(0.67)	1(0.14)	16(0.36)
	수취, 재정	3(0.38)	2(0.4)	3(0.33)	6(0.67)	9(1.5)	11(1.57)	34(0.77)
	기타	1(0.13)			1(0.11)	1(0.17)		3(0.07)
	소계	14(1.75)	4(0.8)	6(0.67)	12(1.33)	15(2.5)	20(2.86)	71(1.61)
자본주의요소 등장	농수산업		1(0.2)		4(0.44)	2(0.33)		7(0.16)
	상공업	2(0.25)	3(0.6)	3(0.33)	1(0.11)	1(0.17)	1(0.14)	11(0.25)
	토지		6(1.2)		1(0.11)			7(0.16)
	기타		1(0.2)		2(0.22)			3(0.07)
	소계	2(0.25)	11(2.2)	3(0.33)	8(0.89)	3(0.5)	1(0.14)	28(0.64)
사회	신분	2(0.25)	3(0.6)	1(0.11)	18(2)	17(2.83)	15(2.14)	56(1.27)
	민중항쟁		1(0.2)	1(0.11)	4(0.44)		1(0.14)	7(0.16)
	기타	1(0.13)					3(0.43)	4(0.09)
	소계	3(0.38)	4(0.8)	2(0.22)	22(2.44)	17(2.83)	19(2.71)	67(1.52)
실학	인물, 사상	8(1)		1(0.11)	1(0.11)		2(0.29)	12(0.27)
	역사인식		2(0.4)		3(0.33)			5(0.11)
	소계	8(1)	2(0.4)	1(0.11)	4(0.44)		2(0.29)	17(0.39)
문화 (실학관련 문 제외)	사상, 학문	7(0.88)				1(0.17)		8(0.18)
	지리, 과학, 인쇄		2(0.4)	1(0.11)	4(0.44)	2(0.33)	2(0.29)	11(0.25)
	언어, 문학		1(0.2)	1(0.11)	1(0.11)	1(0.17)	1(0.14)	5(0.11)
	서화	1(0.13)		2(0.22)		2(0.33)	2(0.29)	7(0.16)
	체육, 음악, 연극		1(0.2)	1(0.11)	2(0.22)	1(0.17)	1(0.14)	6(0.14)
	기타				2(0.22)			2(0.05)
	소계	8(1)	4(0.8)	5(0.56)	9(1)	7(1.17)	6(0.86)	39(0.89)
기타		1(0.13)			1(0.11)	1(0.17)	2(0.29)	5(0.11)
조선시대 논문 합		44(5.5)	26(5.2)	22(2.44)	80(8.89)	61(10.17)	83(11.86)	316(7.18)
민족고전학	조선시대 관련	11(1.38)	12(2.4)	5(0.56)	26(2.89)	14(2.33)	19(2.71)	87(1.98)
	기타	7(0.88)	3(0.6)	3(0.33)	3(0.33)	2(0.33)	5(0.71)	23(0.52)
	소계	18(2.25)	15(3)	8(0.89)	29(3.22)	16(2.67)	24(3.43)	110(2.5)

\* 둘 이상의 주제에 관련되는 논문은 관련된 주제에 중복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주제별 논문의 합과 표에서 제시한 '조선시대 논문 합'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자본주의적 요소의 등장에 대한 글들을 포함하는 경제 분야의 연구가 99편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와 사회분야의 글들이 72편과 67편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밖에 군사-대외관계에 관한 글이 65편으로 정치, 사회 분야에 못지않은 비중을 보여준다. 반면 문화에 관한 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주제별 분포는 북한 역사학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국방을 중시하는 현재의 관점 하에서 '文을 중시하고 武를 경시한' 조선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사 부분에서는 역시 정치와 관제, 행정 등 정치일반을 다루고 있는 글들이 가장 많으나 이것은 주제의 광범위함에서 기인한 영향이 크다. 눈여겨 볼 것은 오히려 지

5) 주제별 분류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역사학 논저 목록 (상) : 북한의 역사학 연구』, 2001'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방행정과 법제, 형정에 대한 부분이다. 지방행정의 경우 18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면리제나 향리 등 조선왕조의 지방통치에 대한 실재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많다. 법제, 형정에 대한 연구 역시 1편을 제외한 9편이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하였다. 편수로는 10편밖에 되지 않지만, 그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형벌에 대한 것이다. 이 논문들은 ‘조선봉건통치의 잔혹성과 반동적 본질을 규명’하려는 글들이다.

북한의 조선사 연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군사-대외관계에 대한 중시이다. 이 분야에서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된 부분은 임진왜란을 포함하는 대외관계 부분이다. 모두 외세의 조선침략과 그에 대한 조선인민의 저항이라는 주제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반제·반외세적 연구성격을 드러내 주는 글들이다. 반면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하며, 1990년대 이후 본격화한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전면으로 대두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사회주의에서는 경제를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토대로서 간주한다.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조선시대의 토대연구로서 경제부분연구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위 표에서 나타나는 경제관련 글들의 분포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잘 볼 수 있다. 특히 1955~1962년에는 이후 1980년대까지에 비해 관련 글들이 많은데, 조선시대의 봉건적 속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연구들은 사회성격과 시대구분에 대한 당시 학계의 논쟁과 관련한 것이다.<sup>6)</sup> 이후 1980년대 후반기, 보다 정확하게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분야의 글들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때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조선정부의 부세수취와 재정운영에 대한 연구들이다. 주로는 조선정부의 봉건적 수탈의 성격과 그 가혹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자본주의적 요소의 등장에 대한 연구 역시 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다.<sup>7)</sup> 그리고 시대구분 및 사회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된 이후인 1963년에는 김일성이

6) 이미 1955년 4월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객관적인 제 법칙을 옳게 인식하며 특히 사회 발전의 각 계단에 있어서의 경제 형태들과 각 계급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 및 그들의 호상 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8.15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1960년 4호, 9쪽) 이후 북한 역사학계는 한국사 전반의 시대구분과 사회성격을 둘러싼 일대 논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조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으며, ‘반종파투쟁’이 발생하여 당시 북한의 역사학계를 이끌던 최청익, 리청원 등이 실각하기도 하였다. 이 논쟁은 1962년에 일단락된다. (리지린, 「우리 당의 령도와 조선 력사학의 발전」, 『(학술보고대회) 조선 혁명 수행에서 김일성 동지에 의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응』, 1962년 4월 13일(「학계소식, 우리 당 정책 연구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과」, 『력사과학』 1962년 3호))

7) 『력사과학』은 1959년 5호에 게재된 「력사 학계의 혁신을 위하여」라는 지면을 통하여 역사 연구자들이 시급하게 해명해야 할 주요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고조선의 위치와 사회구성, 삼국의 사회경제구성, 봉건전 토지소유의 특성, 부르주아 사상과 운동, 일제 통치하 노동계급의 상태와 운동의 주제들과 함께 조선역사에서 자본주의의 발생, 발전과 특징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직접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자본주의 발생, 발전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해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sup>8)</sup> 위 표에서 1963~1967년의 시기에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급증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였다.

사회사 분야의 연구는 역시 노비를 포함하는 신분의 문제가 중심이었다. 『력사과학』에 수록된 사회사 분야의 글 67편 가운데 신분에 대한 것이 56편으로 압도적이다. 이외에 인민들의 조선 봉건통치에 대한 저항에 관한 것이 7편으로 계급투쟁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신분에 대한 연구는 신분제도와 향리 등 중인신분에 대한 연구들도 다소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노비연구가 중심이다. 이 논문들은 조선봉건사회의 인신적 예속과 경제적 착취를 해명하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신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분야의 연구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미흡하나마 향약, 향청과 같은 사회조직 및 인구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남한학계도 마찬가지로지만 북한에서도 실학에 대하여 상당한 주목을 초기부터 나타냈으며, 김일성이 직접 그 평가를 언급할 정도로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sup>9)</sup> 북한의 실학에 대한 중시는 실학에 대한 글이 17편인데 비해, 실학을 제외한 사상·학문에 대한 글은 8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학에 대한 연구는 1955~1962년에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중시하는 글이 중심이 되다가, 이후에는 실학자들의 역사관과 구체적인 개혁론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문화의 여러 주제에 대한 글들의 분포와 주제 역시 북한 역사학계의 조선시대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주제는 지리와 과학, 인쇄 등의 주제이다. 이것은 국방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토에 대한 관심과 과학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강조를 반영한다. 사상과 학문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체 8편 가운데 6편이 이율곡과 서경덕, 임성주에 대한 글인데, 이들은 모두 주기론자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북한에서는 주기론을 유물론적 입장에서 파악하며, 이에 따라 주기론자들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결국 북한의 조선시대 사상,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는 실학과 주기론에 대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사 연구에서 문화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으나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시기가 지나가면서 점차 주제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역사연구의 기본사료라 할 수 있는 고전문헌에 대한 학문인 민족고전학에서는 그간 110편 정도의 글들이 수록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의 문헌에 대한 글들이 87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기별로도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편수는 조선시대를

8) “력사학분야에서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발생발전에 관한 문제도 완전히 해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하나하나 해명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발전시켜나아가야 합니다. 력사학에서는 자본주의발생발전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고조선문제, 노예사회문제, 인종문제들도 해명하여야 하며 또한 실학자들도 올바르게 평가하여야 합니다.”(김일성, 「현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과학교육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3년12월30일(『김일성저작집』 17,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551쪽))

9) 위의 담화.

다른 모든 역사논문이 316편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서의 민족고전학은 '력사과학' 가운데서도 조선시대사를 위한 보조학문으로서의 역할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으로 북한 조선시대 연구의 민족고전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앞선 분석에서 북한의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가 1986~1994년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논문편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위 <표 5>를 통해 살펴보면, 그러한 증가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대외관계, 문화의 모든 주제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학계의 조선시대사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력사과학』에 게재된 논문편수의 증가는 단지 긍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논문편수의 증가는 조선시대관련 글들뿐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로 있다. 오히려 조선시대의 비중이 감소한 만큼, 다른 부분의 글들은 그 증가폭이 더 컸다. 이러한 수록 글들의 증가는 『력사과학』에 다른 문제를 낳았는데, 그것은 개별 논문들의 양·질적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력사과학』이 최초 간행되면서 그 투고논문은 연구논문 150매, 토론논문 100매로 규정되었다.<sup>10)</sup> 이 규정은 정간되기 전인 1966년까지는 대체로 지켜졌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복간 후 1980년대 전반기까지 대부분의 논문들이 70~100매 수준으로 분량이 감소하였다. 이후 1980년대 후반기에서 1990년대 초 50~60매 분량의 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중후반에는 40~50매 분량의 글들이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현재 『력사과학』에 실리는 글들은 거의 모두가 30~60매 정도의 분량으로, 논문이라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력사과학』에 게재된 글들의 이와 같은 분량의 절대적 축소는 질적 수준에서도 후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질적 후퇴는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다. 하나는 사료이용의 측면에서 개별 논문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료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력사과학』에 게재된 조선시대관련 글들의 경우 『리조실록』만을 이용한 논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용하고 있는 자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국대전』, 『속대전』 등의 법전류와 『리조실록』, 『고려사』 등의 연대기류, 『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 읍지 등의 지리지류, 『만기요람』, 『추관지』 등의 관찬서와 실학자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저술 등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질적 후퇴는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력사과학』에 수록된 최근의 조선시대를 다룬 논문들에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논증을 하고 있는 논문들을 거의 찾을 수 없다. 대부분의 조선시대에 대한 글들은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개요의 성격으로, 간단한 고찰과 평가의 수준이다.<sup>11)</sup>

10) 『력사과학』 1955년 1호, 101쪽.

11) 물론 이와 같은 『력사과학』 게재 논문의 양적, 질적 수준의 하락을 북한의 조선시대사

지난 세기, 북한의 조선시대 연구는 남한의 역사학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남한사회의 시대구분 및 사회성격 논의에서도 그랬고, 반제·반봉건 민중항쟁을 중시했던 민중사의 연구에서도 북한으로부터의 영향은 상당했다. 이밖에 ‘자본주의 맹아’에 기초한 내재적 발전론이나 실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북한의 연구성과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국역·출판사업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북한의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와 그 성과물은 한때 남한의 조선시대사 연구에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하면서, 남한에서의 조선시대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한 측면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조선시대 연구는 과거의 활력을 상실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북한의 ‘력사과학’ 내에서 조선시대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줄어들었다. 북한은 한 편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수령사’를 ‘력사과학’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부문으로 성립시켰고, 여기에 연구역량을 집중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입각, 고고학과 고대에 대한 연구 및 민속부문의 연구를 강화해 왔다. 이와 같이 북한의 체제 안정과 내부 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력사과학’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북한 조선시대 연구의 위치는 불안정하게 느껴진다.

현재 북한에서 조선시대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만한 주요한 주제나 사업이 부재하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다. 1990년 무렵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선시대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었던 동력원들이 존재했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된 시대구분과 사회성격 논쟁, 이에 곧바로 이어져 진행된 조선사회에서의 자본주의 발생·발전에 대한 해명, 1975년 1권의 간행에서 시작하여 1991년까지 400권으로 간행된 『리조실록』의 번역·출판,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진행된 『조선전사』 33권의 간행,<sup>12)</sup> 『조선전사』의 완간에 기초하여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간행된 원시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조선역사의 각 부문사 60권의 완간<sup>13)</sup>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들에 비견될 만한 동력원들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사에 대한 북한의 상대적 소홀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북한에서의 조선시대 연구의 위축을 가져오는 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연구의 질적 하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력사과학』 자체의 성격이 바뀐 것일 수도 있다. 또한 1995년에 간행된 18집까지 확인할 수 있는 『력사과학논문집』에 실린 몇 편의 조선시대 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양·질적으로 우수한 글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력사과학』의 이러한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역사관련 정기학술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2) 『조선전사』는 1979년에 ‘원시편’을 1권으로 간행되기 시작, 1982년에 33권과 연표 1권을 내면서 일차로 완간되었다. 이후 1991년에 연표 2권을 간행하였으며, 이듬해인 1992년에 34권이 간행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시대는 ‘중세편 리조사’ 5권으로 『조선전사』 8~12권에 해당하며, 1979~1980년에 간행되었다.

13) ‘조선부문사’는 김석형, 홍희유, 장국종, 허종호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부문별 통사로 간행하였다. 1988년에 시작하여 1991년에 전 60권을 완간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조선부문사’로 계속 간행,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북한의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의 침체는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에서의 고문헌자료는 민족고전학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민족고전학은 조선시대 연구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조선시대 연구의 침체는 곧 민족고전학의 침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수령사’, 그리고 고고학과 고대사 및 민속학의 강조 속에서는 조선시대사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문헌이 대부분인 민족고전학도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문헌에 대한 관심의 소홀, 나아가 북한 내에 존재하는 고문헌자료의 위기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우려가 현재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이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다.

### 3. 북한 민족고전학의 전개와 성과

현재 한국학계에서 고문헌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1894년 갑오개혁을 시작으로 근대적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종이에 문자로 기록된 모든 기록문헌을 고문헌으로 보는 것에는 대부분 합의할 것이다.<sup>14)</sup> 여기에 범주를 조금 더 넓혀서 금석문을 포함시키면 바로 북한에서 정의내리는 ‘고전문헌’의 범주와 거의 일치한다.

북한에서는 “력대 봉건통치계급의 지배하에서 형성”된 서지문헌과 금석문헌을 포괄하는 기록자료를 ‘고전문헌’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립된 학문분야가 바로 ‘민족고전학’이다.<sup>15)</sup> 그렇기 때문에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민족고전학에 대한 이해는 기본조건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북한의 민족고전학의 개념과 연구의 대상 및 방향에 대하여 우선 살펴본다. 이어서 북한에서 민족고전학의 전개과정을 살피고, 이와 함께 그 성과들도 가능한 만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을 덧붙여 현재 북한 고문헌, 특히 고문서의 현황을 보완하여 검토한다.

#### 1) 민족고전학의 개요와 전개

##### (1) 민족고전학의 개요

14) 고문헌의 범주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와 1910년 한일병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1945년 해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존재한다. 형태에 있어서는 종이에 문자로 기록한 것만을 고문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며, 나무나 금석 및 천 등에 기록된 모든 기록문헌을 포함하기도 하며, 더 넓게는 서화류까지도 범주에 넣기도 한다.

15)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력사과학』 1996년 4호, 40쪽, 39쪽 ‘민족고전’이라는 개념에는 고전문헌 대한 북한의 현실적 평가가 뒤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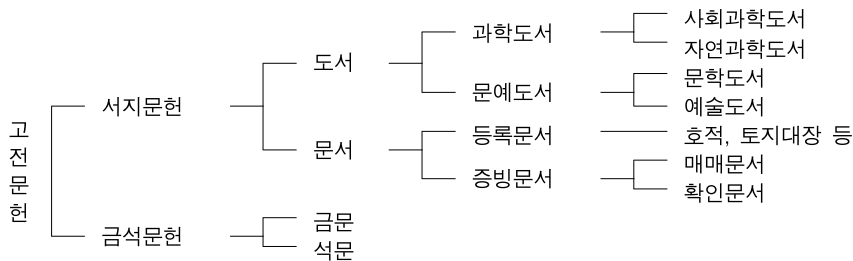


민족고전학은 ‘우리 인민의 슬기와 지혜를 담은 수만종의 귀중한 고전유산들을 진정한 인민의 향유물로, 과학연구의 믿음직한 자료적토대로 옮겨 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자적인 과학분야로 성립하였다.<sup>16)</sup> 민족고전학은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형성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둘째, 문자로 기록된 유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셋째, 사회생활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일정한 역사적 시기’란 다름 아닌 중세시대로, “민족고전은 력대 봉건통치계급의 지배하에서 형성”된다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민족고전학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기록자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고전학의 연구대상, 즉 임무는 “고전문헌의 형성발전과 고전유산의 수집, 감별, 정리, 해석, 평가에서 나서는 학술적 문제를 탐구하고 리론화 하는 것”에 두어 진다. 민족고전학이 대상으로 삼는 고전문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그림 3> 민족고전학에서 고전문헌의 분류



민족고전학의 연구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민족고전의 수집·정리 및 이에 대한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고전문헌의 발굴과 수집, 다른 문헌들에 산재한 자료를 통한 실전된 원서의 복원, 고전문헌들에 대한 분류와 목록작업, 원문에 대한 구두와 교감, 제반 작업 방법의 이론화.
- ② 민족고전의 번역 및 이에 대한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번역작업의 수행, 번역의 원칙과 수법 및 방법의 모색과 과학화·이론화.
- ③ 민족고전의 정당한 평가와 해제 및 이에 대한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당대의 계급적 편견과 시대적 제한성을 지닌 민족고전에 대한 전면적 심의와 정확한 평가, 비판적 이해를 위한 각이한 형태의 서지해제.
- ④ 민족고전의 주요 서사수단인 한자와 한문의 교육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⑤ 역사와 민족고전 연구에 필요한 참고서들의 편찬 : 한자말사전, 조선인명사전과

16) 위의 논문. 이하 민족고전학의 개요에 대한 설명은 모두 이 글을 따랐음.

같은 사전의 편찬, 색인, 편람류와 같은 참고서의 편찬, 그 방법의 과학화.

민족고전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형식상의 차이가 있다. 동시에 형성발전과정에 받는 계급, 시대적 제약에 따라 사료의 정확성, 진실성, 객관성 등 내용상의 가치기준이 있다. 따라서 민족고전학에서는 목록, 판본, 자료의 교감, 해석, 고증, 평가에 관한 학술적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이와 같은 학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고전학의 연구분야는 크게 문헌학, 고증학, 번역학, 한문학, 사전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헌학은 고전문헌의 발굴·수집·정리와 분류 원칙·방법, 판본, 해제·평가, 복원, 고전문헌의 발생·발전, 금석문·고문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고증학은 고전문헌의 교감, 위서·위작에 대한 판정·고증, 인명과 지명 등에 대한 자료고증의 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 번역학은 고전문헌의 번역 원칙과 수법, 민족고전번역에 대한 역사적 고찰, 민족고전에 대한 주해식 번역 등을 연구할 수 있다. 한문학에서는 고전문헌에 쓰인 조선식 한문의 특성, 한문의 사용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민족고전에 쓰인 한자표기어휘에 대한 문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사전학에서는 ‘우리 식’의 한자말사전 편찬 이론과 방법, 민족고전연구에 필요한 ‘우리 식’의 사전·색인·편람류의 편찬에 관한 문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 (2) 민족고전학의 전개

북한에서 민족고전학이 애초부터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정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족고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1960년대부터 사용되고는 있었지만,<sup>17)</sup> 그것이 학문적인 엄밀성을 가지고 사용되지는 않았다. “민족고전”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민족고전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모색을 시작한 시점은 1977년 무렵 사회과학원 직속으로 민족고전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부터라고 추정된다.<sup>18)</sup> 그러나 민족고전학의 성립이 1970년대 후반 이후라 해서, 민족고전학 분야의 사업과 성과들이 이 이후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현재 민족고전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들은 북한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민족고전학이 고전문헌에 대한 학문인만큼, 그 시작은 고전문헌의 수집과 정리라 할 수 있다.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고전문헌의 수집은 북한정권의 초창기부터 강조되었

17) 『력사과학』 1964년 6호에 보면 이미 ‘민족고전소개’라 하면서 과학원 고전연구소에서 간행 또는 간행 예정인 『고려사』와 『반계수록』 등을 소개하고 있다.

18) 윤국일(앞의 논문)은 민족고전연구소가 만들어 진 과정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리조실록》 번역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리조실록》 번역실이 《리조실록》만 번역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민족유산들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민족고전연구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연구소를 꾸려주시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에서 1975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번역본 『리조실록』의 간행주체를 보면 1975년과 1976년은 리조실록번역실이었으며, 1977년부터 민족고전연구소가 『리조실록』의 번역·간행을 주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민족고전연구소가 설치된 시기는 1977년 무렵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으며,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직접 언급을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여러가지 기록문헌, 서적 그밖에 다른 유물과 같은 귀중한 우리의 유산이 널려있고 잃어져 우리의 연구사업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자료들을 전국가적범위에서 수집정리하며 그것을 연구자들이 널리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도록 대책들을 세워야 하겠습니까.”<sup>19)</sup>라고 언급, 전쟁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기록문헌 등에 대한 전국가적 수집과 정리를 지시하였다.<sup>20)</sup>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북한은 조선고적보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다음해인 1947년 2월에는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자는 고고학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1948년에 민속학을 포함하는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후자는 역사학에 대한 연구기관이었으며, 1948년 10월 내각 4차회의에서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사료수집원과 정리원을 배치, 본격적인 사료수집에 착수하였다.<sup>21)</sup> 북한은 시작에서부터 유적·유물과 민속·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기록문헌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엄밀히 분리하여 진행해 나갔다.

북한 정권은 해방 직후부터 역사박물관과 민족해방투쟁박물관 등의 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도서관들을 속속 개관시키면서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쟁 이전까지 ‘각 대학들과 도서관, 역사박물관들에 적지 않은 자료들이 수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자료수집사업은 전쟁 중에도 지속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와 ‘대학, 도서관, 박물관에는 수십만 점의 문화 유물과 고문헌이 수집, 전쟁 전의 수배에 달하는 소장품을 수집’하였다 한다.<sup>22)</sup>

전쟁 중이었던 1952년 3월에는 「내각결정 57호」를 통하여 력사편찬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선력사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과학원을 개원, 산하에 력사연구소와 물질문화사연구소 등 9개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력사연구소 아래에는 고대 및 중세연구실과 근세 및 최근세연구실, 철학연구실과 함께 별도로 사료편찬연구실을 설치하여 사료의 수집·정리와 편찬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sup>23)</sup>

19)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02쪽.

20) 김정일 역시 시기는 불명확하나 “옛날책을 비롯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수집 정리하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지방에 옛날책이 적지 않게 널려져있습니다. 지금 상태대로 그냥 두두면 귀중한 나라의 재부가 없어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국가적조치를 취하여 지방에 널려있는 옛날책을 다 수집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고전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전 사회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윤국일, 앞의 논문, 40쪽)

21)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1960년 4호, 3쪽;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력사과학』 1988년 3호, 2쪽.

22)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앞의 책, 3-6쪽.

23) 위의 논문, 6쪽; 전영률, 앞의 논문, 『력사과학』 1988년 3호, 2쪽; 이영화, 앞의 논문,

이후 1956년에는 사료편찬실이 력사연구소에서 분리, 과학원 직속 고전연구실로 독립하였다. 이는 제3차 당대회의 '교시'에 입각한 것으로, 고문헌의 복각 번역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24)</sup> 이 해에는 문질문화사연구소도 민속학 및 고고학연구소로 개칭하였으며, 산하에 고고학연구실, 민속학연구실, 미술사연구실과 함께 별도의 사료편찬실을 설치하였다.<sup>25)</sup> 이로써 민속학과 고고학분야에서도 독립 편제로써 자료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직속으로 당력사연구소를 창설하였다. 당력사연구소의 창설은 민족고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를 통하여 당의 문헌과 항일무장투쟁 등의 자료를 포함하는 당사 연구에 필요한 일체의 문헌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한 것이다.<sup>26)</sup> 이것은 차후에 '수령사'(혁명역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문헌을 별도로 수집하도록 한 것으로, 력사연구소 사료편찬연구실(이후 고전연구실→고전연구소→민족고전연구소)에서 고전문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sup>27)</sup>

1959년 초, 력사연구소는 1957년을 기점으로 하는 '과학발전 10개년 전망계획'을 내놓는다. 여기에서 북한 역사학계의 4대과제를 규정하였는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연구',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및 애국전통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연구'와 함께 '민족문화에 관한 연구'를 네 번째 과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족문화유산에 관한 연구사업과 함께 자료수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sup>28)</sup>

1961년에는 고전연구실이 고전연구소로 승격, 고문헌의 번역, 복각 및 정리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전문헌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당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자료뿐 아니라 일반 근대사에 관한 자료와도 분리되는 "고(古)문헌"의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sup>29)</sup> 고문헌과 관련한 사업은 역시 번역·복각과 수집·정리사업으로, 고전연구소에서는 특히 고문헌의 번역과 복각 사업에 집중하였다. 고전연구실이 고전연구소로 승격된 후, 『리조실록』의 분류 정리 사업을 일차적인

179-180쪽.

24)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앞의 책, 12쪽.

25) 이영화, 앞의 논문, 180쪽.

26) 「(권두언)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우리 력사 학계가 거둔 성과」, 『력사과학』 1961년 5호, 3쪽.

27) 사업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루는 문헌의 구분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러한 구분이 아직까지는 엄밀한 학술적 구분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1965년까지도 모든 문헌자료들은 시대의 구분이 없이 '조선 문헌학'의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같은 분리 후 오히려 조선문헌학은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문헌을 보다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최영식, 「조선 문헌학의 대상과 과업」, 『력사과학』 1965년 6호) 즉 1960년대까지는 고문헌을 여타의 근현대 문헌과 분리해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28) 위의 논문, 10-12쪽.

29) 「(권두언)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우리 력사학계가 거둔 성과」, 『력사과학』 1961년 5호.

과제로 규정하여 추진하였고, 『고려사』와 『삼국사기』, 『징비록』, 『반계수록』 등의 고문헌들을 번역 또는 복각을 통하여 간행하였다. 특히 1959년에는 과학원과 중국과학원이 공동으로 적장산본 『리조실록』에 근거하여 고종과 순종 두 왕조 부분을 출판하였다. 같은 시기에 고문헌들과 고문서 및 금석문들에 대한 수집사업은 과학원 역사연구소를 위시하여 과학원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중앙과 지방의 역사박물관 및 도서관들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역사연구소에서는 이미 수집된 고문서들에 대한 통일적 정리사업과 국내외로부터의 고문헌 수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sup>30)</sup>

1964년 2월 사회과학원이 창설되었지만, 역사연구소와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전연구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9년에는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가 고고학연구소와 민속학연구소로 분리되었다.<sup>31)</sup>

1975년부터 리조실록번역실이 주체가 되어 『리조실록』을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7년 리조실록번역실이 고전연구소에 통합되면서 드디어 민족고전연구소가 출범하였고, 『리조실록』 간행사업 역시 이후에는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리조실록』 간행이 마무리되기 전인 1988년 또 다른 대표적 업적인 『팔만대장경』 해제본 15책이 출간되었다.

1960년대 이후 고전문헌의 수집과 정리에 대한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1988년까지는 지나온 역사학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민족고전을 널리 수집정리하고 복각번역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된것도 역사학계가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언급하는 것만을 볼 수 있다.<sup>32)</sup>

그나마 1990년부터는 고전문헌의 수집과 정리는 역사학계의 주요 성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누락되고 있다.<sup>33)</sup> 반면 민족고전학의 또 다른 분야인 민족고전의 복각과 번역에

30) 위의 논문, 5-6쪽.

31) 이영화, 앞의 논문, 180쪽.

32) 전영률, 앞의 논문, 『역사과학』 1981년 4호; 전영률, 앞의 논문, 『역사과학』 1985년 3호; 전영률, 앞의 논문, 『역사과학』 1988년 3호.

1981년에 이와 함께 역사학계의 중요한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역사발전과정의 합법칙성 규명에 대한 성과로 ①조선인의 기원문제 규명, ②원시사회의 합법칙적 발전과정 해명, ③고조선과 노예제사회의 문제 해명, ④고구려사의 체계화, ⑤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문제의 해명, ⑥조선현대사(‘수령사’)의 체계화를 들고 있으며, 민족고전학 분야의 성과에 앞서 유적과 유물을 적극 조사발굴하고 복원, 복구하여 정리한 것을 우선 들고 있다.

1985년 역시 1981년과 많은 항목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언급하면서 조선민족의 역사를 주체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파악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간주하였다는 점은 불과 4년 사이에 북한의 역사학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 봉건화과정의 문제 해명과 조선에서의 첫 번째 통일국가 형성문제의 해명을 새로이 언급하였다.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의 성과로 민족고전학과 고고학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의 진전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는 1986년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표방의 토대가 그 전에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88년의 언급 역시 1985년과 대부분 일치한다. 두 글 사이의 주목할만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발해에 대한 연구사업의 전면화와 살수대첩이 발생했던 위치를 해명한 것 정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을 따름이다.

대해서는 그 대표적 업적인 『리조실록』 번역본과 『팔만대장경』 해제본 등의 출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역사학계의 회고를 통해 볼 때, 대체로 1960년대 후반 이전에 고전문헌에 대한 수집과 정리 사업이 일단락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4)</sup> 이 시기 이후는 북한 역사학계를 주체사상으로 바꾸는 정지 작업기였다. 그 결과 ‘수령사’가 역사학의 전면에 대두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주창 속에서 고고학과 고대사 및 민속학의 분야가 강조되던 시기였다.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의 분석을 통해 우려했던 민족고전학과 조선시대 연구의 입지가 함께 축소되는 상황이 민족고전학의 지난 전개과정을 검토하면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 2) 민족고전학의 성과와 고문헌자료의 현황

### (1) 민족고전학의 성과

비록 1970년대 무렵부터 고문헌의 수집과 정리 사업이 주춤해졌다 하더라도, 민족고전학이 제출한 성과들은 상당한 것이었다. 설혹 고문헌의 수집·정리 사업이 1960년대 초까지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인 만큼 상당한 자료의 축적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고전학의 또 다른 사업인 고문헌의 복각, 번역 및 출간과 해제 사업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북한에서 민족고전학의 성과로 제출된 내용을 『력사과학』 등의 자료를 통하여 그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sup>35)</sup> 다음의 <표 6>은 그 성과를 내용에 따라 시대순으로 구성한 것이다.

<표-6> 북한 민족고전학의 구체적 성과

복각 또는 단순 영인	구두, 교감	번역
대동여지도(56) 약학체법(56) 고려사(3책, 58) 제왕운기(58) 훈민정음언해(58) 훈민정음해례(58) 리조실록(고종9책 순종6책, 59) 신증동국여지승람(3책, 59)	고려사절요(60년대 추정) 동국문헌비고(5책, 60년대 추정) 동문선(60년대 추정) 만기요람(60년대 추정) 삼봉집(60년대 추정) 성호집(60년대 추정) 충무공전서(60년대 추정)	동국병감(55) 리순신전집(55) 열하일기(3책, 55~57) 해동명장전(56) 동국세시기(58) 삼국사기(2책, 58~59) 삼국유사(주해·색인 포함, 59) 조선지(59)

33) 리영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에 력사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력사과학』 1990년 1호; 리영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한 주체의 력사과학」, 『력사과학』 1994년 4호; 리영환, 「주체력사과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과학리론잡지-《력사과학》」, 『력사과학』 2006년 4호.

34) 이후의 고문헌자료 수집은 박물관 등지에서 전 시기에 대한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35) 여기에서 이용한 자료는 『력사과학』 이외에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 역사학 논저 국내 소장처 현황』, 200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역사학 논저 목록 상 : 북한의 역사학 연구』, 2001’이다.

복각 또는 단순 영인	구두, 교감	번역
두시언해(60년대 추정) 롱비어천가(60년대 추정) 무예도보통지(60년대 추정) 불경언해본 수종(60년대 추정) 실록악보(60년대 추정) 화성상역의괘(60년대 추정) 담헌서(62~65) 대동운부군옥(62) 문헌비고(64) 훈민정음해례(64) 경세유표(65) 목민심서(65) 화담집(65) 강역고(66) 대동수경(66) 대동운부군옥(교간본, 66) 성호새설(66) 창선감의록(66) 창선감의록(86) 하진량문록(2책, 87)	통문관지(60년대 추정) 해동역사(60년대 추정) 세종실록지리지(60년대 추정) 대전회통(60) 대동운부군옥(61) 여유당전서(11책, 62)	징비록(상, 59) 반계수록(4책, 59~64) 과농소초(4책, 60) 다산시문집(3책계획, 60~65년 추정) 동사강목(4책계획, 60~65년 추정) 연려실기술(6책계획, 60~65년 추정) 연암집(2책계획, 60~65년 추정) 경세유표(2책, 62~65) 고려사(11책, 62~66) 대동수경(62) 목민심서(3책, 62) 향약집성방(8책 이상, 63년부터) 담헌서(3책, 64) 산림경제(64) 신기통(64) 지봉류설(64) 택리지(64) 기축체의(65) 화담집(65) 성호새설(66) 리조실록(400책, 75~91) 팔만대장경(94년 현재 17권 완료단계)
<시기 미상> 복각 : 증보문헌비고, 동국여지승람 번역 혹은 복각 : 의방류취, 동의보감, 천일록 등 실학자 및 중세 학자, 문인들의 대표문집 100여 종 번역 : 규원사화, 천부경, 삼일신고		

“(○○○)”: 『력사과학』의 “개재년도-호수”

해제 및 소개	수집, 정리	기타(선집, 자료집, 참고서 등)
조선고전해제 1(65)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2책, 86) 고전소설해제(2책, 91) 팔만대장경(15책, 92) 동인지문(55-7) 금석문(57-4, 58-2) 신라장적 잔본(57-4) 신중동국여지승람(59-4, 98-2, 98-3, 04-4) 삼국유사(59-6) 대동운부군옥(61-3) 관서평람록(62-2) 송영일기 초(62-2) 해영일기 초(62-2) 세종실록지리지(62-4, 64-5, 64-6) 택리지(62-5) 목민심서(62-6) 홍길동전(63-1) 리조실록(63-3, 77-1, 95-4) 경세유표(63-4) 연암집(64-4) 만기요람(64-6) 고려사(65-2, 78-2, 87-1, 87-3, 87-4) 고려사절요(65-2, 91-4) 발해 정해공주묘비(65-3) 동사강목(65-4, 91-4, 92-2)	전쟁 이전, 각 대학, 도서관, 역사박물관들에 적지 않은 자료들을 수집(60-4) 1950년, 장서각 소장 赤裳山본 리조실록의 입수(60-4)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한서분류목록-(3책, 58) 1950년대 후반, 과학원 역사연구소, 과학원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대학, 도서관, 박물관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 사업에 진전. 전쟁 전의 수배에 달하는 수십만점의 문화유물과 고문헌을 수집(60-4, 61-5) 1950년대 후반, 과학원 역사연구소, 수집한 고문서들에 대한 통일된 정리사업 추진(61-5) 중국정부의 고서기증(62-6) 『조선고전해제』 수록문헌 목록(초안)(63-4) 성주읍도록 새로 발굴(97-1) 병학지남(93-3·4) 립원실록지(94-1) 위략(94-1)	조선서지학개관(55) 『우리나라의 금석학』(65-5) 『조선 무형학의 대상과 과업』(65-6) 조선출판문화사-고대중세편-(90)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96-4) 리두연구(57) 고전대사전(60년 이후 간행계획) 력사인명사전(60년 이후 간행계획) 지명사전(60년 이후 간행계획) 조선옥편(62) 방언사전(80)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89) 중세조선말사전(93) 정다산선집(57) 리조실록 분류집(4책, 60~62) 조선봉건말기경제사자료집 1(61) 력대격문선(63) 조선기술발전사자료집1(63) 우리나라 고전 작가들의 미학 견해 자료집(6책, 64) 조선지도첩(78)

해제 및 소개	수집, 정리	기타(선집,자료집,참고서 등)
동국통감(65-6)	대동지지(94-2, 95-2, 03-1)	(사범대학)조선사자료강독(86)
건원소전여기(66-4)	증정교린지(94-4, 96-3)	조선고전문학선집(13책, 87)
증보문헌비고(66-5, 06-1, 07-2)	기묘록(95-3)	력사에 남긴 사죄문(92)
경국대전(67-2)	기묘록보유(95-3)	고려의학참고자료(93)
선조수정실록(77-4, 00-3)	률곡전서(96-1)	조선야담집(번역 2책, 95)
삼국사기(81-4, 85-2)	고사촬요(96-3)	조선지도첩(97)
천상열차분야지도(82-1)	규장각지(97-1)	대동야승선집(99)
팔만대장경(85-1, 88-4, 93-2, 01-3, 03-3, 05-4)	성주읍도록(97-1)	조선중세풍자해학집(번역, 00)
훈일강리력대국도지도(85-1)	기재사초(98-2)	력대총신의사이야기(번역 2책)
의방류취(86-1)	묘향산 보현사비(99-4)	백두산자료집(번역)
동의보감(86-4)	평양지(00-1)	
대전속록(87-2)	훈정편록(00-3)	삼국사기 색인집(60)
징비록(87-2)	광법사사적비(02-1)	신증동국여지승람 색인(62)
오주연문장전산고(87-3, 00-2, 00-3)	광사(02-1)	
백랑면지(88-4)	총통등록(02-1)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저작년보(56)
세종실록(89-3, 91-2)	해동역사(02-1, 04-4)	임진왜란연표(58-6)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90-1)	은대조례(02-2)	15~16세기 각 지방 물산일람표(60-2)
대전후속록(90-4)	대각국사집(03-2)	정다산년표(62-4)
루판고(92-1)	발해고(03-4, 07-2)	
문중실록(92-1, 92-4)	의중손익(04-1)	
제왕운기(92-1)	규원사화(04-2)	
광해군일기(92-2)	동의수세보원(04-3)	
대전통편(92-3)	연려실기술(05-3)	
태조실록(92-3)	고려로사방(05-4)	
속대전(92-3)	구성군지(06-2)	
로산군일기(92-3)	비변사등록(06-3, 07-2)	
농가총람(93-1)	소대수언(06-3)	
속중실록보궐정오(93-2, 94-1)	이운지(06-4)	
	본조경험방(07-1)	
	현은산일기(07-3)	

<표 6>의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는 이미 1950년대 중순부터 고전문헌의 간행, 번역 및 해제사업 등에 걸쳐 민족고전학 분야의 성과를 활발하게 제출해 나갔다. 각 부분의 성과를 살펴보면 북한학계의 동향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며, 민족고전학의 성과가 바로 해당 시기 역사학계의 성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인과 복각, 구두·교감을 통한 고전의 간행에 있어서는 『악학궤범』,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각 부분 시대사 연구의 기본 자료들이 우선시되었다. 이 가운데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북한의 과학원이 중국의 과학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이다.<sup>36)</sup>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학자들의 저술과 한글연구의 기초문헌들에 대한 간행이다. 특히 한글 자료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언해본과 해례본을 비롯하여 『두시언해』와 『용비어천가』와 같은 문헌을 간행한 것과 함께, 수종의 불경언해본들을 어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간행의 일환으로 영인해 나갔다.<sup>37)</sup>

1960년대 중반까지 번역사업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으로는 1950년대 중후반에 집중 번역된 군사 또는 전쟁과 관련된 문헌들이 있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분위

36)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1960년 4호, 13쪽.

37) 「(학계소식)과학원 고전 연구실 사업」, 『력사과학』 1959년 4호.



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실학자들의 저술을 번역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원문 간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실학자들의 저술 소개 및 번역은 1960년 이후 실학자들의 저서 “전부”를 우선적으로 편찬 발간하겠다는 고전연구실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sup>38)</sup>

자료집으로 1961년에 『조선봉건말기 경제사자료집』이 간행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자료집은 당시의 시대구분과 사회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배경으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논쟁 이후 연이어 시작된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생 논쟁에 집중하는 조선시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1966년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전문헌들의 간행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이미 누차 언급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친 특수한 상황이 놓여 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이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해 준다. 1970년대 이후 『리조실록』 전체에 대한 번역과 『팔만대장경』의 해제 및 번역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민족고전학의 모든 역량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기울여 졌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고전들에 대한 간행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민족고전학의 성과를 파악하기가 가장 곤란한 부분은 자료의 수집·정리에 관한 부분이다. 자료의 수집·정리의 현황에 대한 파악은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아쉬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살펴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960년대 초까지 북한의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이 가운데 고문서에 대한 통일된 정리사업을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수행해 나갔다는 사실 정도이다. 1997년에도 새로 발굴된 『성주읍도록』이라는 문헌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고문헌에 대한 조사·수집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sup>39)</sup>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초중반이면 이미 주된 조사·수집사업은 일단락된 것이라 추정된다.

1970년대 이후의 고문헌 수집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유물 수집사업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추정된다. 1970년대에는 중앙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함흥과 원산 개성 등 지방 역사박물관들의 개건과 확장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신의주와 해주, 청진 등지에 역사박물관이 새로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박물관을 주체로 역사유물 수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고문헌자료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sup>40)</sup> 그리고 이러한 수집사업은 이후에도 각 박물관의 기본사업으로 계속적으

38) 위의 글.

39) 「새로 발굴한 《성주읍도록》의 편찬시기와 그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7년 1호.

40) 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과학논문집』 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30-135쪽.

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었으리라 볼 수 있다.

## (2) 북한의 고문헌 자료 현황

현재 남한 내에서 북한의 '민족고전', 즉 고문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소개와 도록 등의 서적들이 상당히 다수 들어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파악된 자료 가운데 그나마 가장 많은 현황을 보여주는 것은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에서 1958년에 3책으로 정리한 『도서목록(한서분류목록)』이며,<sup>41)</sup> 이 외에 1965년 사회과학원에서 출간한 『조선고전해제』(1)와 이를 위한 수록문헌목록초안(이하 「초안」)<sup>42)</sup> 정도이다.

『도서목록』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이 1957년 10월 31일 현재 수장하고 있는 한문과 한글 고어로 기록된 서적들을 분류한 목록이다.<sup>43)</sup> 여기에는 7천종 이상의 문헌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말과 일제시대에 간행하거나 복간한 책도 상당수이며, 중국서와 일본서도 다수 포함되었다. 제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더불어 이와 같은 상황이 『도서목록』을 보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도 역시 전근대시대에 만들어진 문헌들이 가장 다수이며, 현 상황에서 북한소재 고문헌 현황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고문헌의 특성상 유일본밖에 있을 수 없는, 작성자가 직접 기록한 필사본(일반적으로 성책고문서라 일컫는)이 자주 눈에 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하다.

『조선고전해제』(1)는 사회과학원 내 고전연구소 문헌연구실에서 편찬한 책으로, 전체 자연과학부문 175종의 고서해제를 수록하였다.<sup>44)</sup> 『조선고전해제』는 전체 4책으로 간행할 예정이었으며, 2~4책은 사회과학부문의 고서해제를 수록할 예정이었다 한다.<sup>45)</sup> 1책에는 읍지와 지도를 포함하는 지리분야의 고서 83종을 위시하여, 47종의 의·약서와 20종의 천문·력서, 13종의 농·어업서, 12종의 수학·기술서에 대한 해제가 수록되었다. 문제는 실물이 없는 책에 대해서도 해제를 하였다는 점이다. 일본판 서적을 토대로 해제를 쓴다던가, 심지어는 다른 문헌에 나타나는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고서에 대한 해

41) 『도서목록』은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복사 제본한 상태로 소장하고 있다. 복사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3권을 1권으로 묶는 과정에서 전체의 순서가 역순으로 제본되어 읽기가 쉽지 않다.

42) 「(자료)과학원 고전 연구소 《조선 고전 해제》 수록 문헌 목록(초안)」, 『역사과학』 1963년 4호.

43) 「범례」, 『도서목록』.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두시언해』, 『중간노걸대언해』 등의 언해본과 『초훈』, 『쇼현성낙』, 『유익소전』, 『창난기』 등의 한글소설 등 한글문헌도 함께 실려 있다. 『도서목록』에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1957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 시기는 자료의 조사·수집이 전 사회적으로 이뤄지던 때이고,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은 해당 사업의 주요 주체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도서목록』이 작성된 이후에도 상당량의 자료들을 추가로 수장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4) 『조선고전해제』(1)에 수록된 문헌들의 목록은 본 자료집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45) 현재 자연과학부문을 다룬 1책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어, 4책이 계획대로 모두 출판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제를 작성하여 수록하기도 하였다.<sup>46)</sup> 북한에서 민족고전학의 연구분야 중 하나가 실현된 '민족고전'의 복원이고, '민족고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것인 만큼 목록과 해제의 이러한 작성은 민족고전학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북한의 고문헌을 파악하는 데에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초안」은 『조선고전해제』를 발간하기 전에 그 대상 문헌을 『역사과학』의 독자들에게 공개하고, 검토를 요구하기 위하여 1963년 6월에 『역사과학』에 게재된 목록이다.<sup>47)</sup> 애초 4책으로 구성된 『조선고전해제』를 전제한 것으로, 「초안」은 『조선고전해제』(1)에 수록된 175종보다 훨씬 많은 995종의 고서목록을 수록하였다.<sup>48)</sup> 여기에 제시된 목록은 어디까지나 『조선고전해제』의 대상인만큼, 역시 앞서와 동일한 문제점이 이 목록에서도 나타난다.

고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문서이다. 이제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1960년대 초까지 진행된 대규모의 자료 조사·수집사업에서 고문서가 얼마나 수집되었고,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선 <그림 3>에서 제시한 고전문헌의 분류를 통하여 북한 역시 고문헌을 고서와 고문서로 분류하며, 일정한 분류체계가 잡혀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50년대 후반이면 벌써 수집한 고문서들에 대한 통일된 정리사업을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추진해 나갔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와 정리작업의 정황을 통하여 볼 때, 북한 지역의 고문서 현황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희망적이다. 이러한 정황은 상당량의 고문서를 이미 수집, 일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관리를 함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지는 않지만 『도서목록』을 통해서도 고문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교지나 호구단자와 같은 낱장고문서를 비롯하여 20여 점의 절목, 2~30점의 전답안과 추수기, 20여 점의 선생안과 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특히 義州지역의 여러 성책문서들이 주목된다. 여기에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남한에서도 드물게 나타나는 호적중초가 18책이나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답안이나 기타 장적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족고전학에서 고문서를 등록문서와 증빙문서로 나누고, 호적, 토지대장 등과 매매문서, 확인문서로 분류하는 만큼, 사회경제와 관련한 다량의 고문서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을 것이다.

고문서의 현황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사와 민족고전학의 연구로 제출된 논문들의 언급을 통하여 그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각 논문에 소개된 고문서를 소장처별로 분류하면 <표 7>과 같다.<sup>50)</sup>

46) 이와 같은 정황은 '문순우, 「(서평) 《조선고전해제》(1)에 대하여」(『역사과학』 1967년 1호)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7) 「(자료)과학원 고전연구소 《조선 고전 해제》 수록 문헌 목록(초안)」, 『역사과학』 1963년 4호.

48) 해당 목록 역시 자료집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49) 이러한 정황은 『도서목록』의 'ㄷ(역사)'류만을 간단하게 훑어본 결과로, 전체를 면밀히 살핀다면 더 많은 고문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0) 여기에서 살핀 논문과 저서들은 한중연 장서각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소장한 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문서는 사회과학원에 소장된 자료들이다. 사회과학원에서 소장한 토지매매문서 115건을 분석한 논문을 비롯하여,<sup>51)</sup> 많은 논문들에서 사회과학원 소장 고문서를 활용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문서 자료집의 존재이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보관 고문서 ○책'으로 전거를 밝히고 있다. 이들을 확인한 결과 1981년 홍희유가 「18세기이후 점촌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역사과학』 1981년 4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47책이 가장 늦은 순서였다. 이로 볼 때, 북한에도 고문서를 자료집으로 엮어 냈으며, 적어도 47책 이상이 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력사박물관도 다수의 고문서를 소장하였다. 금광운영과 관련한 문서인 「장진항 점」이 '고문서 6001호'인 것으로 봐서 6천점 이상의 고문서를 소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민속박물관에도 '고문서 3267'이 존재, 3천점 이상의 고문서가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연구서들 가운데 고문헌이 등장할 만한 책들만을 간단히 살핀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차후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기초 작업으로서 유용할 것이다. 검토의 결과 고문서를 사료로 언급한 논문 및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저서) 허중호, 『조선봉건말기의 소작제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9-중세편 리조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10-중세편 리조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12-중세편 리조사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조선고대중세사2-조선 역사학과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원종규, 『(조선부문사)조선정치제도사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홍희유, 『(조선부문사)조선상업사(고대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장국중, 『(조선부문사) 조선광업사2』, 공업출판사, 1991; 홍희유, 『(조선부문사)조선수공업사2』, 공업종합출판사, 1991; 허중호, 『(조선부문사)조선토지제도발달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논문) 김선호, 「리조봉건말기 공인제도에 관한 연구」, 『역사과학논문집』 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장청옥, 「17~18세기 계급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역사과학논문집』 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리제오, 「우리 나라 가족의 유형과 그의 역사적변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역사·법학)』, 1993년 4호.

(『역사과학』) 홍희유, 「18세기이후 점촌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 1981년 4호; 홍희유, 「17세기이후 형성된 공인제도에 대하여」, 1984년 4호; 김선호, 「고문서를 통하여 본 공인대방의 구조와 기능」, 1986년 2호; 장청옥, 「17-18세기 서민지주의 장성에 의한 지배계급신분층의 변화」, 1986년 3호; 홍희유, 「17세기 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삼포경영」, 1986년 3호; 김선호, 「18세기말이후 공인의 쇠퇴몰락」, 1987년 1호; 김선호, 「17~18세기 공인집단의 형성과 그 확대(2)」, 1987년 4호; 리창숙, 「철산군 《백량면지》에 대하여」, 1988년 4호; 정영일, 「15세기 향리의 여러 계층과 《단안》」, 1989년 4호; 김선호, 「리조시기 기인제도에에서의 변화」, 1991년 4호; 임정호, 「공방전에서 도장의 발생과 그의 착취행위」, 1995년 4호; 김승일, 「임진조국전쟁시기 진관제의 복구」, 1996년 2호; 리금산,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직된 속오군의 편제에 대하여」, 2000년 4호; 김희옥, 「륙주비전에 대한 간단한 고찰」, 2006년 2호; 최령, 「(자료) 《현은산일기》의 사료적가치에 대하여」, 2007년 3호

전체적으로 보면 고문서자료를 활용하는 주제와 연구자가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사과학』의 논문들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90년대 초중반 이후로는 고문서를 통한 연구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다. 이와 같은 고문서자료 이용의 상황은 앞서 언급한 북한의 조선시대 연구의 수준저하와 사료이용의 획일화를 보여주는 징후이다.

51) 장청옥, 「17~18세기 계급신분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역사과학논문집』 1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5쪽.

다.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에서 소장한 자료들은 대체로 『도서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7> 연구 논저에 언급된 북한 고문서 현황

소장처	소장 확인 고문서
중앙력사박물관	▫ 장진금점문서 장진황점(고문서 6001호), 기타 고문서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 대구부사례, 관서평란록, 선전완의, 평안감영계록, 단천부사례지남책, 송영갑신신정사례, 순무영등록, 진주초군작변등록, 진중일기, 서정일기, 해영일기, 송영일기, 홍참관전장수세건기
인민대학습당	▫ 건원소전여기, 초산민소축, 호적올림책
중앙도서관	▫ 고문서
조선민속박물관	▫ 고문서 3267, 기타 고문서
사회과학원	▫ 백량면지, 타급장책, 흥경리전답정안(고문서1021호) ▫ 17~8세기 토지매매문건 115건 ▫ 고문서 3267, 6017, 1091호 등 ▫ 《고문서》 ~47책
사리원력사박물관	▫ 청량담순심요법문, 고문서 제3호
해주력사박물관	▫ 고문서 575-4호
『조선봉건말기경제사 자료집』 1	▫ 립전완의문서조, 선전완의 등 고문서 수록
소장처 불명	▫ 오만동연점록, 개성부 흥경리량안, 진주군 내동리대장, 군문등록, 소위 포창의록, 임술록, 교남일록, 임술리정청등록, 3정리정절목, 제주목안핵장계등록, 제주목안핵장계등록, 외상장책, 타급장책(이상 2건 개성상인 장부), 신유년 공인 시전인 폐막별단(신유별단), 경주호장선생안, 연조구감, 내수사 전라도장토문적, 진관관병편오책(남한소재?), 선전완의문, 현은산 일기

이 외에 중앙도서관과 사리원력사박물관, 해주력사박물관 등에도 고문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민대학습당에서도 의주에서 작성된 「호적올림책」 등의 고문서를 소장하였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밖의 다른 도서관과 박물관에도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리라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 4. 몇 가지 제언 - 결론에 대신하여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 요구된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한 후에야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방법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어디에 어떠한 고문헌들이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 수집작업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문헌들이 어떻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의 파악이다. 민족문화유산을 강조하는 북한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문헌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

적 지원과 함께 인적, 기술적 지원도 포함된다. 북한에 존재하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들이 중국국경을 넘어 밀반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지원은 상호주의나 ‘대북 퍼주기론’ 등에 휘말리지 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남한 내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협조, 동의하에 대표 사업기구를 조직할 것이 우선 요구된다. 이것은 우선 학술과 문화분야의 대북창구가 ‘민족화해협의회’(북측 민화협)로 단일화되어 있는 현실과 관련된다. 여러 기관과 개인들이 난립하여 독자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며, 결국에는 투자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상태에서 사업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가진 사업기구라야 힘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학계가 사회과학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원 자체가 고문헌을 소장한 최대 기관이기도 하거니와, 각 대학과 박물관, 도서관 등에 대한 조사와 협력에 있어서도 사회과학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결국 이 사업의 대북 동반자가 사회과학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 학계의 최상위 기구로서 사회과학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도 그에 걸맞는 대표기구의 조직이 필수적이다.

이 대표기구는 뜻을 함께하는 남한 내의 모든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참여하는 모두가 각자의 연구주제와 대상, 방법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적합한 사업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사업은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요청되는 사항으로써, 사업성과를 우리 학계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토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 상호간의 목록교환이 이루어지고, 자료교류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자료현황을 파악한 위에서라야 각 학술 분야와 주제에 따라 사업의 전체적인 틀을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록의 교환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사업의 체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료를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기본 토대의 구축이 가정된 위에서, 현재의 현황파악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① 남북한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위에서 각종의 한글문헌에 대한 자료교류 및 연구활동과 교류 전시회사업.

② 남북한 역사학계 모두가 높이 평가하는 실학자들 및 그들의 저술에 대한 자료교류와 이를 통한 공동 정본화 및 자료집 간행사업.

③ 조선시대 유학사상으로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서경덕 등의 주기론 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에 대한 공동 정본화 및 자료집 간행사업.

④ 임진왜란 때의 기록 및 동학농민전쟁, 의병운동, 민란 등에 대한 자료교류와 공

동 자료집 간행사업.

⑤ 국방, 영토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읍지자료의 교류 및 편찬사업.

⑥ 1558~1600년까지 거의 매일 기록한 『현은산일기』 등 일기자료에 대한 공동 탈초, 번역 및 출간사업.

⑦ 평안도 의주의 예와 같이 북한지방의 사회사자료가 밀집해 남아있는 지역을 선별, 연구사업을 수행.

⑧ 기타 방목, 족보, 서첩·필첩·간찰첩 등의 자료교류와 소개사업 등





---

## 남북 문화재 교류전의 사례 연구



# 남북 문화재 교류전의 사례 연구

오영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제 2차 전시추진 : 2006년도 |
| 2. 전시기획 : 용산 새 박물관 개관 기념전 | 5. 전시회 개최와 성과         |
| 3. 제 1차 전시 추진 : 2005년도    | 6. 맺음말                |

## 1. 머리말

본 발표는 남북 문화재 교류전시에 대한 사례의 일환으로 2006년 6~10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최된 「평양에서 온 국보들-북녘의 문화유산」 특별전의 전시 기획과 대외 교섭 그리고 전시 실행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분단 이후 북한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에 대한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으로 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재 도록은 1988~96년 발간된 『조선유적유물도감』 20권(『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외국문종합출판사) 정도를 들 수 있으며, 북한의 대표 박물관인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도 최근에 들어서야 컬러 도록이 출간되어 소장품의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해방 이후 냉전기를 거치면서 문화재 분야에서는 북한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북한 문화재, 특히 유물에 대한 정보는 공개된 북한 자료에서 서술하고 있는 단편적인 자료와 때로는 일제시대 조사된 문화재 목록과 사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만큼 전시의 기획 초기부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2006년에 「평양에서 온 국보들-북녘의 문화유산」 특별전이 개최되기 이전에도, 북한에서 문화재를 직접 들여와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는 이미 몇 차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2~2003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남측 위원회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와 고구려 유물을 대여하여 전시한 「특별기획전 고구려!」 과, 2005년에는 고려대학교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고구려 유물을 대여하여 「대륙의 꿈 고구려 특별전」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북한 문화재를 대여하여 전시하는 것이 물꼬를 트는 시기에는 ‘고구려’가 전시 주제로 선호되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구려는 남북 간 역사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적어서 상호 공유가 용이한 점, 고구려 고분 벽화나 고구려 유물은 역사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남한에서는 접하기

힘든 희소성, 그리고 만주 대륙의 옹혼한 기상을 자랑하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가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고구려 관련 특별전시회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의 단초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힘입어 2006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2006년 북한 문화재 특별전의 사례가 향후 남북 간 문화 교류, 특히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대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전시 기획 : 용산 새 박물관 개관 기념전

국립중앙박물관은 1986년부터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인 옛 조선총독부 청사(중앙청)에 자리를 잡았으나, 일제 잔재의 청산과 민족 정기의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1995년 8월 15일 조선총독부 청사를 허물게 되었다. 용산에 새로운 터전을 잡고 1997년 용산 새 박물관의 기공식을 거친 뒤, 9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2005년 이전 개관을 맞이하게 되었다.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 개관 기념일은 2005년 10월 28일로 잡았다. 용산 새 박물관의 전시영역은 5개 전시관(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기증관, 아시아관), 51개 전시실 26,781㎡에 달하는 상설전시실과, 아울러 2개 전시실로 구성된 1,836㎡의 기획전시실로 이루어졌다. 상설전시관은 각 전시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들이 상시적으로 전시되는 공간이고, 기획전시실은 짧게는 1개월 많게는 수개월 단위로 특정한 전시 주제에 따라 기획된 특별전시가 이루어지도록 마련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역사적인 새 박물관의 이전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기획전의 전시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하였고,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반입하여 대역 전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남측의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 북측의 대표 박물관인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 민족 공통의 문화유산을 서로 교환하여 전시한다면 민족의 동질성을 상호 확인하고 회복해나가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공동 연구를 도모하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간에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었다. 여기에는 남측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즈음에 북측의 문화재가 내려와서 축하하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박물관이 주목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에 맞추어 남북의 문화재가 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남북 간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리라는 점도 주목하였다. 한편 2005년은 남북 공히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는 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의로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전시를 기획하였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는 북한의 문화재 중 특정한 시대나 주제에 국한된 유물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족문화유산을 통사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남북이 공유하는 민족 문화의 유구성과 동질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반세기 넘게 접해 볼 수 없었던 북측의 대표적인 국보급 문화재를 엄선하여 전시함으로써 전시 유물 자체의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의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복 60주년을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고 또 용산 새 박물관의 개관을 축하한다는 당초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 3. 제 1차 전시 추진: 2005년도

국립중앙박물관은 2000년대 초부터 남북 문화재 교류에 관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남북 문화재 전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었다. 북한 문화재 특별전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은 2005년부터 이루어졌는데, 북측과의 공식적인 협의는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북측위원회(이하 '민화협'으로 줄임)를 창구로 하여 이루어졌다. 협의 초기에는 북측의 실무기관인 문화보존지도국이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관계자와 직접 테이블에 마주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북측과의 협의과정에서는 민화협과 공식적인 합의가 선행된 후, 세부 협의과정에서 관계 실무기관과 논의하는 것이 당시 관례였다. 첫 번째 만남은 2005년 8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남측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새 박물관 이전 개관 및 광복 6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문화재 전시회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북측도 문화재 교류를 비롯한 문화 교류 부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양측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해 국립중앙박물관과 민화협은 2005년 10월 28일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북한 문화재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한다는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여유물은 고조선시기부터 중세 및 근세 등 모든 역사적 시기를 포괄한다. 둘째, 대여 유물은 90점 내외로 하며 구체적인 목록은 차후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셋째, 전시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유물의 대여기간은 2005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등이었다. 기본적인 합의에는 비교적 용이하게 도달하였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많은 난관이 있었다. 남북 양측이 실무적으로 논의하여 풀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곧이어 8월말 경 금강산에서 세부 논의 일정을 잡았다.

후술할 바와 같이 첫 번째 전시 추진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되돌려 생각해 볼 때 첫 만남에서는 의외로 큰 소득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시회에 대한 형식적 합의를 이룬 것 이상으로, 남과 북의 관계자들이 사업의 성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서로 확인하였고 또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견실한 밑받침이 되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는 많은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잘 풀 수 있었으며, 초기 논의에 참여하였던 민화협 관계자들은 전시회가 종료될 때까지 파트너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다른 자리로

옳긴 일부 관계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측면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시회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는 팩스를 통하여 중국 베이징과 금강산을 오가면서 이루어졌다. 전시유물의 조사 및 선정 방식, 유물의 운송방법, 보험 가입 문제 등 전시 실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전시유물의 선정이었다.

북측과의 이러한 협의과정은 철저한 보안 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우연한 기회에 외부 인사에 의해 언론기관에 알려지게 되었고, 한겨레신문 2005년 8월 19일자에 「북 국보급 유물 100여점 서울에, 남북, 10월 용산 국립박물관 개관기념 전시 합의」라는 제하로 보도되어 남북 관계자를 당황케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오보가 되었지만, 전시회를 마칠 때까지 대언론 보안의 중요성을 각성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민화협과의 기본적인 합의와 일정과 방식에 대한 대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마지막으로 전시유물의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북측에서는 민화협과 함께 문화보존지도국의 관계자가 회의 테이블에 나왔다. 전시 유물의 대부분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소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반출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문화보존지도국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유물을 대여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전시 기획 상 최고 수준의 문화재만을 선정하려고 하는 반면, 유물을 대여해 주는 북측의 문화보존지도국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전시유물 선정을 포함한 전시 실무협의를 통한 최종 협의는 9월 초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10월 28일 개관 일정에 맞추려면 협상에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최소한 1개월 전에는 전시유물이 도착해야 전시 도록을 위한 사진 촬영과 기타 전시회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휴전선을 넘는 대규모 국보급 유물의 전시회에 대한 남북 양측의 경험이 부족하여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전시 유물의 선정에서는 상호 이견이 대체로 조정되었다. 마지막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물은 조선시대 회화였다. 90점이라는 제한된 유물 수량으로 500평이 넘는 넓은 면적의 전시장을 꾸며야 하고, 또 민족사 전시기에 걸치는 북측의 명품들을 소개한다는 전시의 기획 의도 상 조선시대 회화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조선시대 회화의 대여에 응할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측의 거듭된 설득에 북측은 회화가 대여되지 않을 경우 전시회의 성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품보다 모사품이나 20세기 초의 작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수정 입장을 제시하였다. 설득에 설득을 거듭하였으나 결국 우리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유물 대여 협상은 결렬되었다. 결렬 이후에 북측에서는 회화 25점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전향적인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때는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미 9월말을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28일 개관에 맞추어 특별전을 개최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화재 전시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60주년 기념 및 용산 새 박물관 개관

기념전으로 기획된 북측 문화제 전시회는 결국 6개월여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결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개관 특별전은 '북한 문화제 특별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방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주제로 한 '겨레와 함께 한 국립박물관 60년' 특별전이 열리게 되었다.

#### 4. 제 2차 전시 추진: 2006년도

2006년 베이징에서 문화제 대여 전시 협의가 재개되었다. 우리 박물관은 2005년 개관 특별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측과의 연락을 단절하지 않았다. 특히 2005년 겨울에는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하여 뜻을 함께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이 성금을 모우고, 주변 독지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작은 정성을 북측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북측도 문화제 대여 전시회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사업상의 목적으로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남북 박물관 교류를 통한 남북의 화해를 도모하고, 아울러 북측 박물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우리 박물관의 진정성을 확인하였다.

1월 24일 베이징에서 재개된 협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2005년 교류 사업을 성사되지 못했지만, 전년도 성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6년도에는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점에는 서로 동의하였다. 2005년 협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2005년도 합의 사항을 존중한다. 둘째, 유물 대여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으며, 대여 기간 중 지방 전시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위임한다. 셋째, 전년도 마지막 협상에서 제시한 회화 유물 25점을 제외한 나머지 유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위하여 3월 15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주)문화방송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이번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의 실행을 맡고,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통일부 남북협력사업자 및 사업 승인 및 남북간 협의 지원, (주)문화방송은 전시 홍보 및 기타 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06년 3월 2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남북 대표 박물관장의 회동이 이루어졌다. 이 만남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이진무 관장과 북한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김송현 관장을 비롯한 양측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광복 후 남북 대표 박물관 관장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었다. 두 박물관장은 남북 박물관 간의 첫 번째 교류 사업으로 6월에 북한 문화제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남북한 화해 협력 및 민족 문화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박물관의 역할과 함께 민족 문화제의 전시·조사·연구·보존 등 각 분야에 걸친 양 박물관의 교류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첫째, 남측은 북측의 진품 역사유물 90점을 대여한다. 둘째, 북측은

금강산을 통해 남측으로 유물을 넘겨주며, 대여기간은 2006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셋째, 남측은 유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하여 포장에 필요한 자재 및 물자를 3월말까지 남포항으로 보낸다. 넷째, 대여 유물의 확정을 위하여 4월 초 남측 관계자 5명이 평양을 방문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였다.

이후 전시회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우선 북에서 남으로 전시유물을 포장·운송하는데 필요한 자재가 공수되었다. 인천과 남포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편을 통하여 포장 자재가 남포항을 통하여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으로 보내졌다. 유물을 포장하는데 필요한 솜포와 오동상자, 외피 상자 등을 보냈는데, 유물의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경우에는 대체적인 규모를 추산하여 자재 물량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전시유물의 실견과 최종 선정을 위한 국립중앙박물관 대표단 3명과,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문화방송 PD와 카메라 감독 등 2명이 4월 4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방북을 하였다. 중국 베이징을 거쳐 북측 평양 순안공항으로 들어갔다. 평양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접촉으로 얼굴이 익은 북측 민화협 관계자와 문화보존지도국, 그리고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관계자들의 환대를 받았다. 북측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전시실에 전시된 중요 유물들을 남측이 대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며, 수장고에 있는 미공개 유물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평양 방문을 통해 전시유물의 실사를 마친 뒤 대여 유물의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대여 유물이 확정된 후, 후속 작업은 유물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전시 유물의 운송 과정이나 전시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이나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문제는 또 시간이었다. 유물은 5월 1일 반입되어야 하는데, 대여 유물을 확인한 시점은 4월 10일 경이었다. 외국에서 유물을 빌려올 때 가입하는 국제 간의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4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5월 1일에 유물을 인수·인계하면서 동시에 보험 증서를 북측에 보내야 했지만, 시간은 불과 20일도 채 남지 않아서 약속한 시간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고심 끝에 생각해 낸 방법이 유물 이동 시 외국 간에 이루어지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에 적용하는 보험을 이번 전시회에 적용시키기로 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보험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유물의 인수인계만 남았다. 유물의 인수 인계는 5월 1일에서 5월 4일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측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5명, 유물 운송 및 포장작업을 도울 유물 전문 운송업체 직원 3명,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 1명, (주)문화방송 관계자 4명으로 구성하였다. 문화방송에서는 이번 전시회의 보도와 홍보를 위하여 특별 취재진을 보내는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5월 1일 금강산으로 방북하였고, 5월 2일 ~ 3일 유물의 상태 확인 및 포장을 마치고, 5월 4일 북측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유물은 무사히 남측으로 들어왔다. 이제 성공적인 전시회의 개최만 남았다.



## 5. 전시회 개최와 성과

북한 문화제 전시회의 제목은 고심 끝에 「평양에서 온 국보들-북녘의 문화유산」 특별전으로 작명하였다. 2006년 6월 13일 ~ 8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8월 28일 ~ 10월 26일까지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전시회에는 북한이 자랑하는 중요 문화재 90점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에는 국보 50점과 준국보 11점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시회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구석기와 청동기인 「상원 검은모루 출토 구석기」와 「신암리 출토 청동갈」, 우리나라 최고 最古의 악기樂器로 알려진 「서포항 출토 뼈피리」, 고구려의 중요한 금석문인 「고구려 평양성 명문석」 등의 고고 역사가품이 있으며, 「발해 치미」, 「신계사 향완」, 「관음사 관음보살」 등의 건축과 불교 공예품들이 엄선되었고, 「선녀도」(김홍도), 「소나무와 매」(신윤복), 「옹천의 파도」(정선) 등 회화 명품들도 선보였다. 대부분의 유물은 해방 이후 남측에 실물로 공개된 적이 거의 없는 유물이며, 일부는 사진으로도 접할 수 없었던 작품들이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1992년 개성의 고려 태조 왕건릉에서 출토된 「고려 태조상」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학계 일부에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아직 북한에서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장의 유물로, 남측 전시회에서 전격적으로 공개되는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이 상은 발견 초기에는 '청동불상'으로 알려졌다가, 후에 연구 결과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임이 밝혀졌다. 태조상은 951년경 제작되어 개성의 봉은사에 모셔졌으며, 고려 전시기에 걸쳐 왕실의 가장 신성한 상징물로서 국가적 의례에서 중심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성리학적 제례법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1429년(세종 11년) 태조 왕건의릉 옆에 묻었다. 현재 전하는 유일한 왕의 조각상으로, 실물로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전시 일정은 역사적인 남북 6.15 공동선언과 8.15 광복절을 고려하여 전시 기간을 설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택일에는 실패였다고 자평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전시기간을 잡으면서 고려하지 못한 것이 2006년 독일 월드컵이었다. 6월 월드컵 본선경기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온통 월드컵에 가 있었다. 더 불리한 조건은 당시 남북 관계의 급냉기를 넘어 최대 위기를 겪은 시점이었다는 데 있었다. 6월 10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의 전쟁 불사 발언에 이어, 7월 5일에는 미사일 발사, 7, 8, 9월에는 남북 회담의 전면적인 중단, 그리고 10월 9일 급기야 핵실험까지 이어졌다. 전시회를 준비한 주최 측의 입장로서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전시회 개막 당초에는 관람객이 하루 수 십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회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관람객은 꾸준히 늘어났다.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시에서 80,000여명, 대구 전시에서 50,000여명 등 총 13만 여명이 관람함으로써 비교적 성황리에 전시회를 마칠 수 있었다. 10월 26일 대구 전시를 무사히 마친 북측의 유물들은 10월 30일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무사히 북측으로 전달됨으로써 대망의

막을 내렸다.

## 6. 맺음말

2006년 ‘평양에서 온 국보들-북한 문화재 특별전’은, 민족사 전시기를 망라하는 북측의 국보급 문화재를 남측에 들여와 전시하였다는 점에서 남북 간 문화교류에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분단 60여년을 거치면서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민족사 반쪽의 문화재를 직접 접할 수 있었고, 특히 남측에서는 소장하고 있지 않은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의 유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문화재 즉 민족문화유산이라는 가시적인 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민족사의 유구성과 아울러 남과 북의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2년여 동안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북교류사업은 정치적, 사회적, 외교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무엇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준비와 주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북측과의 교섭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한 덕목을 하나 꼽으라면 북측 관계당국 및 실무자와의 상호 신뢰라고 생각한다. 남북의 교섭과정에서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는 결정을 북측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북측도 또한 반대의 경우를 절감하는 듯 하다. 북측은 기본적으로 남측의 자본주의적 합리성이나 의사결정과정에는 익숙하지 않고, 남측은 북측 내부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기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의 설명해 주지 않는 북측의 태도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협의과정에서 느끼는 사고와 행동의 현저한 차이는 분단 60여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데 따른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더욱이 북측은 인간적인 신뢰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한번 맺은 인연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쌓게 되면, 자본주의적 셈법과는 별개로 의외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북한 문화재 전시회를 추진하면서 얻는 작은 경험들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 연구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 남북교류사업의 특수성 시론

-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 남북교류사업의 특수성 시론

- 사회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강석승(행박, 통일부 정세분석팀장)

## < 목 차 >

1. 프롤로그	3. 남북한의 교류사업의 특수성
2.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 정책 비교	4. 에필로그

## 1. 프롤로그

최근의 남북관계는 ‘2007 정상회담’(10.2-4, 평양)에서의 합의<sup>1)</sup>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서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회의(12.4-6, 서울) 등에 힘입어 과거와는 달리 그 대상범위나 질적의 수준에서 매우 큰 변화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sup>2)</sup>는 합의는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어 오던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sup>3)</sup>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런 일련의 남북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에는 다양한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될 것이 예견되는 바, 본 글에서는 남북한 교류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개관하여, 다양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이는 공식명칭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이나, 이 곳에서는 ‘정상선언’으로 약칭으로 지칭하기로 함.

2) 남북정상선언 제6항 참조.

3) 동 합의서 제4조 참조.

## 2.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 정책 비교

### 1)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교류 정책

우리나라에서 사회문화교류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화<sup>4)</sup>는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방송, 광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산업까지 포함하는, 말하자면 예술과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사회문화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사회문화예술활동과 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전통사찰과 향교, 국가적·세계적 유산가치가 있는 문화재 관련 부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에 대한 국가정책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로 근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중 1950년대의 사회문화정책은 전쟁의 소용돌이와 이후 전후복구사업과 반공주의(反共主義) 속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를 지니지 못하였으며, 이런 가운데 사회문화정책의 이념과 내용은 뚜렷한 정책이나 법적·제도적 장치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1970년대 초까지 사회문화정책의 대상이나 영역은 기껏해야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문예진흥이라는 역할에 제한되었으며, 사회문화와 사회문화유산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정립된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제1차 문예진흥계획’(1974~1978)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이 때까지 사회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보처, 문교부, 공보부를 거쳐 1968년 발족한 문화공보부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1980년대의 제5공화국은 문화진흥의 의무를 헌법에 명기하면서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가운데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문화부문계획’을 통해 문화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문화복지, 문화적 주체성 확립, 문화창조 능력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이후 김영삼대통령이 이끌었던 ‘문민정부’는 세계화 속에서 문화창조력의 제고와 문화환경 개선, 문화산업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련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문화재 중심의 행정기(제3, 4공화국)<sup>5)</sup>, 예술진흥의 행정기(제5, 6공화국), 문화산업 중심행정기(문민정부)를 거쳐 왔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를 거쳐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러 사회문화정책의 방향은 문화관광부 관련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항목에

4) 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5)이 때는 ‘근대화’를 모토로 경제발전을 도모하던 시기였음.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이곳에서의 문화관광정책이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하에 ‘문화의 힘’으로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추구하고, 문화주의를 통한 ‘성숙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정체성과 보편성의 조화로 ‘열린 문화’를 구현한다는 지향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 2) 북한의 사회문화교류 정책

북한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는 문학을 비롯하여 음악·미술·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로서, 북한은 이 문화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목적주의 예술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관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는 문화의 본질적 특성과 이념을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은 마르크스-레닌의 문예관으로부터 비롯된 예술의 기본 이념이지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대두된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체문예이론으로 대체하고 그 내용을 변형하여 문예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사회문화에서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성의 이념에 따라 사회문화는 “당의 노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sup>6)</sup>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회문화의 세 가지 본질 중에서 ‘당성’을 ‘노동계급성의 가장 철저한 표현이며 인민성의 가장 높은 형태’로 규정하여 당성을 노동계급성이나 인민성보다 우위에 놓고 당성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에 대한 철저한 복무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로 모든 문화를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회문화분야는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즉 1945년 해방 직후부터 1960년 초반에 걸친 ‘격동기’와 6·25전쟁, 그리고 전후의 복구사업, 김일성의 우상화 및 신격화, 최근의 김정일 우상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이러한 과정은 북한의 사회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임에 틀림없다.

이후인 1956년 8월에는 친소세력과 추종세력을 숙청 제거하면서 북한은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함에 있어 작가들을 통제하고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사회문화분야의 새로운 통일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1961년 3월 2일 ‘조선문화예술총동맹’(이하 ‘문예총’)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부터 북한의 문예정책은 작품창작에 있어 ‘사회주의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준

6) ‘김일성저작집’ 제35권, p.378 참조.

수, 당성·계급성·인민성 원칙의 관철,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의 확립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은 김일성 가족들을 이상화하는 작품의 생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다.

한편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을 김정일이 주도했듯이 주체문예이론 역시 김정일에 의해 형성된 문예이론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문예관, 기본 이념, 창작방법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중국적으로는 모든 문화의 기본 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문예이론은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당의 문예정책 관철과 당의 유일사상이 정확히 구현된 문화예술작품을 만들어 낼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이론은 주체사상의 기본 원리인 '공산주의적 인간학'을 기초로 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 이념인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종속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형화론<sup>8)</sup>, 종자론, 속도전 등을 기본 이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북한이 문화부문에 크게 관심을 나타내게 된 것은 김정일의 등장 시기부터로 간주되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부문혁명에 관련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작업이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노동신문에서는 "깊은 통찰력으로 문화예술혁명을 일으키는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는 영도자"로서 김정일을 치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사회문화부문은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 아래 오늘날까지 통제되고 있다.

북한의 문화부문정책에 있어 달라진 것을 굳이 지적한다면 당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던 북한의 문화예술이 김정일에 의해 보다 기대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 3) 남북한의 사회문화교류 정책 비교

남북한 사회는 제각기 특유한 사회문화목표와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화의 향유방법 등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우리나라는 인간의 이성, 자유, 평등 그리고 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회개방적 문화목표 위에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가치체계의 확립을 추구해 온 반면, 북한은 유물사관과 주체사관의 전제 하에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체계를 추구하면서

7)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리론', p.20 참조.

8) "공산주의적 인간을 기본 주인공으로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사상성과 생활을 형상화하는 것"을 의미함.



실제로는 김일성 및 김정일이라는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을 절대가치로 강요해 옴으로써 문화목표와 정책, 수단 및 향유방법에서 대조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북한의 모든 사회문화활동은 당정책의 구현, 공산주의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 등에 목표를 두고 내용과 기본방향을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구현과 사상·문화혁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사회문화는 공산체제와 당정책을 정당화·합리화하는 수단으로 됨으로써 이데올로기문화, 목적문화, 정치문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것은 문예창작활동이 당의 통제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집단적 창작활동과 주제별 작품제작이 할당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질화과정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의 가치관과 습성에는 5천년 동안 내려온 한민족만의 특유한 기층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서 공통점과 동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서로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공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단초라 하겠는데,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인간본성에 배치되는 정치교화를 통한 사상혁명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 3. 남북한의 교류사업의 특수성

#### 1)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근거

남북의 사회문화분야 교류는 '7.7 특별선언'과 그 후속 조치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마련되고, 1990년에는 '남북문화교류 5원칙' 발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인 1991년에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1992년에는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어서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교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

이 가운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남북한간 사회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노무현대통령하의 '참여정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협력사업'의 범위(제2조)에 대해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1997년에 제정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회, 문화분야 협력사업을...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규정(제3조)하고 있다.

부'하에서도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에 바탕을 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번영정책은 반세기 이상의 대결과 반목을 거듭해 온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성급하게 조속한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는 평화정착의 기반 위에서 남북간의 화해도모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분단구조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민족사의 대전환점의 계기가 되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당국이 대규모 교류·협력사업에 직접 당사자로 나서고 있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은 북한대로 문화교류·협력의 확대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에 따른 귀결로서 이제 정부에서 사회문화단체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부터 유통업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북한과의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금강산관광-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분야와 함께 남북한 교류협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남북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문화교류는 2007년 남북정상선언(10.4)에서 "남과 북은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하여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sup>10)</sup>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말하자면, 남북간 다양한 사회문화부문에서의 교류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의 폭이 넓기 때문에 남북 상호간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상대방인 북한에게도 개방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정치-군사적 긴장상황 속에서도 화해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완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특수성

남북한간에 이루어지는 사회문화부문 교류는 다른 부문의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민족내부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산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잇점이 있다.

또한 외국과의 교류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언어소통이나 의사전달과정상 오해와 의사전달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성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남북한이 반세기 이상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언어, 특히 각종 용어의 의미를 서로 달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이 있으나, 적어도 외국과의 경우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다.

셋째로는, 남북한간에는 아직까지 전화·팩스·인터넷 등 직접 통신이 거의 되어 있

10) '정상선언' 제 6항 참조.

지 않기 때문에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상대방과의 실시간 연락과 협의과정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넷째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 상대방과의 대면협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중국의 심양이나 연길-북경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사업상대방과의 사전협의를 이루어진다면 평양이나 백두산, 남포 등에서 북측 상대방과 직접 협의를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문자 그대로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로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할 것인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나, 아니면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sup>11)</sup> 등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현실 때문에 곤혹감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도 폐쇄적인 문화를 유지해 온 북한과 자유분방한 문화를 겪어온 우리와의 사이에 온존하는 문화적 이질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에 거의 '문외한'인 북측 상대방과의 대상사업 논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출의 어려움, 오랜 기간동안 '전체와 집단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개인과 개성, 자유를 겪어보지 못한 '자아개발과 경쟁이 배제된 획일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북측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등도 남북교류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성으로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과의 교류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을 요약하여 살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으로는 1)민족내부간 거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의 반입-반출과정에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2)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공통언어'를 통해 비교적 의사전달이 쉽다는 점, 3)북한의 '노동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좋다는 점, 4)컴퓨터나 기계를 이용하기 보다는 '세세하고 꼼꼼하게'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5)노동단가 및 교류사업 추진상 필요한 노동단가나 시설사용료 등 소요경비가 우리에게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점으로는 1)처음 교류사업을 추진하려 할 경우 북측과의 연결이 매우 어려워 '중개인'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2)사업지도와 확인을 위한 수시 왕래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 3)전력이나 도로사정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4)대부분의 경우 제3국을 경유해야만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 5)물류비, 체류비 외에 이른바 '입북료' 등 생각지도 않던 부대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적시할 수 있을 것이다.

11) 현재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대부분의 초청장을 '민화협'이 발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 4. 에필로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간 사회문화교류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측과의 교류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해 당황하거나 좌절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손자병법에 있듯이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의 지혜를 발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쳐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결론에 대신하여 착안사항을 몇 가지 적시하기로 한다.<sup>12)</sup>

첫째, 교류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북측의 대상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조사와 북한의 독특한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 및 북한실상에 관한 서적이거나 자료들을 읽거나, 방북경험자 및 북한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물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전략이나 구상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류-협력 상대방의 실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상대자가 북한내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예기치 않은 손실이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어느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비중과 인맥의 폭과 깊이 등에 착안점을 두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가능하면 직접 교류-협력 상대방을 만나 ‘사소한 것까지도 세세하게 질문을 하는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업을 하고자 하는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직접 관련설비나 자료, 시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째,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직접 협의를 할 경우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명백히 제시하여야 하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합의서’나 ‘계약서’의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에게 맞게 풀어서 쓰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남북한간 교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회문화부문의 교류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질화를 꾀하는 미래지향적인 교류자세와 거시적 입장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12)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5 및 통일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북경협현장 길라잡이 : 남과 북을 잇는 성공지킴이, 2007과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 실무안내, 2006 등을 전반적으로 참조.

이는 과거 회귀적인 동질성 회복은 바람직하지도,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함양하고, 이질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평화통일의 진정한 문을 여는 견인차적 소임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한견주의'식의 과도한 망상을 갖고 행하는 졸속한 대북접촉은 지금 시점에서 자제해야 할 것이며, 북한과의 교류나 거래 역시 이것이 비록 민족내부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편적 관행과 원칙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석승, 『북한학개론』, 법문사, 1999.
2. ----- 외, 『북한대사전』, 북한연구소, 2002
3. -----외, 『국제사회와 북한』, 홍익재, 2005.
4. ----- 외, 『남북 정치경제와 사회문화 교류전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5. 김연중, 『남북 인적교류의 현황과 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6.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2003.
7. 통일부, 『2004 북한개요』, 2005.
8.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교역 실무안내』, 2006.
9. 통일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남북경협현장 길라잡이 : 남과 북을 잇는 성공지킴이』, 2007.
10.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방문 길라잡이』, 2006.
11.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월간), 2006-2007.
12. 통일부, 『남북 및 북핵 관련 주요 합의서』 2007.
13. 통일부, 『통일백서』, 2005-2007.

以外 多數 文獻 參照



---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의 방안





#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의 방안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북한 고문헌 자료조사 사업의 기반 |
| 2. 북한의 고문헌 관련 정책     | 5. 단계별 남북 고문헌 조사연구 방안 |
| 3. 북한의 고문헌 발굴 및 연구현황 | 6. 맺음말                |

## 1. 머리말

한국학연구의 자료로는 다양한 매체와 기록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문헌자료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방 이전의 전통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학,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는 이들 문헌자료의 활용이 절대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문서와 고서를 아우르는 고문헌에 대한 조사·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괄목할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고문헌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는 북한내 문헌자료에 대한 정보와 접근의 한계라는 부분이다. 고문서의 경우 북한내 소장자료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무한 상태이다.<sup>1)</sup>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2)</sup>

- 한국학연구의 토대사업으로 남북을 아우르는 온전한 의미의 한국학을 성립·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이다.
- 1997년 10월 남북 양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통해 역사와 언어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제안이다.

한국학 연구의 토대가 되는 고문헌 조사·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남과 북의 공동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문헌 자료에 대한 상호 협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 다만 개성 松商의 「四介松都治簿冊」이 북한에 소장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답매매명문에 대한 분석의 사례에서 북한지역 자료가 확인되지 못하였다. 鄭鉄煥, 「17世紀 銅錢流通의 政策과 實態」, 韓國學中央研究院, 2007. 126-133쪽. 한편, 본 논고가 작성된 시점은 2007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한다.

2)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사업계획서」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84년 당시 교류방안에서는 주로 분단이래 문화유산의 순수성이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왜곡·변질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질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민족동질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실리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한의 고문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향후 북한과의 교류시 제공자료의 현황과 연구 방법에 대한 의견교환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관련한 고문헌자료의 발굴과 소장실태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 단계적인 교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북한의 고문헌 관련 정책

북한에서는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물질문화유물’이라 하고 사적지와 경승지에 해당하는 것을 ‘역사유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4)</sup> 문화유물의 범주를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구분하고 고서적, 고문서를 후자에 포함시켰다.<sup>5)</sup> 북한에서의 문화재 정책, 특히 고전적에 대한 흐름을 통해 향후 고문헌조사 사업 착수시 원활한 협조를 도출해 내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 1) 단일화된 고문헌 수집조사사업추진 : 1970년 이전

북한은 해방과 동시에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내세웠다. 1946.4월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보물·고적·명승·천년기념물보존령”을 공포하고 각도 인민위원회에 “보물·고적·명승천년기념물보존회”를 설치하였다. 이듬해에는 지방에 박물관을 건립하였다.<sup>6)</sup> 1948년 11월에 “물질문화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공포하고 내각직속으로

3) 교류의 목적을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한간의 긴장완화 및 갈등해소, 단일민족문화 창달, 북한사회의 개방화 유도라고 언급하였다.(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 87-88쪽.)

任孝宰 역시 북한의 유적발굴 정책이 민족문화를 공산주의적 계급문화를 개조시켜 정치적 선전활동의 매개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발굴고증내용의 왜곡사례를 언급하였다.(任孝宰, 『北韓의 遺物遺蹟發掘實態 分析 및 南北學術交流方案』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1984.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20쪽.)

4) 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 7쪽.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사회과학출판사, 1995. 제1장 제2조.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2004. 제1장 제2조.  
역사유물에는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을 들고 있다.

6) 평양박물관, 청진·신의주·함흥·묘향산박물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49년 8월 내각결정 100호로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sup>7)</sup> 본 규정 제1조에는 그 범위를 ‘역사상의 기념물 및 학술연구상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유적 건조물 회화 공예품 전적(典籍) 등 유물을 언급하고 있다.<sup>8)</sup>

이 시기 역사박물관을 설치하고 국립중앙 도서관의 발족과 지방 도서관들의 개설은 산일된 문헌들과 고문서류의 수집 정리 사업에 기여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쟁전까지 각 대학들과 도서관, 역사 박물관들에는 적지 않은 자료들이 수집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란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로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특별한 유실 없이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전란 후에는 전란전보다 박물관과 도서관의 소장품이 수배로 증가하였다고 한다.<sup>9)</sup>

1950년 10월 ‘과학원’을 설립하여 이에 ‘물질문화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의 행정책임을 ‘물질문화유물 보존위원회’에서 문화선전성 ‘문화유물 보존국’으로 이관하였다. 1964년 2월에 내각결정 제11호에 의해 과학원에서 분리된 ‘사회과학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문화재보수와 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박물관의 건립과 확장에 주력하였다. 한편 1958년이후부터 이른바 ‘당성·노동계급성’을 관철시키기 시작하여 1972년 신헌법 제37조에서 민족문화유산을 ‘사회주의적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하였다. 1975년까지 3,200여개의 유적과 119,000건의 유물을 평가완료하였다.<sup>10)</sup>

북한에서는 1950년대부터 고전에 대한 번역과 복각사업을 추진하였다. 역사연구를 대중화하며 역사연구 사업을 급속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산재하여 있는 자료들을 무조건하고 수집하며 그를 정리 번역하는 곤란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1)</sup> ‘산일되어 가는 고문헌들과 고문서 및 금석문들에 대한 수집 사업은 과학원 역사연구소를 위시하여 과학원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중앙 및 지방의 역사 박물관들 및 도서관들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과학원 역사 연구소에서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고문서들에 대한 통일적 정리 사업과 국내외로부터의 고문헌 수집 사업을 계속 추진시키고 있다.’<sup>12)</sup> 이러한 일련의 주장에는 물론 전근대시대의 기록물들을 포괄하고 있으나 이른바 ‘근대 이후의 해방 투쟁사와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내용도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였다.<sup>13)</sup>

7) 任孝宰, 「北韓의 遺物遺蹟發掘實態 分析 및 南北學術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1984.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8) 任孝宰, 「北韓의 遺物遺蹟發掘實態 分析 및 南北學術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1984.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13쪽(물질문화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9) 「8.15해방후 조선 역사 학계가 걸어 온 길」『역사과학』1960-4. 1960. 3-6쪽.

10) 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15쪽.

11) 「조선 역사 과학 전선의 과업에 대하여」『역사과학』1955-1, 6쪽.

12)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우리 역사 학계가 거둔 성과」『역사과학』1961-5, 1961. 6쪽.

13) 김석형, 「조선 역사 연구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역사과학』1957-3, 1957. 10쪽.; 「조

1967.5-1974.2월 북한은 당 창건 이후 이른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계속 펼쳤다.<sup>14)</sup> 당시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확립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지주, 친일파 등에 대한 청산과 문제로 인해 이들이 소장한 자료가 입수되었거나 반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의 문화유적 발굴은 물론 전적자료 등의 조사·연구사업이 1960년대 후반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sup>15)</sup>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 2) 문화유물 정책에서의 김정일 중심체제 구축 : 1980년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김정일이 문화정책의 전면에 등장하였다. 1981년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이조실록을 완역하기도 하였다. 1984년 당시 문화재의 보존·관리·복원과 개수는 정무원 직속의 ‘문화유물보존지도국’과 지방의 ‘문화유적관리소’에서 담당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의 조사·발굴·연구에 있어서는 중앙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민족고전연구소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다.<sup>16)</sup>

이에 앞서 1976년 2월 결정 제6호와 1983년 3월 결정 제9호 등을 통하여 모든 역사유적유물들은 반드시 국가적인 평가를 받으며 그것을 빠짐없이 제때에 문화보존총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중앙역사박물관과 함흥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역사박물관들에서는 1970-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전반적역사유물에 대한 심의평가사업을 수행하였다.<sup>17)</sup>

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우리 력사 학계가 거둔 성과」『력사과학』1961-5, 1961. 3-5쪽.; 김석형, 「해방후 조선 력사학의 발전」『력사과학』1962-2, 1962. 10-11쪽.

‘우리는 기존 사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분산되고 파묻혀 있는 많은 고문헌들과 귀중한 민간 사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서 리용하도록 하며 특히 항일 무장 투쟁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들과 업적들을 밝히는 회상기 수집 사업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우리 나라 력사를 조선 인민의 입장에서, 로동 계급의 립장에서 연구 분석하자」『력사과학』1961-1.1961. 4쪽.)

14) 1960년대 후반기 이후 과거의 민족문화유산으로 전해오는 역사유적유물들에 대하여 주체성의 원칙에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욱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지적하였다.(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과학논문집』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24쪽.)

15) 임효재는 해방직후 의욕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했던 근본원인이 유물사관을 실증해 줄 수 있는 자료의 획득이 점차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판단하였다.(任孝宰, 「北韓의 遺物遺蹟發掘實態 分析 및 南北學術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1984.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19쪽.)

16) 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10-16쪽.  
任孝宰, 「北韓의 遺物遺蹟發掘實態 分析 및 南北學術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1984.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7) 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과학논문집』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25쪽.

1972년 제23호와 1976년 2월 결정 제6호, 그리고 1985년 결정 제41호를 채택하여 문화유물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중앙에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담당지도하는 문화보존총국을 두고 도에는 문화유적을 직접 관리하는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주요지역의 문화유적과 유물 보존관리사업은 지역적으로 해당 역사박물관들에서 맡아하게 하였으며 군에서는 군행정경제위원회가 문화보존사업을 담당수행하도록 하였다.<sup>18)</sup>

### 3) 90년대 이후의 문화유물 정책

북한은 1994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회의에서 법령 제26호로 승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이하 문화유물보호법)'을 공포하였다.<sup>19)</sup> 문화유물보호법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0)</sup> 본 법령의 목적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태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21)</sup>

북한에서는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받은 역사유물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22)</sup>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에 있어서 그 시행 주체로서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에서는 유적에 대한 발굴을 중심으로 법령을 규정하고 있다. 역사유물수집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주관하도록 규정하였다.<sup>23)</sup> 아울러 국가에 바친 역사유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에 따라 보상해 주도록 하였다.

문화유산의 관리와 조사연구는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그 담당부서는 '문화보존지도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물의 경우는 '국보문화유물→준국보문화유물→일반문화유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의 평가는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하도록 하였다.<sup>24)</sup>

18) 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역사과학론문집』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27-128쪽.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사회과학출판사, 1995.

20)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사회과학출판사, 1995. 제1장 제1조.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사회과학출판사, 1995. 제1장 제3조.  
한편 2002년에 채택된 상속법에 의하면(2002년 3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령 제2882호) 상속재산으로 6개 항목을 지정하고 있다.(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2004. 503-504쪽.)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사회과학출판사, 1995. 제2장 제14조.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사회과학출판사, 1995. 제3장 제17조.

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이 수정되었다.<sup>25)</sup> 수정된 내용은 역사유적의 지정과 정비, 박물관의 건립 등에 대해 기존 ‘정무원’이 주관하던 것에서 ‘내각’으로 변경되었을 뿐 변경은 없다.<sup>26)</sup>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명기하였다.

### 3. 북한의 고문헌 발굴 및 연구현황

#### 1) 고문헌자료의 조사·연구

##### (1) 고문헌자료 조사와 수집

북한에서는 해방이후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 일관된 조직과 정책적 방향을 견지하고 의욕적으로 고문헌자료에 대한 수집과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며, 기존 자료의 관리와 연구에 치중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보관경위에 대한 연구와 그 입수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구왕궁 장서각에 보관되었던 적장산본의 실록이 북한으로 이송되었다.<sup>27)</sup>

1962년 6월에는 중국으로부터 12종의 고서들을 기증받기도 하였다.<sup>28)</sup> 이들 고서들 중 ‘政範’, ‘耆社慶會帖’ 등이 주목된다. 정범은 18세기경의 목민서, 기사경회첩은 광무7년의 기로들의 잔치첩이라고 한다.

1985년에 북한역사학계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체분석이 있었다. 여기서 민족문화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의 성과를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민족고전 번역복각사업을 들었다. 역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조사발굴하여 보존한 것을 언급하고 있으나,<sup>29)</sup> 특별히 고문헌 수집 조사와 관련한 성과는 언급되지 않았다.

‘리조실록 번역실’이 ‘민족고전연구소’로 확장되면서 왕조실록 번역을 수행하였다.<sup>30)</sup>

25)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2004. 333-340쪽.

26) 1998년 헌법개정으로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됐다.

27) 홍기문, 「하나의 문화재를 놓으시고」 『역사과학』1978-2, 1978.; 박봉일, 「‘리조실록’과 그 보관경위」 『역사과학』15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62쪽.; 사회과학출판사,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시여』, 평양종합인쇄공장, 1991, 235-2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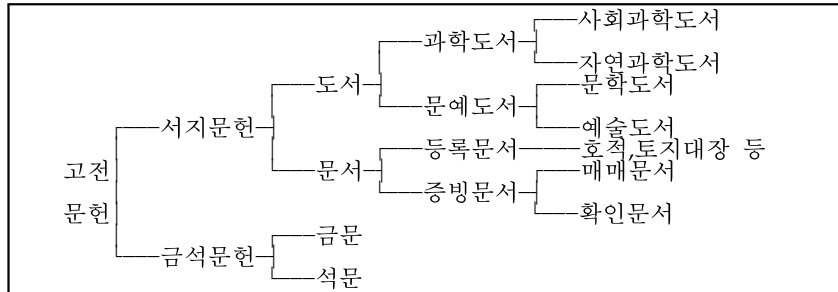
28) 「중국 정부가 우리 나라 고전도서를 기증」 『역사과학』1962-6, 1962. 93쪽.

29) 전영률, 「주체의 역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역사과학』1985-3, 1985.5-6쪽.

30) 과학원 민족고전 번역출판 전문도서 편찬위원회, 고전연구실 설립(1956)→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승격(1960)→민족고전연구소로 승격(1977)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민족고전학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당시 지적된 민족고전학 연구를 위한 고전문헌의 분류는 아래와 같다.

<고전문헌 분류표><sup>31)</sup>



고전문헌의 분류에 있어서 서지문헌의 하위 단위로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 문서는 다시 등록문서, 증빙문서로 세분되는데 호적, 토지대장, 매매문서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고문서자료로 추정 가능성이 있다.

민족고전학의 정의는 고전 유산들을 수집, 감별, 정리, 해석, 평가하는데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문제들을 연구·해명하는 학문이다. 이와 관련한 학문분야로는 문헌학, 고증학, 번역학, 한문학, 사전학으로 분류하였다.<sup>32)</sup>

김정일은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독려했다. “옛날 책을 비롯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sup>33)</sup> 그는 사료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기록사료’를 언급하였다. “사료에는 기록사료, 물질사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책과 같은 기록사료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료에도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sup>34)</sup> 이러한 언급은 197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된 고문헌에 대한 조사·수집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관심이 물질사료로 이동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고문헌자료를 이용한 연구

북한에서 고문헌자료를 이용한 연구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역사과학’을 검토하였다. ‘역사과학’에는 역사상식, 강좌, 학회소식, 새책소개, 자료소개 등과 같이 교양적인 성격의 잡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연구관심과 연구경향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다.

역사과학에서 문헌학에 대한 글을 처음으로 취급한 것은 1965년의 일이었다. 여기서 ‘조선 문헌학은 문헌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그의 전면적인 이용에서 제기되는 제반 이론적 문제를 연구하는 역사과학의 한 분야’라고 규정하였다.<sup>35)</sup>

역사과학에는 학술적인 연구에 있어서 조선시대 관련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

31)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역사과학』160호, 역사과학편집위원회, 1996. 39쪽.

32)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역사과학』160호, 역사과학편집위원회, 1996. 40-41쪽.

33) 길영수, 「기재사조에 대한 간단한 고찰」『역사과학』166,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39쪽.

34) 박순재, 「인장의 사료적가치」『역사과학』170, 중앙과학사전종합출판사, 1999, 55쪽.

고 있다. 주로 관찬사료를 이용한 기초적인 연구수준이다.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연구의 심도가 약해지고 있다. 이는 연구성과의 질적 저하인지 혹은 학보 간행방침의 변화인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고전을 이용한 자료소개와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36)</sup> 철산의 ‘백량면지’와 같은 유일 필사본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료소개를 통해 공개하였다.<sup>37)</sup> 철산군 ‘백량면지’는 편안도 출신 학자 정의답이 1831년에 간행한 지리지로서 사회과학원 도서실 소장의 필사본 자료이다. 이들 외에도 개별자료를 소개한 논고가 있다.<sup>38)</sup> 김재로의 일기 ‘란여(爛餘)’를 발굴하였다.<sup>39)</sup> 계초 자료를 단편적으로 소개하였다.<sup>40)</sup> 그리고 서지학적 연구를 시도하거나 출판인쇄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41)</sup>

고문헌에 대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약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고문서 정의는 ‘조선대백과사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고문서는 책으로 묶여지지 않은 단편적인 옛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고문서로는 노비매매, 토지매매, 재산상속 등에 관한 문서와 호적, 교지, 편지, 신소장 등으로 분류하였다.<sup>42)</sup>

대중서에서는 각종 유적·유물을 소개함과 아울러 그 보존법에 대한 서술에서 고문헌과 紙類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sup>43)</sup> 과학원과 문화보존연구소 연구사들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무덤, 목조건축, 금속류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다.<sup>44)</sup> 섬유, 종이로 된 유물과 돌조각품들을 연구보존하기 위한 성과도 이룩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사례 나열은 없다.

북한에서도 자료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과학원의 언어학자들은 성천일

35) 최영식, 「조선 문헌학의 대상과 과업」『력사과학』1965-6, 1965. 50쪽.

36) 1985년 이후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실록의 편찬경위 및 자료적 가치에 대한 평가 관련 논문이 빈번하였다. 이 외에도 문헌을 소개·연구한 논문이 다수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허원영의 논고 참고바람.(허원영,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현황과 고문헌자료 협력 방안」『공청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37) 리창숙, 「철산군 ‘백량면지’에 대하여」『력사과학』12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8.

38) 윤용태,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에 대하여」『력사과학』13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39) 김재로(金在魯) 저술의 25권 12책 필사본이다.(김태균, 「란여(爛餘)의 사료적 가치」『력사과학』1959-4, 1959.)

본 해제에서는 『조선 도서 해제』를 참고하여 저자를 확정하고 있다. 맺음말에서는 『현은산일기(玄殷山日記)』와 함께 출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40) 홍희유, 「농민 폭동 및 의병 투쟁 관계 자료」『력사과학』1963-4, 1963.

41) 리철, 「‘규장각지’에 대한 문헌서지학적고찰」『력사과학』16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7.;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조선기술발전사』4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4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2), 평양종합인쇄공장, 1995. 256쪽.

43) 조선문화보존사, 『문화유산 애호가들의 벗』, 2005, 평양종합인쇄공장.

44) 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과학논문집』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28쪽.



대의 지명유래에 대한 조사과정에 각각 다른 책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 같은 두 장의 옛 성천읍도를 발굴하였다.<sup>45)</sup> 자료의 발굴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아마 기존에 조사된 자료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발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고문헌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감소는 문화유물 정책에 있어 고고, 건축 등에 중점을 둔데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 소개된 북한 문화재 관련 자료의 현황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북한의 유물·유적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70년대부터 있었다. 1973년 中央情報部에서 파악한 현황은 고분과 건축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sup>46)</sup> 1980년대 남한에서는 북한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하였다.<sup>47)</sup> 한편 1984년의 연구서에서는 북한의 문화재 현황에 대한 파악과정에서 ‘유물·유적, 무형문화재,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고 구분하면서 전적류를 포함한 고문헌은 언급되지 못하였다.<sup>48)</sup>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북한문화재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사업을 진행하여 일련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sup>49)</sup> 이러한 성과에 바탕 하여 1993년에는 북한문화재 사진전을 개최하였다.<sup>50)</sup>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민간부분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51)</sup> 북한에서 간행된 문화재 관련 도록이 남한에 유통되거나 간행되었다.<sup>52)</sup> 2000년대 이후로는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술 연구사적 시각에서 접근한 연구결과물을 간행하였다.<sup>53)</sup>

## 2) 주요 고문헌소장처 현황-고문서를 중심으로

45) 박영해, 「새로 발굴한 ‘성주읍도록’의 편찬시기와 그 사료적가치에 대하여」『역사과학』 16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7, 50쪽.

46) 中央情報部, 『北韓 遺物·遺蹟 現況』, 1973.

47) 1960년 12.30일 국보 63점, 고적41곳을 포함한 143점(곳)이었다. 그리고 1984년 당시 문교부에서 52점을 ‘북한소재 문화재’로 지정하였다.(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 17-18쪽)

48) 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 22-61쪽.

4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 實態와 現況』, 198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關係文獻彙報』, 1990.; 韓國安保教育協會, 『北韓文化財大觀』, 199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資料目錄』, 1992.; 國立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解說集』I-IV, 1997-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北韓文化財關係文獻彙報 增補版』, 2007.

50) 國立文化財研究所, 『北韓文化財解說集』I, 1997. 3쪽.

51) 정재훈, 이용조의 공저, 『북한의 문화유산』I,II, 고려원, 1990.

52)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1-20, 1988-199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I-V,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53)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남북역사학논총 시리즈이다.

(1)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

북한에서의 고문서자료는 조선시대, 특히 임란 이후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전의 자료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문서를 연구에 적극 활용한 인물은 홍희유, 김선호, 장청옥, 홍기문, 허중호 등이다.

홍희유와 김선호는<sup>54)</sup> 공인연구에 고문서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특히 홍희유는 인삼재배와 관련하여 18세기 개성상인과 삼포경영자들 사이의 대부관계를 규명하면서 이른바 개성의 상업부기책을 인용하고 있다. 그가 인용한 상업부기책은 ‘외상장책’, ‘타급장책’으로 언급되고 있다.<sup>55)</sup>

북한내 고문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1><sup>56)</sup>

건륭47년 임인 안처신에게 주는 명문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다. 근래에 국역이 자주  
 덮쳐 허다한 부채를 달을 길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  
 로 공론에 따르 액정좌리(掖庭坐里) 30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한몫당 350량씩 값을 받고 영영 넘겨준  
 다. 이후에 만일 액정좌일수가 줄어들면 본값을  
 방에서 즉시 내주되 혹시 남는 값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그 값을 내주고 되돌려주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잡담하는 일이 생기면 이 기록문건으로써  
 바로잡을 것.  
 수석 최중적, 유종적  
 수좌 박태경  
 이좌 박상표  
 삼좌 리홍창  
 공원 리인초, 박창윤  
 삼강 신석리, 윤동식  
 본방 리면희, 손덕휘, 방덕희, 김정설, 성경중,  
 천기승, 김이륜, 김리서, 박세희, 안창욱,  
 박중옥, 김정기, 최창규, 최창복, 리창대,  
 조득봉, 안경신, 유종철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보관 고문서 제14책 50페이지>

<자료-2><sup>57)</sup>

첩문 장진앞  
 이 첩문은 선혜청공사지계 1패가 관청에 켜  
 던 빛을 다 물고 다시 공가를 반대 되었는데 하  
 나의 집단의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것은 옳은것  
 이 아니므로 대회공론에 따라 1패와 2패를 합친  
 다. 1패의 12몫, 2패의 10몫 합 22몫으로써 매  
 개인에게 주는 도중첩문을 만들며 관첩문과 공  
 물권은 그전대로 사용하도록 결정한다. 앞으로  
 매매할 때에는 이 첩문으로 증명할 것이다.  
 선혜청 공사지계대방  
 수좌 현업  
 상임 김영  
 홍선, 김성, 김진, 김연, 최  
 현, 리중, 장진, 박항, 한  
 덕, 리씨, 김준  
 도광 27년(1847) 정미3월  
 <고문서 제13책 35페이지>

54) 김선호, 「고문서를 통하여본 공인대방의 구조와 기능」『역사과학』11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김선호, 「18세기말 이후 공인의 쇠퇴물락」『역사과학』12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김선호, 「리조봉건말기 공인제도에 관한 연구」『역사과학논문집』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김선호, 「리조시기 기인제도에에서의 변화」『역사과학』14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1.

55) 홍희유, 「17세기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삼포경영」『역사과학』11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32-33쪽.  
 이들 외에도 그의 연구논저에는 고문서가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홍희유, 「18세기이후 점촌에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역사과학』10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56) 홍희유, 「17세기이후 형성된 공인제도에 대하여」『역사과학』11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27쪽.

57) 김선호, 「고문서를 통하여본 공인대방의 구조와 기능」『역사과학』11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10쪽.

장청옥은 17-18세기 지주의 성장문제와 관련하여 토지매매명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고문서'와 홍기문의 '리두연구'를 토대로 토지문서 115건을 활용하였다.<sup>58)</sup> 홍기문은 그의 저서 '리두연구'에서 활용한 고문서를 수록하고 있다. 그가 인용한 자료는 '재산 관계의 고문서', '보고문 및 지시문', '토지매매문서', '노비매매문서' 등이다.<sup>59)</sup>

허종호도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문서를 이용하였다. 비록 북한소재 고문서는 아니지만 울곡 이이의 매매명문을 인용한다거나 '로강서원'의 '량안, '건원소전여기'를 참고하였다.<sup>60)</sup>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전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한편 그는 인민대학습당의 고문서를 인용하였다. 자료는 '초산민소축'으로 19세기 초 안주 문곡면의 소작문제를 다룬 자료이다.<sup>61)</sup> 그는 조선민속박물관 소장의 고문서도 인용하였다. 정액지대와 도지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인용하고 있다.<sup>62)</sup> 또한 둔전과 역위전의 도지관습에 대한 설명에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내의 중세사실 소장 고문서를 인용하였다.<sup>63)</sup> 한편 사리원역사박물관의 소장 고문서를 인용하여 도지권의 매매사실 논거로 제시하였다.<sup>64)</sup> 그는 일련의 연구에 있어 토지매매문서를 적극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 (2) 고문서 소장처 현황

홍희유와 김선호 등의 논문에서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보관고문서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고문서'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본 고문서가 자료집의 형태로 책자로 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sup>65)</sup> 인용된 상황으로 판단하였을 때 47책 이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66)</sup>

한편 홍희유의 『조선수공업사』에도 고문서가 인용되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고문서를 비롯하여 사리원역사박물관 고문서, 민속학박물관 소장 고문서가 확인된다.<sup>67)</sup>

58) 장청옥, 「17-18세기 서민지주의 장성에 의한 지배계급신분층의 변화」 『역사과학』 119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37쪽.

59) 홍기문, 『리두연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출판사, 1957. 357-416쪽.

60) 허종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 199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19쪽·189쪽.

홍희유, 「18세기 중엽 화폐 지대의 발생-建院所傳與記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1966-4, 1966.

61) 허종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 199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0쪽.

인민대학습당 고문서 25621호. 한편 그는 '해영일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출처와 소장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

62) 허종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 199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7쪽.

63) 허종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 199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16쪽.

64) 허종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 199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18쪽.

65) 홍희유, 「18세기 중엽 화폐 지대의 발생-建院所傳與記를 중심으로」 『역사과학』 1966-4, 1966. 8-10쪽.

66) 조선봉건말기경제사자료집 1권(과학원출판사, 1961.)에도 고문서가 소개되고 있다.

67) 홍희유, 『조선수공업사』 2, 공업종합출판사, 1991.

허중호는 자신의 저서에 인용된 고문서가 역사연구소 중세사 연구실 소장자료집에서 전제된 것으로 그 고문서들은 주로 중앙역사 박물관, 민속박물관, 중앙 도서관 및 사회과학원 도서관 소장의 것들이라고 밝히고 있다.<sup>68)</sup>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도 고서를 비롯하여 고문서자료가 다수 소장되어있다.<sup>69)</sup> 저자와 규격 등 간략한 서지사항을 갖춘 목록집이다. 이들 목록 중 膽錄, 鄉案, 啓錄, 狀啓草, 事例, 題辭, 日記, 節目과 간은 성책고문서도 다수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買記, 綸音, 傳令, 訓令, 疏章, 教旨, 戶口帳, 完文, 單子 등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고문서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문서 소장처는 다음과 같다. 중앙역사박물관,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원, 사리원역사박물관, 민속학박물관(조선민속박물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인민대학습당 등이다. 이들 외에도 각 지방 박물관 및 도서관에도 고문헌이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문헌이 소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박물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역사박물관, 해주역사박물관, 개성박물관, 사리원박물관, 청진박물관은 북한의 5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은 북한의 대표적 박물관으로 현재 10만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19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역사박물관에서 간행한 도록은 7개의 장으로 구분한 가운데 마지막 '7.회화, 서예 및 자수'로 구분하고 있다. 도록에는 김웅서화상, 강최성화상, 한호글씨(목판본), 이광사글씨, 조광진글씨, 김정희글씨 등이 수록되어 있다.<sup>70)</sup>

개성의 고려박물관은 12개호동에 4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려시대관련 1,000여점의 유적유물을 전시하고있다.<sup>71)</sup> 여기에는 팔만대장경과 고려시기금속활자가 전시된 이외에 문헌관련 자료는 도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해주역사박물관, 함흥역사박물관, 청진역사박물관, 신천역사박물관, 신의주역사박물관, 함흥역사박물관, 원산역사박물관, 청진역사박물관, 사리원역사박물관, 강계역사박물관,

함흥역사박물관은 중앙역사박물관과 함께 중요시하고 있다. 해주역사박물관, 청진역사박물관, 개성고려박물관, 사리원역사박물관 : 고고학적 유물들 중심이다. 도청소재 급 이상 지역에 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지역 발굴자료들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68) 허중호, 『조선봉건말기의 조각제연구』, 한마당, 1989. 8쪽.; 허중호, 『조선봉건말기의 조각제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재간행

69)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고서목록-한서분류목록』,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1958.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보존지도국 사진장편집실, 『조선중앙역사박물관』, 1979.;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문화보존사, 2004.; 지병목, 「북한의 주요 박물관과 문화유산」 『북한문화재해설집』IV, 2004. 185-186쪽.

71) 『고려박물관』, 조선중앙사진선전사, 2005.

## 5. 북한 고문헌 자료조사 사업의 기반

### 1) 사업 범위와 주체의 단일화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는 북한내의 고서, 고문서 등과 같은 고문헌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조사 및 협력 방안은 본 연구 참여자의 의견조율을 거친 최종방안이 아니다.

고문헌의 범주는 고문서와 고서를 비롯한 지류에 기록된 일체의 기록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금석문의 경우에도 탁본자료의 경우 범주에 포함시킨다.<sup>72)</sup> 북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문헌자료의 범위로 제한드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서분야에서는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에서 이미 수 차례의 예비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73)</sup>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고문헌에 대해 북측 사회과학원과 사전접촉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sup>74)</sup> 국립국어원도 한글 고전적 및 문헌자료와 관련하여 2007년도 3월 남북측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다.<sup>75)</sup> 이상의 사례 외에도 현재 남북간에는 불교계, 민간기구 등 많은 경로를 통하여 문화재의 교류와 관련한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sup>76)</sup>

다양한 경로와 방향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에 있어서 특히 고문헌 분야에 있어서는 향후 단일화된 접근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서의 경우는 문화관광부 혹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기존의 진행사업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글 고문헌에 대한 사업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고문서 자료에 있어서는 다년간 문중·서원·사찰 소장자료의 수집·조사 사업을 수행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의 고서, 고문서 조사·연구 사업과의 성격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상호 이해에 바탕한 효율성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분야별로 상호 협조·공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72) 고문서의 범주는 본고를 참고바람.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의 전개에 따라 금석문도 그 범주에 포함이 가능하며, 서원·사찰, 고가의 편액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73) 옥영정, 「북한 고서 자료 및 연구현황」『공청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74) 이서행, 「남북 학술교류의 현황과 과제」『공청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75) 당시 실무회의에는 국립국어원(2명), 국립중앙박물관(1명), 국립중앙도서관(2명)의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76) 최진옥, 「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의 의의와 전망」『공청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 2) 사업을 위한 기본현황

### (1) 연구인력

고서, 고문서, 한글고문헌으로 사업의 범주를 제한한다고 보았을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자의 확보는 비교적 용이하다.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는 북한소재 고문헌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관심과 협조를 도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경우에도 국어사, 고서, 고문서의 연구와 관련한 교수·연구진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특히 장서각의 경우 수 십년간의 자료 수집·연구와 관련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종사 연구원도 15명 이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문서는 고문서학회, 고서는 한국서지학회 등 학회의 공감대와 협조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과의 접촉과 관련한 전문가의 경우는 통일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연구와 관련한 일련의 대북접촉은 통일부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구진 참여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문화재 전시회와 관련하여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 (2) 장비와 예산의 확보

북한내 고문헌에 대한 조사의 결과물의 형태를 예단할 수는 없다. 결과물이 출판물, M.F, 복사, 사진, 디지털이미지 등의 형태일 수 있다. 연구는 최종적으로 원본자료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출판물의 경우 구입이나 판권확보를 통한 복간 등의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장비와 설비는 관련 업체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외 경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일련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MF 촬영기, 필름복사기의 경우 장서각에서 운영중인 장비가 있으며, 사진 및 디지털 이미지 가공을 위한 시설은 한국학정보센터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내에서 관련사업을 위한 장비를 요구할 경우 상기 관련 장비를 장기임대(대여) 하거나 가능할 경우 제공할 수도 있다.

고문헌 조사·연구와 관련해 소요되는 인적 물적 기반의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다양한 경로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집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학술적 교류와 관련하여 제안 할 수 있다. 학술진흥재단에서는 '특정목적사업→남북학술교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원을 도모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문화재청에서도 전적문화재, 고문서 자료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및 현황파악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소재 문헌자료 조사를 위한 제안을 통해 예산을 확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내에 북한 학술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서 고려가 가능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학기조자료사업'을 약 20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 영역 중 국학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문헌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핵심부분이

다. 북한내 문헌조사 관련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문헌조사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전개와 관련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업이 급진전 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투자 예산의 회수와 지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학술적 측면, 문화교류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 획득을 통한 설득력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이 지연될 경우에도 그와 관련한 일련의 경험적 축적, 대북 접촉과정에서 형성된 인적교류 및 각종 노하우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3) 연구의 추진방향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진전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와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상호교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북한내 고문헌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위해서는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성과의 도출을 위한 무리한 추진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본 연구에는 매우 불확실한 미래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대응 태도에 따라 본 조사·연구 계획은 예상밖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별 상황에 따른 접근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984년의 북한 문화재 교류방안검토에서도 단계적인 접근방안이 검토되었다.<sup>77)</sup>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도 북한내 문헌자료의 조사를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적인 추진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각 단계별 추진 사항에 있어서는 그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인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6. 단계별 남북 고문헌 조사연구 방안

남북 고문헌 조사와 연구사업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은 3단계로 구성하였다. 현 시점에서 사업단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구체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업단계를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77) 임효재는 고고학분야의 교류방안으로서 1단계 교류기반 구축 및 자료교환, 2단계 공동연구제도 형성, 3단계 공동연구체제로 제안하였다.(任孝宰, 「北韓의 遺物遺蹟發掘實態 分析 및 南北學術交流方案」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1984.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174-192쪽.) 양창석은 ‘자료교환→전시회 및 인사교류→공동연구 및 공연구단 공동구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류방안을 제시하였다.(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 88-90쪽.)

## 1) 1단계 : 사업기반 구축과 상호신뢰 형성

남북 상호간의 문헌자료, 특히 고서 및 고문서와 같은 고문헌 자료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사업의 기반을 점검하고 본 연구와 관련한 남북 실무자간의 접촉을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1) 남북 고문헌 조사·연구의 현황에 대한 심화연구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남북한 고문헌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자료의 성격에 따른 연구주체를 설정하고 접근 방안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내 고문헌 자료에 대한 간행자료의 현황을 정리한다. 특히 북한내 고문헌자료에 대한 고서 및 고문서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한 목록화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실무접촉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북한내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연구참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본 연구분야와 유관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새터민'을 통해 수집 할 수 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기관과 단체의 요청에 따라 '새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sup>78)</sup> 이러한 북한실상설명회의 경우 요청 기관과 단체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새터민과의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내 개성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차원에서 개성관광이 12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본 코스는 개성시내 당일 관광코스로서 개성의 '고려박물관' 답사가 포함되어있다.<sup>79)</sup> 비록 공식적인 현장조사는 아닐지라도 간접경험의 형태로서 개성지역에 대한 답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2) 고문헌 조사·연구 실무자간의 접촉

고문헌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있어서는 현재 북한에서 '민족화해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은 고문헌 조사·연구 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국립국어원에서 한글자료 교류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족화해협의회에서는 두 기관간의 사업방향에 대한 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sup>80)</sup> 이는 곧 북한 내의 유관 기관에 대해 고문헌에 대한 남측과의 협력을 조정하거나 적어도 북측 기관·연구자를 선임할 우선권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78) [http://unibook.unikorea.go.kr/new2/silsang/sub\\_02.jsp](http://unibook.unikorea.go.kr/new2/silsang/sub_02.jsp)(2007년 12월 현재)

한편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공동으로 '통일부 새터민취업지원사이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http://sjobcc.or.kr/>)

79)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대아산'에 문의할 수 있다.(<http://www.hyundai-asan.com/>)

80) 「민족화해협의회 전문」2007.5.20.



<민족화해협의회 구성 및 관련인력>81)

회 장	김영대
부 회 장	강연학 김경락 김영성 김완수 이문환 허혁필 조충한 주진구 김성일 이충복 유영선 박경철 정덕기 최성익
실 장	백문길 이금철 김봉철
사무소장	이창덕 이관익
중앙위원	김일남 김지선 이택건 백문길 최길현 최문주 한용희
상무위원	김경남 전응렬 황봉국
참 사	문창건
과 장	김대봉 김명조 김정혁 김철수 이경철 이순희 이치현 임룡철 박영희 민금성

민족화해협의회의 입장은 고문헌 교류전과 같은 사업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연구와 조사를 위한 실무적 차원의 협력 기관과 연구진은 별도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내의 고문헌 연구 및 소장 예상기관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내 주요 협력 예상 기관 및 실무자 현황>82)

기 관	담당 부서	담당 자	비 고
내각-문화성	문화보존지도국	국장 김석환 부국장 이의하 등	박물관 및 천연기념물지도처,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국
	문화보존연구소	소장 면룡문	
내각-내각사무국	문화보존관리국	처장 독고정철	
시도군인민위원회	문화국	부국장 정근섭	문화보존처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소장 이재선	고구려연구실
	민족고전연구소	소장 김승필	
	언어학연구소	소장 문영호	고문 김병계
	역사연구소	소장 조희승	부소장 김민
	철학연구소	소장 전하철	부소장 이상훈 박승덕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부장 정치건	총장 성자립/ 조선사강좌
	조선어문학부	학부장 이준하	민족고전학강좌, 언어학강좌 등
	출판사	부주필 김영진	
	과학도서관	관장 김한표	
인민대학습당	과학연구봉사실	실장 신재선	총장 최희정, 기증도서편성실
고 려 박 물 관		관장 이경순	
신 천 박 물 관		관장 김병호	
조선민속박물관		관장 안순철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관장 김승현	부관장 송순탁 장건영 김길현
중 앙 도 서 관		관장 함진숙	강원도, 개성시, 평안남도개천시, 평안북도, 함경남도도서관

실무접촉을 위한 장소로는 북측의 평양이나 남측의 서울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로는 양측의 중앙박물관이나 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과 같은 곳을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 차원에서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에 앞서 예비 접촉은 개성과 같은 남북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81) 통일부, 『2006-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 2006.12. 429쪽.

82) 통일부, 『2006-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 2006.12.

다. 국립국어원의 남북실무접촉도 개성 봉동관에서 개최되었다.

### (3) 고문헌현황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해방 후 남과 북은 개별적으로 문화재 보호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문헌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상호간의 정보교환의 전례가 없음으로 인해 본 연구를 위한 상호간의 공개적인 자료교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고문헌자료의 소장처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간행된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고문헌자료의 수집과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sup>83)</sup>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남측의 고문헌자료 현황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내 간행자료가 이미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북측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협의하여 협상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목록에 대한 판권구입, 필름 구입 등과 같은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접촉 과정에서 양측에서 간행된 자료의 목록을 교환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양측의 고문헌 소장·관리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남측의 고문헌 자료 간행과 소장처 현황,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북측의 현황도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단편적인 가시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자료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963년에는 과학원 고전연구소에서 『조선 고전 해제』에 수록하는 문헌들을 제안하였다.<sup>84)</sup> 이들 자료 중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겠으나 필사 유일본으로 추정 가능한 사료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sup>85)</sup>

檢案, 穀物便考, 經亂日記, 貢物定案, 軍門要覽, 軍弊釐正節目, 祈雨祈請祭謄錄, 金海兵書, 關北營衙軍務事蹟, 單方類聚, 端川府事例, 端川府節目, 痘兒神方, 大丘事例, 晉州樵軍作變謄錄, 徵族救弊節目, 天變抄出謄錄, 淸圭博物誌, 通引救弊節目, 鄉廳各庫更張節目, 鄉憲, 玄股山日記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단편적인 자료로는 남한소재의 북한관련 고문서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현황정리는 이미 수행된 바가 있으며,<sup>86)</sup> 도판 자료로서 상징적으로

83) 허원영, 「북한의 조선시대사 연구현황과 고문헌자료 협력방안」 『공정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84) 「과학원 고전 연구소 ‘조선 고전 해제’수록 문헌 목록(초안)」 『역사과학』 1963-4, 1963.

85) 이들 중 「진주초근작변등록」은 자료가 소개되기도 하였다.(박시형·홍희유·김석형공저, 『봉건 지배계급에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 이조편, 과학원출판사, 1960.) 이들 자료는 이후 간행된 『조선고전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과학기술분야를 수록하였기 때문이다.(『조선고전해제』 1,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86) 권내현, 「고종세 북한지역 관련자료 조사 및 해제」 『북한의 한국사 연구동향(4)』, 국사편찬위원회, 2004.

제공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780년 경 함경도 문천군 관아의 인적·물적 기록인 <<官物目錄>>을 비롯한 문천군 관아기록이 있다.<sup>87)</sup>

#### (4) 남북 고문헌학술교류 협의회 개최

남북 고문헌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한 접촉 과정에서 목록과 출판물에 대한 표면적인 현황에 대한 상호 교환에서 나아가 보다 다양한 자료정보의 교환논의도 필요하다. 컬러 및 흑백 사진 도판에 대한 협조도 모색할 수 있다.

북한내의 고문헌 유물대장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1970년대 초에 ‘역사유적대장(역사유물대장)’을 작성하였다. 역사유적대장에는 역사유적등록표, 유적보존관리정형, 건물실태, 유적보존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거기에는 문화유적의 역사적래력과 그 구조적특성, 역사유적의 고증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한 사진까지 첨부하였다.<sup>88)</sup>

현재까지의 간행물이 정리된다면 지속적인 접촉을 위해 앞으로 간행되는 자료의 상호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실무접촉을 통한 상호 의견교환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남북의 고문헌 정책, 소장처 현황, 연구실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칭 ‘남북 고문헌학술교류 협의회’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향후의 사업 방향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제1단계에서 수행한 성과물, 즉 자료소장처 및 간행자료 목록 등과 관련된 결과물을 협의회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의 특정장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 고문헌 조사연구의 현황과 관련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2) 2단계 : 자료교환 및 교류전의 개최

### (1) 자료도판의 확보와 자료집의 간행

단순한 목록의 교환을 위한 1단계에서 진전된 단계이다. 도판 및 원자료의 교환을 위한 협의회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고문서의 경우 일찍이 사회과학원 등을 주축으로 자료집을 간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집이 원문을 영인하였는지, 아니면 정서한 자료인지, 번역한 자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본 단계에서는 원문 이미지의 확보가 목적이다.

북한에서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 다량의 고문서가 수집·정리된 사실이 있다. 이들 자료 중 전체를 자료집으로 출간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일성종

87)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 『春川 南陽洪氏 古文書·古書』, 2007. 88-97쪽.

위의 자료 외에도 『고문서집성』 등 국내 간행자료에 대수의 자료가 있다. 자세한 목록은 부록의 자료를 참고바람.

88) 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과학논문집』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25쪽.

합대학 도서관 등지에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의 경우에는 출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서의 경우에 북한에서 1960년대 이후 복간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복간자료를 입수하여 유일본의 경우 남한에서 다시 간행할 수 있다. 1단계 사업의 결과 확보된 목록을 통해 확인된 유일본 자료에 대해서는 원문 이미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북한내에서 출간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들 자료를 남한에서 다시 복간할 필요가 있다. 자료집 복간과 관련하여 북한내의 출판기구를 통해 판권을 획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미 간행된 자료 중 절판본일 경우 복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에서의 출판은 정무원 산하 출판총국에서 맡고 있다.<sup>89)</sup> 출판물의 성격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예출판사 등이 대표적인 출판사이다.<sup>90)</sup> 과학백과사전출판사의 경우 사장겸주필이 김중협, 부사장이 김용하, 김운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1)</sup> 출판에 있어 새로운 자료집의 경우 남과 북이 공동으로 출간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상응하여 남한내에서 간행된 고문서자료와 주요 고서 자료에 대한 현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측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즉 자료의 필요성을 평가 절하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라도 판권의 구입이나 필름, 이미지에 대한 구입으로 대처할 수 있다.

출간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고서 및 고문서에 대한 도판자료 협조를 논의한다. 마이크로 필름자료에 대한 협조 보다는 디지털 컬러이미지, 혹은 컬러슬라이드 필름 형태의 자료를 제공받아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촬영이나 디지털 이미지의 촬영의 경우 장비와 설비의 부족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들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로 인해 디지털 촬영장비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마이크로 필름 형태, 혹은 컬러 필름을 통한 협조가 가능하다.

## (2) 주제별 교류전 개최

교류전은 단순한 자료의 교환전시가 아니라 남북 실무자간의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와 협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교류전에 있어 참고할 조항이 있다. 북한의 문화유물 보호법에는 '역사유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역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정무원(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92)</sup> 규정하고 있다.

89) 윤재근·이상호·박상천 共著, 「북한의 출판현황」『북한의 문화정보』I, 고려원, 70쪽.  
현재 내각의 출판지도총국이다.

90) 윤재근·이상호·박상천 共著, 「북한의 출판현황」『북한의 문화정보』I, 고려원, 70쪽.81-91쪽.

91) 통일부, 『2006-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 2006.12. 331쪽.

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사회과학출판사, 1995. 제4장 제34조.

1980년대까지 남북간에 문화유적 분야 교류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남한은 자료교환·전시회, 북한은 공동연구·공동예술단 구성을 제안 하였다.<sup>93)</sup> 당시 남한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의도를 우려하면서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상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남북 교류전의 성과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중앙력사 박물관과의 교류전을 추진하여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2006.6.13-8.16)'을 개최하였다.<sup>94)</sup> 본 전시회에서도 고고·역사유적과 유물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전적, 고문서는 소개되지 못하였다.

이미 교류전을 실시한 바 있고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급된 부분이므로 고문헌과 관련한 교류전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이를 위한 북측의 협력 창구는 민족화해협의회가 될 것이다. 전시주제와 방향에 따라서는 북측의 실무기관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1단계에서 접촉한 북측실무자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류전에 필요한 자료는 1단계를 통해 확보된 북측 자료의 목록과 자료집의 도판을 참고로 한다. 다만 1단계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거나, 혹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중간단계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전시주제를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전시주제는 자료별로 고문서, 고서 특별전, 혹은 한글고문헌 특별전을 기획할 수 있다.<sup>95)</sup> 뿐만 아니라 1단계의 협의 진행에 따라 북측 소장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을 생각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사회과학원' 소장 고문헌 특별전 등과 같은 사례가 될 것이다.

남측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 소장처인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비롯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또한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주제별, 혹은 소장기관별로 교환전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남측자료의 북측 교환전을 통해 자료 이동과 관련한 상호의 입장을 고려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험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교류전에는 실물자료의 접촉과 전시·연구가 필요하다. 서지학자, 보전처리 전문가, 박물관 유물관리 전문가 등의 연대가 필요하다. 유물의 연구뿐만 아니라 유물관리와 관련한 남북 상호간의 교류와 접촉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93) 楊昌錫,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北韓의 文化財保存實態 및 交流方案』, 國土統一院, 1984. 88-90쪽.

94)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2006.; 오영찬, 「남북 문화제 교류전의 사례연구」 『공청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2007년 남북정상회담당시 10월 3일 영부인 권양숙 여사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이후 북측 관계자의 방한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면서 교류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남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측에서도 과학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자료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2007.5.15일 자유아시아 방송)

95) 황문환, 「북한지역의 한글 고문헌 조사방향」 『공청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순회공연도 필요하다. 紙類 유물의 경우 여타 도자기, 철제 유물과 달리 화재와 같은 극한 상황이 아닐 경우 훼손이 잘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복원도 일정부분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지역과 공간에서의 단회성 전시 보다는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일정기간의 순회전시를 고려함으로써 남북 문화교류에 대한 홍보는 물론 전적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할 수 있다.

남북 고문헌자료를 주제로 한 해외 공동 전시회 개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남북문화교류의 진전 상황을 보여준은 물론 기록문화유산과 관련한 문화적 저력과 전통성을 홍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시회를 판문점에서 개최함으로써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판문점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측에서는 남측의 주요자료에 대한 남측 시각에서의 자료 선별·전시·해설을 수행한다. 북측에서는 북측 입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자료의 공개와 전시뿐만 아니라 고문헌자료에 대한 상호 인식과 연구의 방향의 차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환전과 동시에 전시자료와 관련한 연구발표회도 단발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공동 세미나로 발전 가능하며, 주제와 성과보다는 세미나자체에 무게를 둔다. 세미나의 주제는 북측자료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함은 물론 남측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3) 중요자료 복간 및 복제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집의 복간 뿐만 아니라 중요 고서로서 아직 간행되지 못한 자료는 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판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료집의 간행을 협의하는 연장선상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출판도 고려할 수 있다. 고문서의 경우도 임란이전의 자료, 혹은 특수자료에 대해 복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복간 및 복제는 북한내에서 기 간행한 자료를 남한에서 간행하거나, 절판된 자료를 남한에서 복간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자료의 복간과 복제에 있어서도 남한내 주요 자료에 대해 복간 복제하는 것은 상호 협의를 통해 북측자료를 제공받는 방향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원전자료에 대한 고차원적인 도판과 아울러 직접 실물을 접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교류대상 자료를 우선적으로 복제 및 복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향이다. 교류전은 일시적인 행사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료의 복간과 복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복간 및 복제 자료는 학술적 연구는 물론 박물관내 전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북한내의 도판촬영과 관련한 기술적인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 3) 3단계 : 공동연구 및 상시협력체계 구축

## (1) 주제별 공동연구 정례화

1단계와 2단계에서의 학술대회는 단편적인 자료, 혹은 전시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엽적 공동연구이다. 3단계에서는 남북 상호간 전체적인 자료의 윤곽이 드러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료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과 북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환대상 자료에 대한 연구가 아니다.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대회를 통해 함께 소통함은 물론 접촉과 교류의 빈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하나의 자료에 대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기자료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현은산일기』는 1558-1600년까지 43년간 매일 기록한 일기이다. 저자는 현전복은 1521년 생으로 80세 이상 생존하였으며, 황해도 연안에 거주한 인물이라고 한다.<sup>96)</sup> 남한 내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일기자료가 간행된 바,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남북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방향에 있어서의 상호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서를 주제로 한 서지학적 접근과 역사학분야, 혹은 인접학문과의 학제간 연구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sup>97)</sup>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 북한에서는 고문서학적인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에도 관찬사료를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해유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관찬사료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sup>98)</sup> 고문서는 검토 대상에 넣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향약에 대한 언급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99)</sup>

남과 북에서 개별적으로 교환받은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고문서의 분류 및 용어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북한의 연구논문에 나타나는 고문서 용어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인공물권매매증서(매매문서), 첩문, 상속문건, 본문기, 소지<sup>100)</sup> 공물권매매문건,<sup>101)</sup> 토지문서,<sup>102)</sup> 가옥문서, 전계문서, 유서, 립의, 狀啓, 牒呈, 關字, 甘

96) 최령, 「『현은산일기』의 사료적가치에 대하여」 『역사과학』 20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7.

97) 옥영정, 「북한 고서 자료 및 연구현황」 『공청회-남북 고문헌자료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기초연구』,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국어원 공동.

98) 송현원, 「리조시기 해유법에 대하여」 『역사과학』 18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99) 리명철, 「리조시기 ‘향약’에 대한 간단한 고찰」 『역사과학』 18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100) 김선호, 「고문서를 통하여본 공인대방의 구조와 기능」 『역사과학』 118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김선호, 「리조봉건말기 공인제도에 관한 연구」 『역사과학논문집』 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101) 홍희유, 「17세기이후 형성된 공인제도에 대하여」 『역사과학』 11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2

102) 장청옥, 「17-18세기 서민지주의 장성에 의한 지배계급신분층의 변화」 『역사과학』 119

結, 招辭, 토지문서, 노비매매문서,<sup>103)</sup> 토지방매문건<sup>104)</sup>

북한에서 간행한 고문서 자료를 확보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문서명칭과 자료의 분류방안에 대한 실태가 나타날 것이다.

남북 공동의 학술대회를 추진할 수 있다. 역사학대회의 경우 연구 방향을 비정치적으로 제한하고 고문헌자료의 소개를 주제로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남북 고문헌관련 연구자 대회(가칭)와 같은 별도의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정례적인 학술교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대회의 장소는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국제학술회의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기 연구발표회를 통해 동일 주제를 통한 정례연구 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다. 공동관심사와 관련한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남북 공동의 다각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주제는 고문헌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히 남북 공동의 '학회'를 조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소의 설치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학술지의 간행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2) 상시 협력체계를 통한 인적 교류

연구자의 상호교환 체제 확립을 통해 연구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 상주하면서 교수활동을 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08년 4월 개교 예정인 평양과기대에서는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이 상주하면서 교수활동 할 계획에 있다. 현재 평양과기대와 교류 협력을 체결한 7개 대학 소속의 교수 10여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문헌과 관련한 자료집, 목록 등에 대한 전면적인 교환과 교류전을 통해 일정부분 남북의 자료전모가 파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연구를 위해 원본자료의 열람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의 고문헌 소장처에 상호 연구자를 파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 교류의 지원에 있어서 연구 분야는 과제성 연구를 비롯하여 강의지원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교류는 이미 이전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관기관 설정을 통한 단선적인 학술적 목적의 인적교류를 추진한다. 향후 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남북의 고문헌 소장기관간의 파견교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조직된 남북 고문헌 협의체를 통해 그 경로를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함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오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 (3) 현장답사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103) 홍기문, 『리두연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출판사, 1957. 357-416쪽.

104) 허중호, 『조선토지제도발달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고문헌 조사·연구와 관련하여 인적인 교류가 증대하게 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방문 등과 같이 비약적인 진전이 이루어 지게 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의 고문헌 조사문제는 학술적 관점에서의 인적교류와는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고문헌자료의 경우, 특히 수집자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료의 전래경위는 물론 소장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고문서는 원전자료로서 문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일찍이 문헌 기록카드를 통해 자료를 조사·수집한 배경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으며, 북한의 협조를 통해 이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내 문화유적에 대한 현황에는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관련한 것은 김응서장군의 생가, 그리고 서원·향교의 사례에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른바 ‘집성촌’ 북한일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음에도<sup>105)</sup> 종택, 서당, 정자, 고택 등과 같은 유적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양반층, 지주층이 월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남한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성촌을 중심으로 고문헌자료가 소장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에서 실시한 일제 자료조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북한내에서 고문헌자료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소장처의 경우 집성촌과 관련한 건축적 유적지가 남아 있다면 현장을 답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정자, 종택 등의 각종 편액에 대한 기록물로 확보 할 수 있겠다.

북한지역내 현존하고 있는 향교 현황은 112곳이며 서원은 74개처 이다. 이들 향교와 서원과 유교관련 유적이거나 현재 소개된 문화유적 도판에 의하면 비교적 보존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 월남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소유보다 문중소유 자료로 인해 북한내에 잔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에서의 자료 조사과정에서 고문서에 대한 관심에서 접근하였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조사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원과 향교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통해 소장처와 관련한 정보는 물론 편액 등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사찰의 경우도 함북 명천군 보촌리에 소재한 국보유적 제120호 開心寺에는 팔만대장경과 경판이 소장되어 있다.<sup>106)</sup> 고서자료에 대해서도 고문서와 같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답사는 남한내 소장처에 대해서도 북한에 공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5) 朝鮮總督府, 『朝鮮の聚落-後篇』, 1935. 대표적인 동족부락으로 황해도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황해도	紫達洞·松靑洞·松城洞·慕禮洞(이상延白郡), 文修洞·栗洞(金川郡), 竹洞·草灘洞(新溪郡), 大內洞(甕津郡), 芳竹洞(松禾郡), 栗洞·上院堂洞(殷栗郡), 漁隱洞·長洞·豊洞(安岳郡), 大閑里(鳳山郡)	16개처
-----	--	------

평안도의 경우는 평안남도 19개처, 평안북도 16개처이다. 함경남도는 17개처, 함경북도 12개처이다.

106)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2006. 164쪽.

#### (4) 남북 고문헌 포털의 운영

남북 고문헌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아울러 학자의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고문헌자료를 소개할 경로가 필요하다. 자료집 형태의 도서출판, 디지털 출판으로는 그 이용과 공개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역사정보 통합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의 북한고문헌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포털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상세한 북한 지역 정보를 담은 '21세기 디지털북한여지승람' 인터넷 서비스를 2007년 12월 19일부터 시작했다.<sup>107)</sup> 이 사이트에는 북한의 행정구역 관련정보 4만2908건, 지도 235개, 국보 170개, 준국보 927건, 유물·유적 219건, 천연기념물 418종 관련정보가 들어 있다.

한양대는 통일부, 김대중도서관 등과 공동으로 남북도서관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은<sup>108)</sup> 2007년 5월 중으로 김일성대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자료 중 디지털화한 자료 4,000점을 넘겨받아 이르면 9월 '김일성대 도서관 전용검색사이트'를 열고 일반인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남한의 고문헌자료에 대한 포털정보는 현행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소장 고문헌자료에 대한 포털의 경우 주 이용고객을 남한내 학술연구자 및 일반으로 설정할 경우 본 사업을 남한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진행방향은 '디지털 북한여지승람'의 사례에서와 같이 관련이미지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협조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6. 맺음말

북한에서는 해방후부터 체계적으로 고문헌에 대한 조사 및 정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집자료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을 설정하고 자료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집적하였다. 또한 이들 자료의 연구는 사회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등 관련학자들이 적극활용하였다.

북한에서의 고문헌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주춤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북한 내부의 체제단속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후의 연구성과물에서는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고서와 관련해서도 서지학적 연구 내지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북한에는 다량의 고문헌이 소장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소장처는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인민대학습당, 중앙도서관 등이다.

남북 고문헌 조사 및 연구사업을 위해서는 상호 자료를 교환한다는 입장에서 단계

107) <한겨레정치>2007.11.19.월.; [www.cybernk.net](http://www.cybernk.net)(2007.12월 현재)

108) <http://library.hanyang.ac.kr/paiknam/index.jsp>(2007.12월 현재)

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사업기반의 구축과 상호신뢰 형성, 2단계 자료교환 및 교류전의 개최, 3단계 공동연구 및 상시협력체계 구축이다.

각 단계별로 낮은 단위의 성과목표를 달성 할 수 있으며, 교류 내용에 따른 지속적인 학술적인 검토작업이 병행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전면적인 자료 공개가 가능하며 그 시행방안으로 '북한 고문헌 포털'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종합 부분 ·



---

본  
부  
의  
이  
의





■ 사회자 :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자 :

- 권내현(고려대학교), 이근용(국민대학교), 이문현(국립민속박물관),  
이승철(청주고인쇄박물관), 김문오·정희창(국립국어원), 발표자 전원

## < 지 정 토 론 >

### Q. 토론 1 : 토론자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권내현 교수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권내현입니다. 지금 허원영 선생님 발표문을 중심으로 제가 토론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소감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허원영 선생님께서 워낙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가 남북 고문헌 자료 협력 방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형식적인 교류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자주 북한을 가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에서 기획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에 관여를 해서 그 부분하고 관련 시켜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역사 부분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수많은 문화교류 및 민간교류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사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근대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주로 항일운동이라든지 혹은 일제침략 수탈사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와서야 이제 고대사 부분 즉 고구려 고분군에 관한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개성에서 만월대 발굴 사업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나 고대사를 제외하고서 실제 중세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남북한의 교류 사업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북쪽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대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문헌 자료 협력방안 일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중세사의 교류 사업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장기간 동안 교류가 이루어질 텐데 장기 학술교류란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의 의미

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허원영 선생님께서 발표한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자면 허 선생님도 발표에서 나와 있지만 주로 북쪽에서 조선시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당색의 문제, 군사적으로 임진왜란 관련 부분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발생 문제입니다. 사회사에서는 신분문제, 사상사에서는 실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심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제대로 출현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문헌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에서 고구려 고분군이라든지 개성 만월대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남북 역사 용어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용어 사전에 있어서도 북쪽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문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쪽을 우리의 요구를 북쪽에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쪽 관계자들을 추동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측에서는 충분한 계기도 있고 배경도 있고 욕구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북쪽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더군다나 허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듯이 최근에 조선시대 연구가 침체되어 있고 그것도 특정 주제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른바 북쪽에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제 사실은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고문헌이 아니고 사회과학원에 소장되어 있는 북측 문헌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쪽 자료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고 북쪽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해주고 남측에 없는 자료를 우리가 가져와서 출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시했었는데 북쪽에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할 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짐작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을 한 바로는 북쪽에서 특히 고문헌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원이 다르지만 사회과학원에서 근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역사 용어 사전도 1919년으로 끊어져있고 1920년대 이후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원에 있는 문서 가운데에서 특히 1920년대 이후에 문서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검열 절차가 존재하고 그래서 북쪽에서 검열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문헌 사업 같은 경우에 검열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조금 다소는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남쪽학자들이 이 문서를 봐야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 필요에 따라서는 남쪽으로 반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북쪽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역시 민화협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도 교류를 한지 6~7년이 다 되어 가지만 학자들 간에 서로 맞대서 서로 며칠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학문적인 교류를 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

서 창구가 민화협인데 민화협은 북쪽의 관료기구이기 때문에 그 쪽의 이해를 일정부분 충족을 시켜야한다. 그것은 경제적인 지원도 있겠고 혹은 명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지금 시점에서 고문헌 자료 조사와 정리가 필요한 지를 그쪽에 설득할 수 있는 그 쪽 관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그리고 명분, 실리 이것이 일단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단계에 학자들과의 교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학자들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북쪽학자들은 민화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먼저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허원영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을 하셨으면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학원에 역사연구소 소장에 조희성 선생이고, 중세사 실장에 장창욱이라고 신분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는 고문헌 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하더라도 북쪽 주민들이 잘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북쪽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협력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표문에서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조사되어 있는 현황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사회과학원뿐만 아니라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해서 어떤 자료들이 과연 북쪽에서 조사를 마쳤는가? 이 부분에 대한 파악부터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사실은 중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 지속적인 학술교류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금방 말했듯이 북쪽의 관료기구와 역사학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이 저로서는 제일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 답변 1 : 발표자 허원영 선생

솔직히 지금 권내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구성원들끼리 합의 의견을 교환한 것은 처음에는 일단 실무접촉에 의한 접근이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이게 물론 학술활동이고 학문분야와 역사와 어문과 관련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그런 학술적인 의견을 배제한 채 실무,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이 우선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둘째는 그 명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국립국어원과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와 관련된 문헌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상당히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실학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장각에서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읍지 같은 부분들도 북한에서 상당히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 교환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어떤 학술적인 의논을 배제한 채 순수 기술적 차원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교류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선생님의 질문을 계속 받아가지고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 Q. 토론 2 : 토론자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근용 교수

황문환 선생님의 발표도 그렇고 옥영정 선생님도 그러한 지적 하셨는데 남한지역의 조사 성과, 방법을 북한 지역의 고문헌 조사에서도 이런 성과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들은 상당히 타당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오늘 발표 내용들이 대부분이 북한 지역의 고문헌들이 주로 역사와 이러한 쪽에 관계된 문헌이고 대체로 대부분이 한문으로 된 문헌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국어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어자료를 생각한다면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역사자료들 한문으로 된 자료 중에서 특별히 한글 자료들만 어떻게 이렇게 따로 조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확실하지 않지만 주로 훈민정음 이후에 간행된 간본자료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간행되었고 그리고 대부분 서울 경기지방에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본자료들 뿐만 아니라 불경언해와 같은 자료들이 북한쪽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북한지역에 남아있는 한글자료들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제공하는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지방의 사람들이 쓴 언간들, 간찰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것들도 이러한 언간에 대한 내용이 잘 지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언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방의 방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나 또는 그 지방의 방언 자료들을 표현하는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접경지역에서 통역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옛날에 『박통사』, 『노걸대』 같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중국문헌과 어떤 자료들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고문헌조사사업하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한글문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언간 같은 것들은 실제로 아마 북한에서도 크게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찰들 여러 가지 인간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언해하고 풀이한 자료들을 내놓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집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A. 답변 2 : 발표자 황문환 선생

보통 북한 지역에 소재한 한글 고문헌 중에 남한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러면서도 국어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가치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가? 선뜻 물으면 대답할만한 자료가 얼핏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한국 고문헌의 간본자료에서 널리 알려진, 가치 있는 자료로 알려진 것이 (북한에서는) 드문 상태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 지역에 소재한 한글 고문헌으로 예를 들어 병서(兵書)라든지 지금 언급하신 역학서(譯學書) 간본자료 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남한지역에는 볼 수 없는 자료로써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문헌들의 가치가 과연 전체 간본문헌 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한 가치를 갖는 것이냐 이런걸 아마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100대 한글 문헌 남한자료의 조사사업에서도 간본자료 위주로 많이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한글자료 낱장 문서류라든지 한글 고문서류 특히 그 사람들의 생활사가 녹아있는 한글 편지자료들은 북한 지역에도 상당수가 이진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기관이나 단체를 떠나서 각 집안이라든지 이런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글 고문서만 또는 한글 편지만 따로 이렇게 조사하기는 어렵고 고문서 사업이 여러 집안의 것들이 기관이나 단체 또 옮겨 갔다고 하니까 고문서 이동 경로를 살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문서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본자료에서 특별한 것이 자료를 얘기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한글 고문서 한글 간찰 자료를 통해서 그쪽에도 맞는 인민들의 생활상이 담겨있는 자료로서는 그 지역에서 독자적인 여러 가지 면모들이 담겨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린 것 중에는 조사 사업에 국한을 했지만 조사하는 것도 이게 무엇을 위한 조사인 것이냐가 전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경우에는 여러 자료들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보존해서 북한지역의 자료들이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보존을 위한 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 합쳐서 남북과 해외에까지도 또는 다른 외국에까지도 보급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조사를 시행할 것이냐 조사의 목적 아까 권내현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게 와 닿습니다만 우리 쪽에서의 목적이 그 쪽 관료라든가 학자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연 잘 맞아 떨어질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 Q. 토론 3 : 토론자 국립민속박물관 이문현 선생

북한 고문서의 자료 현황과 그 고문서를 통한 연구 현황에 대한 전경목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토론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선생님의 발표와 여러 발표에서 발표를 듣고 생각이 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목 선생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북한관련 고문서 특히 북한 소재의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서 거의 관심 밖이었고 시급히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부분은 고문서에 관한 것이지만 오늘 여러 발표자 분들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인 사항은 북한에서의 상황을 지금 너무나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마 장기적, 체계적인 계획으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오늘의 공청회가 그 첫 시작이 되어서 그 하루 속히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요청을 받고 저 자신도 너무나 북한의 고문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자료가 소개되어 있고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봤지만 정말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허종호의 연구결과인 조선 봉건 말기 소작제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앙 역사박물관이나 아니면 사회과학원 중앙 도서관 중에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고 혹시 이게 웹상에 어떤 자료가 있을까 검색을 해 봤는데 어느 기관에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앞서 토론을 해주신 분들과 접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목 선생님께서 그 연구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셨는데요. 1957년과 1965년에 성과들이었습니다. 그 모두 지금으로 따지자면 시간적인 거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60년대 이후 후반 이후에 연구 성과가 특히 장수하고 있고 또 80년대 이후에는 고문헌과 관련된 성과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실제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발표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정과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우리가 북한의 고문서에 대해 정리하고 연구를 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협력 사업까지도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또 아마 북한 지역의 고문서에 대해서 앞으로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실 곳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문서의 수집과 정리 연구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자께서 발표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역사 연구소 중세사 연구실 소장의 자료집이라든가 단편적으로 자료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자료

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다른 분의 발표가 있었기는 했지만 고문서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이나 또 전경목 선생님의 개인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고문서 공부를 하면서 지역에 관한 자료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가문이나 개인의 소장 자료 보다는 아마도 소규모라도 지역 전체에 사람들과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생활모습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초기의 고문서 수집과정이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관련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하루빨리 만나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A. 답변 3 : 발표자 전경목 선생

여러 가지 지적과 충고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 학교가 20여년 동안 남한지역 고문서들을 가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즘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중 하나가 북한 지역이고 다른 하나가 해외지역인데 작년에 제가 이서행 선생님을 통해서 북한 쪽으로 계획서를 보내면서도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공부를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북한지역의 고문서들을 조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이쪽에서는 제법 저희과(고문헌)를 중심으로 해서 고문서를 조사 수집 정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북한쪽 지역 자료들을 좀 다시 수집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잘 챙겨서 더욱더 충실한 계획서를 세워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30~40년 전의 고문서 연구는 정말 굉장했는데 그 이후에 고문서 연구가 안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생각을 못했지만 짐작되는 것으로는 첫째 홍기문 선생님이나 그 밖의 선생님들이 이조실록 번역하는데 몰려있었기 때문에 다른 고문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조실록을 번역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력을 쏟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관심이 수령사나 고고학, 실학으로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문서에 대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에 홍기문과 같은 1세대가 빠져나가면서 후속세대가 충분히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서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급격히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문현 선생님처럼 똑같이 남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북한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는 남아 있는 고문서들이 가문 중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문서들이 없고 이근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령 중국하고 관계라든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문서들이 남아 있다든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쪽 관아 문서들이 남아 있다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의 연구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때 사회과학원이나 그런 곳에 파일로 되어 있으면 수집은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계획서를 충실히 세우고 그것이 실행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Q. 토론 4 : 토론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이승철 선생

저도 북한 전적 자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발표해 준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서로 공론화 되어 있는 모임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오늘 이런 공청회는 역사적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저는 북한 전적자료 조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만 너무 여러분께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피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북측이나 우리나라 또는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2년 전에만 이런 공청회가 열렸어도 직접 대북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전정보를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벌써 시작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북한 전적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름대로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계속 고인쇄 관련된 업무라던가 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타 우리나라라던가 해외에 있는 것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단지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 자료들 심지어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의 장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 자료가 몇 점정도 됩니까? 라고 계신 전문가들에게 여쭙어보면 보통 100만권 또는 150만권 주로 사회과학원이라든가 인민대학습당 또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들 중심으로 남한에 비추어서 그 동안에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정도 약 10여 차례 정도 접촉을 해보면서 직접 평양을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한번 했었고 또 그동안 서류로 제안한 또 문서로 받은 것을 따져보면 많아서 50만권에서 70만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북측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준 자료는 아닙니다. 회담을 하고 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현대화 사업이 일차완료가 되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의 일차 완료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과학 도서관에 전산설비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다 구축해 주었



습니다. 서버부터 시작해서 출입증 바코드 까지 2차 사업으로 기술교육을 시켜서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약 이백오십만권 정도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목록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콘텐츠를 공유하는 3차 사업으로다 확대되게 될텐데 2차 사업 말기에 김일성과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 자료에 대해서도 목록화와 해제를 저희 고인쇄박물관에서 주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또는 이후에서부터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 8만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진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제가 자료 제공을 못해주었지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저 혼자하는게 아니고 저와 같이 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든가 여러 기관과의 협조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민대학습당 같은 경우에는 약 비공식적이지만 12만에서 15만점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담당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관 상태는 여러분들이 아까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해줄려고 하는 것은 목록화 사업입니다. 목록화 사업과 해제를 동시에 진행하고 그 중에 남측에 없는 자료는 디지털라이징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반영구적으로 유산화해서 물려주자라는 취지에 그들도 공감할 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민대학습당이나 김일성종합대학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북한에 접촉하는 창구는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민간 차원의 교류는 거의 민화협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화협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당국자간의 이런 어떤 북핵문제 같은 것으로 상당히 대화가 단절이 되어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종합대학 현대화 사업이 2005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 당국자간의 회담이 상당히 경색된 국면이었는데도 그럼에도 거기에 필요한 20테라급의 스토리지(?)부터 시작해서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북한에 다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드러내 놓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되어서 그냥 소리소문 내지 않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화는 거의 안 되어 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손으로 쓰는 정도이고 그래서 고서조사를 하려면 그것을 전산화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것을 남측에 있는 인력이 가서 일일이 전부다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정기간 계속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 같은 것을 미리 구축을 해주고 저희가 그 방법을 교육 시켜서 저희는 가서 계속 체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같은 방법은 이미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하면서 남북경제문

화협력재단이라든가 한양대학교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두로 제안을 여러 번 문서상으로 다가 했었고 그것을 올 3월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적 자료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에서 순안공항까지 전세기를 이용해서 여러 당국자들과 같이 북한에 가서 제안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민화협에 부단장인 박상철 위원장이 특별히 북한 측의 참사를 불러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또 민족고전의 가치를 올바르게 새운다는 것은 통일 문제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북한 아래에 있는 참사들한테도 고인쇄박물관 사업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라고 구두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일력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그걸 삼개월정도 고민을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북한에 보내고 또 북한에서는 개성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해서 개성에서 8월에 만나서 세부 진전된 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그때 북측에서 요구가 인민대학습당을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달 정도에 평양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방북 스케줄을 잡고서 추진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시는 바람에 저희 일정이 미루어졌습니다.

12월 초에 인민대학습당에 가서 거기 대외협력부장 기증도서실장 벌써 북한측에서는 기증도서실에서 전담을 하겠끔 조직을 만들어 놓았고 그 밑에 담당 여직원까지 이렇게 배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이양문서 초안까지 교환을 받고 이제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이양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이양서 싸인 초안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팩스로 주고받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내년 3월에 북한 전적 자료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 고인쇄박물관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전문 워킹 그룹이 세미나, 워크숍을 평양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평양에 알렸고 북한에서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무자와 전문가가 가서 전적 조사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브리핑이라든가 토론을 하고 구체적인 보관 상태라든가 실태 같은 것을 파악하고 거기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실무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하고 접촉하는 문제는 거기까지 현재 진행중인 상태고요 오늘 공청회를 들으면서 느낀 소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진전 되서 나가려면 아까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라든가 또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인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느 한 기관이 혼자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나름대로의 접촉 시스템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하고 사전

교감이 있는 상태로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3월에 합의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공동 협약을 통해서 동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서 목록화와 해제작업이 진행이 되면 희귀 도서에 대한 디지털라이징은 컨텐츠진흥원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실무자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과학원의 접촉문제 같은 것들 보 관되어 있는 자료 같은 문제들은 북한이 저희와 만나는 민화협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개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인데 아무리 공식적인 실무회담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만찬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단지 아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통일부 계신 분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반대급부로다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다만 잘못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우회적으로 중국을 통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간에서 커미션으로라고 요구하는 북한사람들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북측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고 기분이 나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립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상당히 예민할 수 밖에 없고 그들과의 어떤 직접접촉을 통해서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그 어떤 것도 보상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기자재 정도는 남측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그것이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 그런데 액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것에 따지면 그 정도 비용은 남한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도서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갖다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기자재들을 갖추려면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런 것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A. 답변 4 : 사회자 심재우 선생

예 감사합니다. 이승철 선생님이 북한 자료 조사사업에 실무자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제 북한지역 고문헌의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고문서 조사 방안 이랄까 향후 사업추진 상에 유의점등을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 기초 연구가 확대 발전하는데 있어서 꼭 참고가 되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 Q. 토론 5 : 토론자 국립국어원 김문오 선생

저는 발표하신 분 중에 정수환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고문헌 조사 연구 사업에 단계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방법들을 물론 충분히 구성간의 합의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많은 고심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잘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 단계에서 상호 신뢰 구축을 하고 서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이서행 선생님이 대북 창구로써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상호 신뢰 구축에서 실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셨고 실무 접촉을 할 때 서로가 알맹이 있는 교환을 하려면 남은 있고 북은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북에 제공할 매력적인 목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북은 있고 남은 없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매력적인 목록인데 서로 매력적인 목록을 면밀하게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함께 만나야 되는데 작년까지 국어원이 접촉해서 얻는 바는 남이 먼저 목록을 가져와 봐라 그다음 북의 목록 주겠다는 이런 식이 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상호신뢰 구축해서 대등관계에서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또 접촉하는 것이 있고 남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좀더 집약적으로 그러나 모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위 분야로 나누어져서 고문서 부분 한글문헌 부분 또는 기타 관심사항 이렇게 해서 창구를 단일화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기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남북의 진정한 한국학의 발전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당위성에 공감하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무 기관으로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A. 답변 5 : 발표자 정수환 선생

김문오 선생님과 여러 번 만난 적도 있고 그 전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제가 김문오 선생님 말씀 중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국어원에서 북한측 인사를 만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실질적으로 국어원 측에서는 한글 고문헌 교류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접촉에서 북측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록이 뭐냐 가져와 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방금 김문오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남측에 있는 목록을 먼저 내 제공해 달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서를 세울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남측에서는 지금 고문서 고문헌 매우 중요하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지금 다양한 분야 다양한 경로에서 진행이 되는데 과연 북측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아까 권내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문헌 중요하다 고문서 연구하고 있으니 민족 동질성 문제 문화재적 측면에서 같이

해 보자고 제안을 했을 경우에, 북측에서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나 별 관심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상당히 다음 이야기가 진행 않는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문오 선생님께서 북측에서 남측 고문서 목록을 가져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게 대승적인 차원에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기가 어렵고 두 번째 말씀하신 외부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제가 지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삼단계라고 만들어 봤는데 신뢰구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신뢰구축이 5~10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를 추진하자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계속 대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다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외부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승철 선생님 말씀처럼 민화협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외부적 정치적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런 민적 교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일을 추진해 보면서 그때 닥치는 문제는 그때 해결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리의 고민이 아닌가 봅니다.

## Q. 토론 6 : 토론자 국립국어원 정희창 선생

저는 고문서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다고 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교류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거나 문화재적 가치를 드높이는 것인데 첫 번째 교류를 한다는 것은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서로 교류했던 전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과는 상당히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보여줄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고문서를 들고 와서 남쪽에 전시를 했을 때 과연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가령 뭐 한글 고문서를 예를 들어서 아주 특기할 만한 문서가 있겠느냐는 것이 의심스럽고, 실제로 황문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온당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문서 조사 사업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가 불투명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이 일단 분명해야 하는데 특히 북쪽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목적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류에 관해서는, 국어원에서 연초에 MBC 관계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문서 교류가 어떤 흥행성이 있겠느냐 MBC 관계자들 이야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학술적인 것으로 가야 할 텐데 이 학술적인 연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무엇을 찾을 것이냐, 가령 여

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에 창구도 단일화해야 하고요 정치적인 상황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국립국어원이나 사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겨레말큰사전'이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실무자들은 사전엔 아무 관심도 없고 남북 교류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느 실무 팀을 꾸려서 남쪽에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지난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지난한 일들이 남북 고문서를 교류한다는 학술적인 어떤 선의의 목적만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토론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정말 학술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라듯이 고문서의 교류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문화재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바랍니다.

## A. 답변 6 : 기초강연발표자 최진옥 선생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저한테 공이 넘어 왔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우선 저부터가 북한 고문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연구책임자를 맡긴 말아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꾸려 가야 될지에 대한 전망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뭐냐하면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년간 고문서 조사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에 소위 말해서 내공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면 뭔가 건질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 20년 전에 남한의 고문서 조사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무슨 구체적이고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간에 흩어져 있는 고문서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조금 갖다가 정리하고 목록도 만들고 간행도 해서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라도 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문서집성이라는 것을 87책을 냈습니다. 책으로 정리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필름들이 고서 고문서를 합해서 60만점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수준으로써 목록화하고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보면 탈초도 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한 계속한다고 해도 제 생전엔 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초기 단계에서 어설피고 미비하지만 한걸음한 걸음 뛰어나가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서 북한 고문서를 비롯한 고문헌 자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오늘 모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듣고 소중하게 지침으로 삼는다면 저희가 처음 고문서 연구를 했을 때에 치렀던 시행착오를 비교적 단축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계하신 분들을 이런 자리를 빌려서 모셨던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앞아 있으면서도 저희가 무모하게 시작을 했지만 조급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북한과의 교류 사업에 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경험을 들여다보고 각종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사실 이것은 의지대로 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더 되고 어느 정도의 교류가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라는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뭔가 청사진을 내놓기 어렵지만 그리고 또 저희 출연기관의 한 가지 제약점이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한다고 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해 나가려면 거쳐야 될 관문이 여럿이 있고 또 장애물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멋있는 그림을 그렸지만 막상 북한 실무 당국자 또는 대외협력 관련자들하고 부딪혔을 때 어떤 사태가 생길지 저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고 그러한 사태를 저희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현 단계로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계 각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물결을 탄다면 우리도 소박하지만서도 이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창 선생님이 우려해 주신 것 저도 들으면서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만, 전 절대로 첫술에 배부를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해 온 그런 것이 있는데 1~2년 내로 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과제에 끌어들이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저희 한중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사회 보신 분들을 비롯해서 오늘 발표해 준 허원영, 정수환, 황문환 선생님, 옥영정 선생님 다 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첫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게 씨앗이 되면 저는 아마 좋은 열매를 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련한 답은 못 드렸지만 이 정도로 답을 하겠습니다.

## < 자 유 토 론 >

### 사회자 : 심재우 선생

좀 외람되지만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 때 만에도 지금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북한 관련 서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불운시 되었습니다. 북한 역사학자 중에 김석형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을 구할 수 없어서 당시 제 선배들이 북한에서 한글로 쓴 것을 일본에서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몰래 복사해서 겉표지는 다른 것으로 살짝 입혀서 읽고 그랬던 것을 옆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2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고문헌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짧지만 저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섯 분 발표 토론을 다 마쳤는데요. 발표자나 토론자 중에 추가로 보충할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 Q. 질문 1 : 발표자 황문환 선생

이승철 선생님 좋은 경험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 목록을 제가 확인한 것만으로는 너무 소략하고 책 자체 실사를 하지 않으면 목록의 내용만으로 과연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목록화와 실사가 연결되고 있는지 아니면 실사가 지금 단계는 아직...

## A. 답변 1 : 토론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이승철 선생

북측으로부터 어떤 정보도 얻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책 제목 정도 간단하게 얻을 수 있을텐데. 아마 저희가 제공해준 조사서 양식으로다가 목록화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상당한 서지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의심스러운 것은 현재 과연 조사서를 주었다고 해서 북측에서 그것을 목록화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있냐고 생각해보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일단 내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 준다면 저희가 일단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북측과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된 전문가들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삼박사일 정도씩 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특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귀중본 같은 경우는 바로 스캔이라던가 디지털라이징 할 수 있도록 디비자료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북측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남측으로 넘어 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통제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한양대학교하고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에서 과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해주면서 서버의 운영시스템을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서버운영체제로다가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콘텐츠 구축이 되면 이쪽에서 똑같이 그걸 같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북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고인쇄박물관에서도 매년 고서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장서각에서도 계속 나오고 규장각에서도 계속 나오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책으로다 간행되어 있는 그런 고서 목록 같은 것을 미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교류 협정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제공해주면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관련기간에 협조를 같이 해서 매년 간행해서 배포해주는 그런



자료로 수집을 해서 북측에 전달해줄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Q. 질문 2 : 발표자 정수환 선생

이것을 하게 되면서 제가 가장 문제는 서로 요즘 좋은 말로 상호주의인데 우리가 먼저 줘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북한에서도 줄 수 있을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서버를 구축해준다는 것이 이런 물질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을 반대급부로 전해주고 반대급부로 데이터를 받는 다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서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해서 저희가 생각해서 순수한 학문적인 접근 이것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관심을 가진 것이 현금지원을 하다가 마찰이 생겼고 지금 같은 경우에 물질적인 지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굳이 그런 보상을 전제로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학술적인 접근을 했을 적에 학술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인지...

## A. 답변 2 : 토론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이승철 선생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급부보다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북측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는 측면이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현물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목록화라던가 인민대학습당에 있는 자료를 목록화를 하고 해제를 해주고 또는 그것을 전산으로 저장된 디지털라이징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담아 놓을 수 있는 기자재가 없으면 저희가 하는 작업이 시간적으로 그렇고 어떻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카피를 떼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카피를 뜨든 뭘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산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하고 저희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현재 사실 보관 실패라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하곤 했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은 서가에 정리가 다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것들은 창고에 방치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성상인일지 같은 것들이 낱장 문서 같은 것들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정말 회귀자료 같은 것들은 그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3차정도 마지막에는 수장 시설까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 Q. 질문 3 : 안승준 선생(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과 접촉을 해서 예비 조사 성격으로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

는데 이승철 선생님께 여쭙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고문헌을 조사한다 할 때 규장각도 있고 장서각도 있고 나름대로 국책기관으로써 기본적인 조사 국사편찬 위원회나 정부기록보존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고문헌 자료를 다른 말로 전적 조사 이런 말로 대체하는데 이런 과제를 진행하면서 국책기관끼리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저는 오랫동안 했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런 어떻게 진행된 과정인지 궁금하고 또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는 가져올 수 없고 그 사람들한테 말기는 방식이 사실상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십년 전에 접촉하기로 김일성대학에서 한문을 가르친 홍기문 선생님을 해서 실록 번역팀을 우연히 백두산에서 접촉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우리만큼이나 한문을 아는 세대 한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말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에게 정리를 맡긴다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 독해라는 것이 단기간의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고문헌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과정 자체에서 북한 분들이 그 필요성과 공감대를 인식해야 합니다. 충분히 그분들에게 고문헌 자료가 더 필요한 시점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보편적인 세계로 온다면 우리가 경제 관계에서 개혁개방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학술 세계에서도 객관적인 그런 학문 영역으로 아까 ‘수령사’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비보편적이거나 우리가 공감대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연구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 가는 학문 영역 부분으로 올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러나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견지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년이 걸리든 이십 년이 걸리든 오십년이 걸리든 그런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은 그런 한양대라든지 개인적인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해도 되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책기관들은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 Q. 질문 4 : 방청석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허철희 교수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해서 많이 배웠고 실제 고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2006년 7월 15일에 1398년 정사공신녹권을 제가 발굴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장단 대강면 우금리가 저희들 선산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상우당 허종 할아버지의 종손이 사셨습니다. 허사길 씨라고 그래서 국회도서관에서 한국고서종합목록에 보면 해방 전에 나왔던 자료들에 대한 목록이 소상하게 적혀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강면 우금리에 사셨던 분의 유물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죽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안승준 선생님이 사회를 하시면서 이야기 하시는 것 중에서 개성 근처

에 주로 많은 종손들이 살았는데 지금 현재 북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아쉽지만 그 유물들에 대한 보존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문헌자료조사를 해서 이렇게 남한에 정보가 제공된다면 후손으로서의 의미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실제 고문헌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국립국어원과 더불어서 같이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긍정적 가치를 많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발표자들은 긍정적 가치에 대한 것들이 강하게 되어 있고 토론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료조사에 대한 것을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한이 북한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다거나 너무 남한의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 북한도 자존심을 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묘향산 근처에 있는 보현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헌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느낀 것은 실제 북한에서는 문화재가 남한처럼 매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고문헌이 해방 이전에 거기 잘 보존된 것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가 되어다 보니까 많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실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보존된 상태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북한에서 연구자들이 거기에서 심취해서 깊이 연구하는 경향은 남한보다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헌자료를 연구하려면 북한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지원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뭔가 베풀고 난 뒤에 뭔가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문헌 자료의 긍정적 가치를 먼저 산출하자 그리고 실제 연구를 할 때 국책연구기관 또 오늘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오신 이승철 선생님이 현지에 가서 직접 느낀 소감을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되는 내용들이 현지에 가서 느끼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빨리 앞당겨져서 북한에 직접 가서 고문헌의 실재를 직접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헌조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오랜 시간동안 해야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A. 답변 3 : 토론자 청주고인쇄박물관 이승철 선생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어찌어찌 열정을 갖게 되어 여러분보다 좀더 많은 정보를 일찍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월부터 교류가 이루어

지고 할텐데.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얻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그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심재우 선생님 정리 멘트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북한 고문헌의 현황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가져와서 전시했던 사례에 대한 소개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남북 문화재 및 고문헌 교류사업의 방향이나 전망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 기초연구가 향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